

기본소득

2020 봄

#004

The background of the cover is a photograph of several hands reaching up from a dense field of small white daisies with yellow centers. The hands are positioned in a way that they appear to be supporting or reaching towards the center of the frame. The title 'Basic Income Magazine Issue No. 4' is overlaid in a large, white, sans-serif font.

Basic Income Magazine Issue No. 4

| 발행일: 2020년 4월 20일 |

| 발행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 편집위원장: 백승호 |

| 편집위원: 김교성, 류보선, 서정희, 이관형, 이건민, 이지은 |

| 편집디자인: 사과나무 |

| <https://basicincomekorea.org> |

| basicincomekorea@gmail.com |

BIK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CONTENTS

머리글	04	기본소득, 계층화의 정치를 연대의 정치로 _ 백승호
이 계절의 이슈 1 : 재난 기본소득	06 19	[좌담] 재난 기본소득의 의미와 우리가 할 일 _ 안효상, 용혜인, 오준호, 백승호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_ 안효상
이 계절의 이슈 2 : 청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본소득	24 31 42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과 청년기초자산: 무엇을 위한 기초자산인가? _ 서정희 '서울시 청년수당'의 현재적 의의와 전망 _ 백승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현재적 의의와 전망 _ 이지은
화제의 인물	52 60	[유승희 의원] "기본소득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믿음이지요" _ 인터뷰어 오준호 [송상호 충북네트워크 대표] 충북의 미래를 바꿀 기본소득을 만나다 _ 인터뷰어 박선미
문학	67 68	[시] 모든 영화는 다큐멘터리다 _ 이희중 [공트] 빵을 굽는 동안 _ 신경숙
류보선의 종횡무진 기본소득 4	73	이미-재난적 상황과 '아름다운 나라'라는 꿈 _ 류보선
동향	90 95 100	[학술 동향] 종교와 기본소득 _ 이관형 [현장스케치]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_ 서정희 [현장스케치] 위험사회에서 '기본소득' 연대를 향한 또 한걸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법인 설립 총회&제8차 정기 총회 후기 _ 김수연
기본소득과 나	103 105 107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갖는다 _ 이원재 국유화와 '기본소득 송그리당당' _ 김찬휘 서점에 놀러오세요! _ 서희원
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 QnA	109	기본소득은 '젠더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_ 김교성

기본소득.

계층화의 정치를 연대의 정치로

백승호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복지국가 연구에서의 고전인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ree worlds of capitalism)』에서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은 복지체제의 특징을 탈상품화와 계층화 체제로 규정한다.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개입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계층화 체계라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계층화 체계라는 함은 복지 제도들을 통해 그 사회의 계층 질서가 유지 또는 강화되고, 사회적 관계의 적극적 서열화가 조장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선별주의 프로그램인 자산조사형 사회부조는 납세자는 감시하고, 수급자는 낙인을 느끼게 함으로써 강고한 이중구조 사회를 만들어낸다. 사회보험 또한 계층화 정치의 전형으로 활용된다. 계급이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회보험 제도에 포괄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자들 사이의 분열을 공고화한다. 이런 곳에서는 계층화의 정치가 실현된다. 반면에 보편주의적 복지체제는 사회부조보다는 보편적 수당을 통해, 조합주의적 사회보험보다는 통합적 사회보험을 통해 지위의 평등, 계급 초월적 연대를 촉진한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계층화의 정치가 아닌 연대의 정치가 실현된다.

계층화의 정치는 그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국가에서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국가 역사를 보면 보편적 연대의 정치를 펼친 나라들에서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를 누리고, 그 결과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더 낮다. 이른바 재분배의 역설이다. 재분배의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연대의 정치를 펼치는 나라들에서 복지를 경험한 중산층들이 친복지적 성향을 보이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갯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은 한 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 정서다. 재분배의 역설이 북유럽 국가들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연대의 복지정치가 실현된 역사적 경험이 드물다. 재정효율성, 행정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막강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 행정관료가 오랫동안 지배해온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런 효율성 논리는 부지불식간에 진보진영으로도 흡수되어왔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된다’는 선별주의적 논리는 진보진

영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이러한 논리는 얼핏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정당해 보인다. 심지어 가난한 서민들조차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서는 신자유주의의 재정효율성, 행정효율성 논리에 교묘하게 활용된다. 동상이몽이다.

물론 진보진영에서의 선별주의 논리에는 진정성이 있다. 평생을 약자 편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상이몽의 우파진영에서 내세우는 선별주의의 본질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파진영에서의 선별주의 논리는 사회적 이중구조와 균열을 조장함으로써 복지의 확대를 저지하는 데 있다. 돈이 없으니 아껴서 가난한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계층화의 정치는 성공적으로 작동해왔다. 진보진영의 선한 동기는 계층화의 정치 앞에서 무력화되어왔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20여 년을 이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대상의 규모나 급여 수준에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사례다.

코로나라는 긴급한 재난 시기에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계층화의 정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체 인구의 70%로 제한함으로써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일부 진보진영에서조차 왜 취약계층 지원을 먼저 하지 않느냐며 성토했고 있다. 정확하게 계층화의 정치를 절실하게 원하는 세력들이 바라는 모양새다.

재난은 특정인에게 국한되어 다가오지 않는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재난은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준다. 따라서 이들에게 좀 더 두터운 사회적 보호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지금은 선별적 정책이든 보편적 정책이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할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의 손길이 닿도록 정부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층화의 정치를 넘어 연대의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번 호의 기획주제는 총선을 앞두고 이슈가 될 청년기본소득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배치하였다. 코로나라는 극한의 상황이 쏟아올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의 계층화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좌담·재난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의 의미와 우리가 할 일

참석자: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용혜인(기본소득당 전 대표),
오준호(『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논픽션 작가), 백승호(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리: 서정희(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는 모두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무서운 속도와 범위로 전개되고 있는 이 감염병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반하고, 이는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큰 폭으로 위축시켰다. 그리고 이 위축은 소비의 감소로, 이로 인한 생산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제순환 고리의 단절을 가져왔다. 감염의 속도만큼이나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의 생계와 일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국민적 동의 수준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 정국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알려내고 동의를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판단하였다. 이 시기에서조차 또다시 선별적인 정책으로 귀결될 경우 우리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개혁의 길을 한참 더 우회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좌담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재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 점검하였다. 2020년 3월 14일, 네 분의 기본소득 주요 인사를 모시고, 미디어 데모스와 함께 라이브방송으로 진행하였다.

안효상: 커넥티드 진행자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리의 삶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3월 14일 현재 확진자가 8,000명이 넘고 있고요.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삶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긴급하게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커지고 있고요. 한 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테고요. 하지만 또 지원의 규모라든지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미디어 데모스와 함께 긴급하게 재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이름 가나다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용혜인: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입니다.

안효상: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인 오준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오준호: 안녕하세요. 논픽션 작가 오준호입니다.

안효상: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백승호: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백승호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이 제기된 배경

안효상: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준호 작가님한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다른 재난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고 말하고, 이런 점이 재난 기본소득이 나온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오준호: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감염병의 ‘팬데믹’, 즉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를 선언했습니다. 3월 10일 기준,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약 13만 명이고 사망자가

약 4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에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2월 19일부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크게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 확진자가 약 8천 명이고 7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 또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게 지원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재난 기본소득’ 혹은 ‘코로나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중입니다.

이런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을 몇 가지만 짚으면, 첫째는 경제활동이 중단된, 혹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게에는 손님이 없고, 공장은 휴업하고, 강사들은 수업이 취소되는 일들이 두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피해가 특정 지역, 즉 대구, 경북지역이나 취약계층에게 더 크긴 하지만, 바이러스가 선을 넘어서 다니기 때문에 전국으로, 전 사회적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쯤 사태가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유행이 일시적으로 가라앉더라도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경제활동을 과거와 똑같이 재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통제되더라도 글로벌 차원에서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어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아주 빠르게 대중적인 관심과 정치권의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절박감이 크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지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사용과 의미

안효상: 어제 전주시 시의회에서 기본소득 이름으로 전주시의 5만 명에게 52만 7천 원씩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걸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부에게만 주는 것인데 말이죠. 따라서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다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혜인

대표님이 재난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주장하셨는데, 한번 흐름을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용혜인: 재난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정치 세력, 정치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재난 기본소득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 25일에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6일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책으로서 15조 추경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다 같이 10일간 쉬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2월 27일 시대전환이라는 신생 정당이 1,400만 명에게 30만 원씩 두 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이어서 재난 기본소득, 코로나 기본소득이 확산되었던 계기이기도 한데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50만 원씩 1,400만 명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것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뒤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온 국민에게 100만 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51조 추경을 주장한 바가 있고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처음에는 이재웅 대표의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좋은 이야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총선용 돈 퍼주기라는 비난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3월 4일에는 저희 기본소득당과 민생당 박주현 의원, 미래당, 시대전환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월 5일에는 김민석 후보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10명이 연명한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지역에 한해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처음 주장한 정당으로서 매우 뿌듯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재난 기본소득

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세제 감면이나 금융 정책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들을 갖고 있지만 시대전환이나 이재웅 대표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1,400만 명 국민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혹은 저소득층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을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점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다양한 주장들 안에서도 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재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보편성

안효상: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해 주셨는데 다양한 제안이 똑 같은 재난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아무리 많아도 일부에게 주는가 아니면 전 국민에게 주는가, 이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승호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일반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것이 재난 기본소득이라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이와 관련해서 <숙대신보>에서 어제 사전 질문지를 보내 주셨는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기본소득의 이름을 딴 정책들이 기본소득 정신의 일 부라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백승호: 기본소득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개인에게, 자산이나 소득조사 없이, 그리고 근로 의무에 대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배당”입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재난 기본소득안들을 정리해 보면, 대상자 선정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고, 급여 수준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소요 재원은 5조 원에서 51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나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다소 소모적일 수 있어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편성 원칙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속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더라도 보편성 원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험이 보편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은 남녀노소,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모두가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고,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 피해가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도 계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위험이 보편화되지 않고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다면 재난 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가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인데,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 계산 가능성을 기반으로 제도화된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 예측과 손실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일 뿐더러, 예측과 계산이 가능하더라도 상황이 긴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으며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안효상: 이 문제랑 관련해서 다른 두 분이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오준호: 기본소득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데, 재난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보편적이어야 한다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람들이 보편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소득이란 이름이 붙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모든 재난 대책이 보편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령 마스크는 의료진이라든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은 보편적 지원이 타당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령 대구 경북이 지금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 옆에 있는 강원도나 제주도는 피해가 없어서 주지 않아도 되느냐, 소득 하위 30%까지는 지원하는데 그럼

31%부터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느냐,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80% 감소한 사람은 지원하고 70% 감소한 사람은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오히려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선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단 지급하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지원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용혜인: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선별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 거 같아요. 사실 선별을 통한 현금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미 많이 있는 정책이고요. 재난 기본소득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이후에 사무실로 전화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대구에 계시는 한 조리원분이 언론에서 봤다고 하시면서 그 언론사에 전화해서 기본소득당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라고 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 분 같은 경우는 학교가 다 쉬고 모든 곳들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이번 달에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다음 달 생계비가 너무 걱정된다, 재난 기본소득이 너무 필요하다고,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전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함께 계시는, 최근에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고 있는 감독님이 있는데 이분도 다큐멘터리 촬영 외에도 생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알바)을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취소가 되고, 당장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걱정인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는 명동에 사진 인화하는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는데 명동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 곳이잖아요? 바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죠. 여기 사장님은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 일텐데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본인이 갖고 계신 카메라 렌즈를 팔아서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광범위하게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국가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로서 선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의 의미와 확산

안효상: 보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본소득 논의할 때 또 한 가지 쟁점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주냐, 즉 무조건성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의 경우에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주느냐 아니면 일부에게 주느냐라는 차이만 있고, 여기에 덧붙여 금액 차이만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지자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것이 반갑긴 해요. 반갑기는 한데, 아무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제가 가서 말릴 수도 없고, 하지만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이후에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말씀을 해주시죠.

용혜인: 정말 유례없는 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게에 사람이 없고 버스에도 사람이 없는. 며칠 전 대학로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었는데, 6시 반 퇴근 시간에 2호선에서 앉아서 왔거든요. 정말 지하철과 버스에 사람이 없는 경험을 저도 처음 해 보았어요. 전쟁 때도 했다는 예배나 미사도 다 취소되고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이런 일상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아주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 서민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움, 경제문제가 유례없이 심각한 것이 하나의 이유일 테고, 두 번째는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겪는 감각으로서의 공포와 불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먹고사는 문제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디폴트였다면 이제는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감염에 대한 공포를 안고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국면에서 좀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문제, 생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감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쉬려면 또 돈이 문제가 되고, 쉬는 만큼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안 되니까 또 쉬지 못하고 일을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삶과 경제의 문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진짜 체감하는 문제가 된 거 같고요. 어떤 일상적인 재난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줘야 되느냐, 왜 부자에게도 줘야 되느냐는 비판, 반박을 했다면, 지금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권리로서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필요하다라는 감각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호: 옹혜인 대표께서 유례없는 재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이고요. 두 달 전만 해도 약국에서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학교가 쉬고 시장이 울스톱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으니 유례없는 위기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위기가 이번 재난 사태를 통해 압축되어 드러난 것이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일상이 위기였던 거 같아요. 자동화나 기계화로 일자리가 사라져 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커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 위기가 압축된 버전으로 터져 나오면서 재난 기본소득 요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지금이 위기이고 기본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선별을 하느라고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말자고, 개인의 책임이 아니니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기본소득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가 일정하게 공감대를 얻어 가던 차에 이번 재난이 터지고, 사람들이 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할 때 그동안 공감해온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본소득이 더 알려졌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전혀 아니지만, 그동안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알려진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재난 기본소득이란 해결책도 금세 등장한 거 아닐까요. 비유하자면 광야에서 세레자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다녀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위기가 닥치자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난 게 아닌가 합니다.

안효상: 안 들어도 계속 외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백승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불확실성은 지금 코로나 상황과 달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불확실성이 아니었습니다. 실업은 실업자가, 노령은 노인이, 질병은 아픈 사람이 경험하는 불확실성 상황이었지요. 지금은 동일한 위험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이 가져다줄 두려움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국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기본소득과 어떻게 맞닿느냐를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이었고, 기본소득 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불확실성 국면에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의 경험

안효상: 여기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오준호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 발터 벤야민의 말이 생각하는데 피억압자에게는 언제나 비상사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비상사태에 어울리는 조치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숙대신보>에서 보내온 질문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것이 코로나19가 빈부, 권력 등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다면,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소득에서 공통된 위기의식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계속 비상사태 속에 살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약하다 지금 강해졌는가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백승호 교수님은 과거와 오늘날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경험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점도 있고,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준호: 그동안 위기를 사람들이 정말 잘 체감하지 못했을까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시합이라든지 하는 몇몇 계기에 의해

기본소득의 관심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기저에는 바이러스처럼 퍼진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에 어떤 계기를 만나면 바로 기본소득이란 요구가 뒤따르고 공감대도 커졌던 게 아닐까요? 이번 국면은 축적되던 위기가 집중적으로 드러난 것인데, 단적으로 사람들이 일자리에 그리고 노동소득에만 의지해 살아가는 시스템이 단 두 달만 경제가 위축되어도 얼마나 위태로워지는지 확인되었지요. 저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 코로나 재난 후에 기본소득이 더 많이 대중화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위기를 맞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숙고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금세 다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기본소득을 포함해 우리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토론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합니다.

백승호: 기본소득을 복지라고 보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욕구론이고 또 하나는 권리론입니다. 욕구론은 청년들 힘들다, 노인들 소득이 없어 힘들다, 장애인들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이 있어서 힘들다 이런 욕구를 강조하고, 그 욕구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구요. 권리론은 복지는 권리다,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자산이나 공유부 등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난 기본소득 상황에서는 이 욕구론이 극대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던 욕구나 위험 상황을 이제 모든 시민들이 경험하게 되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쉽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리론은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추상적 권리론으로 이야기하면 시민들의 수용성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 상황 이후에 기본소득 논의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의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모두가 욕구에 직면한 재난상황에서 욕구론에 근거하여 확산되고 있지만, 재

난 이후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욕구론을 넘어 모든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기본소득과 자원

안효상: 돈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재난 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은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용혜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죠. 오준호 선생님도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재난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려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하고요.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도 약 15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음압병동의 확충이라거나 음압 구급차의 확충, 방호복 등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고요. 김경수 도지사나 이재명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51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국민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그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소득당이 30만 원을 주장했지만 50만 원, 1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런 금액과 관련한 논의는 사실 정치권에서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7조원 정도인데요. 재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추경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추경안을 15조 혹은 18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7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민생고용안정 부분인데요. 저소득층 소비 쿠폰, 노인 일자리 쿠폰, 특별

돌봄 쿠폰 아니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 환급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추경안에 포함된 대책들 거의 대부분이 선별적이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 건물주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들에 머물러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긴급대출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빚을 내주겠다라는 금융대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추경안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평상시에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던 사람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낸다고 하더라도 조금 내고 있으니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해도 이득,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임대료 감면은 건물주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소상공인들에게는 감면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감면된 금액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임대료 감면해주는 것보다 실제로 매출이 오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도 사실은 매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내야 되는 세금도 줄어드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대책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전화가 왔었는데 너무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두 달 뒤에 미팅을 잡아 주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으로 몰렸고,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 심사 승인, 대출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더 길어지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 대출이라는 것도 워낙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정책이고 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또 빚을 지라는 것에 불과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가장 컸던 추경 규모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였다고 하는데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었다고 해요. 대략 28조 4,000억 원 규모로 슈퍼 추경이라고 불렀는데, 2009년 당시에 한 해 정부 예산이 284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512조 원이라고 했을 때 정부 예산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전에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 2009년 당시 28조 4,000억보다 더 작은 규모의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예산도 2배 가까이 늘었고 역사상 없었던 재난 상황인 만큼 최소한 28조 4천억이라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경보다는 좀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준호: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처음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까지도 좋다고 했다가 뒤이어서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주느냐, 총선용 퍼주기다, 국민 1인당 100만 원 주면 1인당 100만 원씩 빚을 지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난 기본소득에 국한해서라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득세 감면 제도,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감면 제도가 분배에 매우 역진적이다, 부유층에 유리한 제도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득세 감면이 59조 원, 즉 세금 깎아 준 것이 59조 원이고 세수가 34조 원이었어요. 거둬야 할 돈이 8·90조 원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를 깎아줬다는 것이고, 그런데 세금 깎아 준 혜택을 대체로 고소득층이 가져갔습니다. 상위 10%가 19조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 하위 10%는 2,600억 원 혜택을 받았으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처럼 소득세 감면이 역진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처럼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부유층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한시적으로 올해라도 소득세 감면을 중지하면 그것이 2017년 기준 59조니까 지금 이야기 되는 1인당 100만 원 기본소득 예산인 51조를 바로 충당할 수 있어요. 또 이 금액은 어차피 깎아줄 세금을 깎지 않고 대신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니, 부유층에게 집중될 혜택을 다수 국민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주는 것이고 국가 재정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좀 더 하는 대신, 저소득층은 감면받을 혜택보다 재난 기본소득으로 받을 이익이 더 크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빚이 늘어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화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가 37~38%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미국의 경우에는 100%가 넘고, 핀란드도 62%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가요. 지금은 필요하다면 국가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사람들 생존을 지원하고 내수가 돌아가게 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이죠. 이미 너무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재정 건전성에 계속 집착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얼어붙은 시장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급박한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안효상: 그저께인가요?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진부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백승호 교수님이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계획이나 모델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백승호: 저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재정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만 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는 것은 권력 자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리적으로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의미하고 실현 가능한 여러 재정 모델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강남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정률의 10% 기본소득세를 신설하고 여기에 토지세와 환경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180조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LAB2050에서는 명목적 증세 없이 세제 개편이나 재정 구조 조정 등을 통해 187조가 가능하고 역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자료들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21.2%이고 OECD 국민부담률이 34.2%인데 이 차이가 GDP 대비 13.1%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의 국민부담률 수준을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약 248조의 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8조는 1인당 45만 원의 기본소

득이 가능한 재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세 기반 재원 마련 모델들이었구요. 공통부 관련해서는 토지공통부가 많이 논의되는데, 남기업 선생님의 계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토지불로소득이 GDP의 23%, 약 370조 정도의 재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면 또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것이지요. 또 빅데이터 공통부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과 네이버가 2017년 기준 매출은 비슷하지만 구글은 법인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고 조세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한 부에 대한 과세나 지분권 설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 재원은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숙의포럼 공론조사가 있었는데요(계간 <기본소득> 2019 겨울호 참고). 숙의 포럼 결과를 보면,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는 19%포인트, 토지세 증세에 대해서는 23%포인트, 추가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36%포인트가 증세 찬성으로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숙의 포럼이 주는 함의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영역에서 정치인이나 기본소득 운동진영에서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고 이런 정치적인 설득을 어떻게 정당들 시민 단체들이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상: 제가 정리할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준호: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재난 기본소득에 주어지는 비판이나 우려에 대해 잘 짚어보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는 것이 향후에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몇 개만 짚어보면,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엉뚱한 데 쓸 것이다, 필요한 사람만 주면 되지 전 국민을 다 줄 필요가 있느냐, 상품권을 '깡'(액면보다 적은 현금으로 교환)

을 할 것이다,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해 버릴 거다 등의 이야
기들이 나와요.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제기되었던 비난 혹
은 우려들이 이 시기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려
를 불식할 창의적인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에
서 시작하는 것,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이라기보다 취약층
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데요,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3개월 기한을 정한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생필품
구매에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소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굳이 우려가 된다면 이런 방식으
로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걱정
하는 많은 것들이 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난 기본소득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안효상: 저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저
축하는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엉뚱한 데 사용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할 이야기가 있고, 재난 기본소득이 한
시적인 것이라 그 특징이 없지만, 기본소득의 특징 가운데 하
나가 정기성입니다.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오준호 작가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요, 재난 기본소
득이 실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
고, 이번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
입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준호: 요새 많이 회자되는 책이 올라 비스가 쓴 『면역에 관
하여』입니다. 그 책에 “면역은 한 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정원
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주대학교 백영경 교수는 그 말
을 인용하면서 “면역은 커먼즈”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면
역은 바이러스와 의료체계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
체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나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취약해서 바이러스에 감
염되면 금세 감염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사회가 면역을 강
화하려면 협력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 지나면 끝이 날지
계속될지, 혹은 잠시 소강되었다가 코로나20, 코로나21로
반복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바이러스를 박멸하거나 정복하
는 건 불가능하고, 공동체 전체가 바이러스를 통제 가능하도
록 만들어서 결국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렇다면 사회적 면역을 만들기 위한 활동 자금이 모두에게 있
어야 하는 것이죠. 일하다 힘들면 쉴 수도 있고, 좁고 밀집된
거주지를 피할 수 있고, 닭장 같은 노동환경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본소득입
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얘기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일상적으로 함께 면
역이라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논
의해야 합니다.

용혜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재난 기본소득이 만약에 정말
로 추경안에 편성이 되고 국민에게 지급이 된다면 기본소득
실험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
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운동이 필요하
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당인데요.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큰 지지는 위기이자 기회라
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소득이란 이름이 대중들에게 국민들
에게, 더 익숙해지고 친근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기회인 것 같
고요. 반면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다양한 제안들이 있
잖아요? 이런 현금이전 정책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붙
어서 통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위기적 요소라고 보
니다. 저희는 자매품과 유사품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온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보편적 기본
소득의 자매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별해서 지급되는 재
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유사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
들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번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재난 이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떠한 교훈을 남
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
는데요. 사실 매년 어떤 정부든 감염병이 있어 왔죠. 노무현 정
부 때는 사스, 그 다음에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까지 이런 감염병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유행 같은 것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감염병이나 재난, 대규모 유행의 사태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감염병은 아니지만 세월호라는 어떤 특수한 재난을 마주했을 때 이 세월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남겨야 하는지를 당시의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가 그 교훈을 남기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월호 당시에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윤에 비해서 쉽게 무시되고 비용으로 치부되어 왔는지를 확인했고 그로 인해서 304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었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했지만 사실은 교훈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참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조금 더 될 수 있고, 아프면 하루 이틀 정도는 쉬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이것이 내가 바이러스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고, 아프면 될 수 있을 때 생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최근에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 일어났던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혹은 노동 조건들이 개선되는 이런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남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총선 이후에 다가올 기본소득 논의 확장 국면에 주도로 논의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재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상이 재난이었던 순간들이 이전에도 있어 왔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재난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호: 용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운동 또는 정치의 차원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구를 넘어서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 시기가 지나서 일상이 찾아오면 그때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적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욕구에 기초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설득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 사회를 상상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일찍 집에 들어오고, 모임도 취소되고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벗어나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경험하면서도,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의 소득 감소분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보충하게 되면 재난 이후에도 지금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더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도하게 소비지출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녹색 경험을 재난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리기사분들, 콜센터 직원분들, 청소노동자분들, 배달 기사분들, 영세자영업자들은 재난 기본소득을 통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대의 경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이 주어지면, 불요불급한 가구의 경우 재난 기본소득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도록 한다면 연대의 경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활용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지 논의하고, 지금의 위기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준호: 이번 재난은 일상적으로 평온했던 시기에 대해 성찰해 보는 강제된 기회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발터 벤야민이 한 말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발터 벤야민은 우리가 ‘예외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상례라고, 즉 ‘항상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재난 상황은 무척 예외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속에는 별로 예외적이지 않은 패턴들이 발견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이번에 70여 분 넘게

돌아가셨는데, 이 중에 기업 총수가 끼어 있다든가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취약계층 노약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죠. 또 감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사회복지시설이거나 아니면 닭장처럼 열악한 콜센터 같은 노동 환경이죠. 엇그제 쿠팡에서 배달노동하시는 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난은 일상 시기에 상상할 수 없는 예외적인 일인데도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가는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 두 달의 경제 위축으로 사람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노동소득이나 일자리에서 얻는 수익 외에는 정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태가 바이러스라는 돌발변수 때문에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항상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처럼 심각한 재난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 없이는 재난은 다른 형태로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장 취약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 피해를 여전히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이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손봐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노동소득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분배 구조, 사회보장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동등한 기반 위에서 사람들이 각자 처지나 역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노동소득을 얻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은 참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 우리한테 정말 충격과 공포를 주지만, 마침 총선도 앞에 있고 해서 이 사태가 보여주는 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논의하기에 좋은 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본소득 그리고 우리 사회의 나은 변화를 위한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안효상: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레베카 솔닛은 재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연대성을 발휘하는지를 다룬 책에서 재난 자체가 선물은 아니지만 재난은 선물이 오는 통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용혜인: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행시킬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고, 실제 결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을 어떻게 심사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여서 말이지요. 제가 보통 보수적인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는 커뮤니티들을 가끔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봐요. 여러 가지 키워드로. 최근에 재난 기본소득 관련 검색을 하다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글이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걸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선별해서 주면 나는 못 받아, 나는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별하지 말고 주면 좋겠다. 다음 달에 카드값 못 막아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빈곤한 혹은 선별적 복지 제도의 대상자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지지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다만 경제부총리거나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는 말들을 보면 총선 전에 재난 기본소득이란 과감한 결정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문제가 더 큰 거 같고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너무 뻔한 말이지만 사실은 국민적 여론이 더 커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는 솔직한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모아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뻔한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호: 총선 국면은 지금의 제안을 공론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죠. 총선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은 그저 그런 방안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위기가 오면 우리가 사태의 본질을 보게 되잖아요. 집안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사람도 막상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가지고 나갈지 무엇을 두고 나갈지 바로 알지 않습니까? 슬픈 사례이기는 한데, 2019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한 어르신이 집에 불이 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일 먼저 챙겨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위기 국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의



상당수는 허상이란 것을,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그들 나름대로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재난 기본소득과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낸다면 예전과는 다른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호: 두 분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효상: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긴급한 현금지원이 이야기되고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일상적 혹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파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재난 기본소득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재난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기본소득이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드린 질문, 즉 재난 기본소득이 되어야 다른 것을 추구하든 말든 할 텐데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총선이 있어서 공론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힘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가능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하루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재난 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되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긴급토론회 재난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비상사태의 도래를 가리키는 재난이 가지는 특이성과 기본소득 아이디어라는 진기함이 결합된 재난 기본소득이 이렇게 폭넓은 호소력을 가지게 될 줄은 이를 제기한 사람들조차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아마 재난 기본소득이 새로운 일상성의 도래를 가리키는 또 다른 징후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감염의 속도, 폭, 사회경제적 효과로 볼 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 위기가 이 새로운 일상성이라는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2020년 4월 4일)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5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1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2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유례없는 보건의료 위기를 낳고 있다. 또한 감염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온건한 수준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폭력적인 봉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속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노동이 축소되거나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경제 위기의 전망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실정이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영웅적 행위가 빛날 수도 있고, 저열한 작태가 도드라질 수도 있다. 이는 위기 속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떤 체제도 마찬가지이다. 위기의 시기에는 그 체제의 약점과 강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운영 원리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정보 공개의 미비라든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미국은 그 국력에 비해 사회 통합적 관점

에서 보았을 때 매우 취약한 의료 체계의 나라라는 것이 드러났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해 어느 나라도 충분히 대처할 만한 자원과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 지구화된 오늘날 이런 감염증의 대유행 자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이 모여 있는 요양 시설이 이런 감염증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난 우리네 삶의 약점이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지금의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 자체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할 때만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과 그 가족)은 고용노동이나 자영업을 통해 화폐 수입을 얻고 이를 다시 시장을 통해 소비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생산과 소비의 축소 혹은 불가능을 가져왔다. 살기 위해 삶의 연결을 줄이고 그 고리를 끊어야 하는 역설. 그래서 어느 가게 주인의 말처럼 “손님이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인 시절이다. 이렇게 일상성이 탈구된 사회에서 오직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이런 재난, 비상사태가 기본소득을 호출했다. 시작은 긴급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소박한 것이었지만 사태의 전개 속에서 기본소득의 주요한 원리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들이 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2월 25일 기본소득당은 “대구, 청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고 일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라는 논평을 냈다. 이때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때이다. 이 논평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은 모든 국민이 몸이 좋지 않을 때 쉴 수 있는 권리, 생계 걱정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대구, 청도 지역에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일시적 도입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음날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라는 칼럼에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려면 자기 나름의 일을 잠시 멈추거나 최소화해야 하지만 생계 문제로 인해 그마저도 쉽지 않다”며 당시 정부가 검토 중이던 추경 예산 15조 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구상을 지지한다면서, 2월 29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을 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천만 명에게” 주는 것이었다.

이재웅 전 대표의 청원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긴급 지원을 둘러싼 논쟁의 첫 번째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긴급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가 일부에게 지급할 것인가라는 ‘보편성 대 선별성’이라는 토픽이다. 이는 재난의 성격, 지원의 규모, 효과적인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었으며, 그 바탕에는 기본소득의 원리 자체에 대한 찬반, 현 상황에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 등이 깔려 있다.

3월 6일에는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한시적 재난 기본소득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보편적 지급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했고, 8일에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함으로써 논의를 폭발시켰다. 김경수 지사가 제안한 것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모두에게 주되 부유층의 경우 내년 소득세 징수

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비록 재난 기본소득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지급뿐만 아니라 자원 마련과 재분배 효과에 대한 고려도 함께 가야 한다고 할 때 김경수 지사의 이런 언급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논의와 실행은 다른 문제이다. 사람들의 삶에 좀 더 밀착되어 있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3월 13일 전주시가 중위소득 80 퍼센트 이하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경기도 내 20 개 기초단체, 강원도 내 3개 기초단체, 부산시 내 8개 기초단체, 전북 군산시, 울산시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를 포함해서 1개 광역단체는 일부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3월 24일 경기도가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난 기본소득이 “가처분 소득과 소비 증가로 경제 회복에 훨씬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으로서 “코로나19가 어차피 맞이해야 할 새로운 시대를 앞당겼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는 재난 기본소득의 긴급성뿐만 아니라 이번 위기의 심대한 성격을 예상하고, 이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또 하나의 흐름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위기에 맞서 기본소득의 원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세계 곳곳에서도 터져 나왔다. 3월 18일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회원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학자, 정치가, 활동가 500여 명이 서명한 호소문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실렸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 통상적인 공공의료 조치로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적 경제 붕괴는 전통적인 복지 정책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식량과 기타 필수품을 살 수 있는 돈”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비상사태 보편적 기본소득”을 각국 정부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20일에 170명이 넘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마찬가지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UBIE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유럽연합이 ‘비상사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인과 싱크탱크 등이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비상사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재난 기본소득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을 비롯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두 개의 마음이 있었다. 하나는 최근 십 년 사이에 아무리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변적이고 진기한 아이디어인 기본소득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며, 다른 하나는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제안에조차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일 뿐만 아니라 향후 기본소득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조차 있다는 우려였다.

당시로서는 적절한 딜레마였던 두 마음의 길항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진전 속에서 다른 배치 속에 놓이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거의 모든 사람의 삶을 위기에 빠뜨렸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재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새롭게 한쪽에 자리잡은 의지였다. 다른 한쪽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가져온 변화가 말 그대로 심대한 것이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 새

로운 시대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본소득 도입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전망이 있다.

전자의 의지는 3월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70퍼센트에게 가구 구성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서정희 교수가 <고대신문>에 실은 글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무리 많은 수를 포괄한다 하더라도 일부에게 주기 위해서는 선별 기준을 합의하고 선별 과정에 들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고 “재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는 보편적 방식만이 경제 생태계의 순환을 늦지 않게 재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본소득 방식의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이다. 이에 반해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처럼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재난 기본소득이 예산이 많이 든다거나 보편적 현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선별 기준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뢰를 잃거나 사회적 갈등이라는 부수적인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기본소득 도입의 전망과 관련해서 보자면, 보편적 현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도리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조건부, 무조건부 현금 이전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보편적 현금 지급의 효과는 이미 상당히 검증되었다. 현금 지급이라는 경제적 보장은 개인들에게 적극적 경제 활동의 유인이 되고 더 나아가 해방의 잠재력이 있는 한편 공동체 전체로 보면 경제의 순환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발견을 여전히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지금의 사태가 ‘검증되지 않은’ 기본소득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나사NASA가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전과 이후 대기 오염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듯이 대기질이 훨씬 좋아졌다. 강제된 탈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미국 연준의 부의장인 데이비드 안돌파토David Andolfatto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경제적 효과를 ‘계획된 불황planned recession’이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느낌을 준다. 물론 ‘예외 상태’가 새로운 정상이 될 것이라는 아감벤의 불안이라든가 지구화의 후퇴에 대한 우려 혹은 기대(?)가 다른 한편에 놓여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진보의 길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개의 전선에 놓여 있었다. 이번 경우 한쪽 전선에는 당장의 삶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보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다른 쪽 전선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성격과 효과를 분석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를 준비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상하게 죽지 않는 신자유주의’ 속에서 파괴된 공공 서비스와 공공 부문의 강화, 기후 변화에 맞서는 커다란 프로젝트인 녹색 뉴딜 같은 흐름을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자가 사회 안전망의 강화라면 후자는 녹색 일자리 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적 전환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어떻게 해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안전망이 아니라 누구나 딛고 설 수 있는 기반floor을 제공하고자 하며, 누구나 더 적게 일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한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물론 우리의 의지와 합의에 달려 있다. 그런 의지를 모으고 합의를 구하고자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서 있을지 알고 싶다면 눈을 들어 재난 기본소득을 보게 하라. 그리고 기본소득을 보게 하라.



청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본소득

[기획자의 말]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아젠다로 부상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새로움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 조건, 새로운 부의 생산과 축적을 낳고, 이 새로움은 전혀 달갑지 않은 불평등의 심화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전 방식으로의 생활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삶의 유지가 전쟁이 된 세계에서 가장 고전분투하고 있는 집단이 지금의 청년 세대다. 유아기 때부터의 항상적인 가혹한 경쟁, 불안한 미래,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삶의 조건 등,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진단하는 무수히 많은 논문, 저서, 유수한 학자들과 연구소 및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나름의 대안과 정책들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의 고용보장,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창업 지원이 주류이긴 하지만 말이다.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회는 이번 호 기획으로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었거나 실현된 유의미한 청년 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깨져버린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정책이 아닌, 청년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의 유의미성과 한계를 기획 주제로 다루어보기로 하였다.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과 청년기초자산: 무엇을 위한 기초자산인가?

서정희 교수

군산대,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1.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 및 법안

정의당은 2017년 대선에서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2018년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청년사회상속법안」(의안번호 제12473호)을 제출하였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19세가 된 사람에게(법 제3조), 1천만 원 이상의 청년 사회상속 배당금을 지급(법 제5조 제1항, 제2항)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회상속제의 구체적인 제도적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의당의 사회상속제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법 제1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배당하는 것을 ‘청년사회상속’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둘째, 청년사회상속제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연령 기준과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 19세가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청년사회상속제에서 제외된다(법 제3조).

셋째,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의 수준은 1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되, 전년 또는 해당연도 상속·증여세의 규모,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법 제5조 제2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상속배당금은 그 사람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을 포함하여 2천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3항).

2. 2020년 총선 정의당 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법안」이 법안 제출 이후에 진척되는 바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2020년 정의당이 총선 국면에서 내놓은 제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이다. 청년사회상속제를 다소 변형시킨 제안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했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을 다시금 환기하면서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상속제로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한다고 정책 목표를 밝힌다(정의당, 2020.01.09a).

둘째, 청년기초자산의 대상을 모든 만 20세 청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년사회상속제에서의 재산 기준을 없앴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 증여를 받은 청년에게는 클로백(상위층 세금 환수 제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동시에 설계하고 있다(정의당, 2020.01.09b: 8).

셋째, 청년기초자산의 급여 수준은 청년 사회상속제처럼 이원화되어 있는데, 모든 만 20세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되,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 등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넷째, 청년기초자산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한 번에 지급해서 소진될 위험을 피하고, 정부의 재정적 분산효과를 함께 기하기 위해서 최초 자격 발생 시점에서 연 단위로 3회에 나누어서 분산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지급 자격 3년 이후까지 인출을 안 한 경우 일시 인출 가능”하고, 대상 연도에 신청할 경우 “1년에 최대 1,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의당, 2020.01.09b: 8~9).

넷째, 청년 기초자산 제도는 청년 사회상속제와 달리 급여의 용처를 4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용처는 ① 학자금, ② 취업준비금, ③ 주거비용, ④ 창업비용으로 예시되어 있다.

3. 청년사회상속제와 청년기초자산제: 무엇을 위한 기초자산인가?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 제도와 청년기초자산 제도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이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 제도로 설계되었다. 청년기초자산 제도가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상속제로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정의당, 2020.01.09.a)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년기초자산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

청년 세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에 더 큰 요인이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불평등 심화의 더 큰 요인으로 제기된 자산 불평등 문제를 기초자산 방식으로 동시에 보편적인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은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 제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 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보인다.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1) 정책 목표로서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가?

청년기초자산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20세 청년에게 3년에 걸쳐 1년마다 1천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자산’ 제도다. 기초자산 제도를 최초로 제기한 토머스 페인을 제외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안된 기초자산 제도는 애커만과 알스툐가 제안한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모든 시민들이 21세가 되었을 때 4년에 걸쳐 매년 2만 달러씩 총 8만 달러를 지급하여 이 급여로 청년기의 대학교육이나 창업을 가능하게 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년기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애커만과 알스툐(2006)에 의하면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는 대학교육이나 창업 혹은 주택 마련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러한 투자는 한 개인의 성인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기본소득과 같은 매달 적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기회 획득이 가능해지고, 목돈이 소요되는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고, 자산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기초자산은 실제로는 여러 명칭으로 제안되었다. 애커만과 알스툐는 사회적 지분급여로, 줄리언 르 그랜드는 새출발 지원금으로, 세드릭 샌드퍼드(1969년)는 부의 자본세로, 앳킨슨(1972년, 2015년)과 피게티(2014년, 2020년)는 보편적 자본 배당으로, 쿤리페와 어레이거(2003년), 화이트(2011년)는 기본자본으로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이 제도들의 제도적 구상은 일시금 방식의 자본 배당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기본자산이나 기초자산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명칭만 다른 게 아니라 정책의 목적 또한 다소 차이가 있다. 목돈이 없어서 삶의 기회를 차단당하는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증대시켜준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자본주의에서의 근원적인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급여의 수준과 제도 설계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최근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기초자산의 목적은 자산 불평등 완화나 자본주의 사적 소유권 교정(롤즈나 미드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나 피게티의 한시적 사적 소유권)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대표적으로 앳킨슨(Atkinson, 2015)은 세대 간 불평등을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기초자산제(최저 상속제)를 주장하고, 피게티(Piketty, 2020)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저서에서 누진적 재산세와 상속세를 통해 국민소득 5%에 해당하는 규모로, 평균 상속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자본 배당(선진국의 경우 1인당 12만 유로, 한화 약 1억 6천만 원)을 25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 자체를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소유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은 공약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자산 제도를 제시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다시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가장 현실적으로 유력한 방법은 모든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모두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 밑천을 사회가 만들어주는 21세기판 ‘농지개혁’을 해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불평등 세습사회를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의 목표만 놓고 보자면, 최근 기초자산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듯하다.

그런데 정의당의 표현대로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끝내는 수단으로서 21세기 판 농지개혁을 연 1천만 원씩 3년 간 3천만 원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정의당의 기초 자산 제도는 사회 상속이나 자산 불평등 완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인 구상을 보면 기초자산 초기 주장인 애커만과 알스토티의 사회적 지분급여 수준에서 멈추어있다.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 정치에서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언어 구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청년들이 “부모 찬스가 아니라 사회 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을 3천만 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국 정국에서 부모 찬스라는 용어가 급부상하면서 실제로 부모 찬스는 부모가 가진 재력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권력을 의미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혹은 자본, 그리고 교육은 곧 권력을 의미한다. 앳킨슨이나 피게티가 자산 불평등 심화를 자본주의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게티는 중간값이 아니라 평균값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평균 상속의 60% 수준을 모든 청년들에게 보장하고, 동시에 기초자산과 별도로 교육, 건강, 투표권(사업장 내에서의 참여)을 필수재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보장을 제시한다.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기초자산 제도의 도입은 기초자산의 규모가 커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책은 다다익선이 아니다. 정책이 갖는 경로의존성을 고려하면 ‘시작점’이 매우 중요하다. 신중하게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2) 용처 제한 및 용처의 타당성

청년기초자산 제안의 문제점 중 한 가지는 용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약 설명자료에서 청년기초자산의 용처로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청년기초자산을 3천만 원으로 설계하는 근거가 된다. “대학 4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의 임대료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할 수 있거나,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필요에 기초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의 기초자산을 제공할 시 비록 부모 지원이 없더라도 성인이 되어 스스로 전망을 열어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학자금 문제나 주거비 문제, 창업 비용 문제를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청년기초자산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의당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반대해 온 행보와 배치될 수도 있는 지점이다. 대학 학비를 낮추고 국가 부담을 늘려 개인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을 지급하여 개인이 학비를 내라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가로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로 해야 할 일을 기초자산 제도로 풀면, 특히 기초자산을 정의당 공약처럼 용처를 교육, 주택, 창업에 한정하는 방식일 경우 이 부문의 시장화를 막을 수 없다.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시장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방식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게다가 3천만 원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보면, 대학교육비 평균 2,680만 원, 서울 기준 주거 임대보증금 + 2년 임대료(1인 기준)를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개인 창업을 위한 종잣돈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라고 제시한다. 결국 청년기초자산 3천만 원은 청년이 대학교육을 받을지, 서울에 사글세 집을 마련할지, 소규모 개인 창업을 할지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는 여러 가지 기회 중 단 하나의 찬스만 선택해서 쓸 수 있다.

3) 급여 소진과 급여 분할 지급

초기 기본소득 제도와 기초자산(사회적 지분급여) 제도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 받은 돈을 단기간에 다 써버리는 지분 탕진^{stake blowing} 문제였다. 물론 지분 탕진의 문제는 그것이 일시금이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급여의 탕진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은 다음 기본소득을 받을 때까지만 지속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 반면 기초자산에서의 탕진은 경우가 다르다. 목돈을 일시금으로 단 한 번만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으로 한꺼번에 날리는 방식으로 탕진될 경우 남은 일생을 곤궁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에 대한 반대는 주로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도박으로 대표되는 사례를 들어가며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의당 역시 급여 탕진을 문제삼고 있다. 급여 탕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 번에 지급해서 소진될 위험을 피하고, 정부의 재정적 분산효과를 함께 기하기 위해서 최초 자격 발생 시점에서 연 단위로 3회에 나누어서 분산 지급”(정의당, 2020.01.09b: 8-9)하겠다는 것이다. 3천만 원의 소진 위험을 피하기 위해 1천만 원씩 3년 동안 분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급여 탕진의 문제는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 목돈의 일시금이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이든 급여는 소비함으로써 소진된다. 급여 탕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서정희, 조광자, 2008). 첫째는 급여 탕진이 과연 개인의 부적절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을 처벌하거나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급여 탕진의 예로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다거나 알콜릭으로 술에 돈을 모두 소비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의지 부족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레이비스는 이러한 행위는 의지 부족의 문제를 가진 개인의 행위이고 의지 부족에 기반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적 치료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개인의 선택으로 빈곤하게 되었으므로 평생 빈곤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반응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급여를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분할해서 지급하면 탕진의 문제가 사라지는가? 1회 지급보다 3회 지급이 낫다면 매월 지급하는 기본소득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한 것 아닌가?

둘째,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급여의 소진이 과연 탕진인가 하는 점이다. 액커만과 알스툐이 말한 것처럼 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소진하는 이유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스포츠카를 사거나 하기 때문에만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창업 자금으로 한 번에, 대학 등록금으로 한 번에 사용하면 탕진이 아니고, 비싼 물건을 사면 탕진인가? 소비 용처에 따라 탕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탕진이든 아니든 급여를 소진했다는 결과는 동일하고, 급여가 소진되어 더 이상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없다는 사실도 동일하다. 급여를 소진하지 않고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정한 지분을 운용하는 자산운영은 계층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빈곤 가정 출신의 사람은 자산운영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부의 축적

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전승하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사람보다 지분 소진이 훨씬 용이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자산급여의 문제는 결국 자산관리능력의 문제로 치환된다(White, 2006: 72-73). 기초자산 소진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창업이나 자산운용 등으로 지분급여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탕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를 개인의 선택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사실 기초자산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기업은 대부분 일 년 이내에 사업을 접는다(Wright, 2006). 자산관리능력과 마찬가지로 창업에서도 빈곤층의 사람들이 불리하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정의당의 기초자산 급여로는 1년에 천만 원씩 3년 동안 과연 창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급여 소진은 특히 적은 금액일 경우에 문제가 된다(Atkinson, 2015). 기초자산은 큰 액수여야 한다. 그동안 기초자산 지지자들이 기초자산의 액수가 너무 미비할 경우 급여 소진의 문제가 더 커진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정의당의 기초자산은 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고, 그것조차도 분할 지급이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한 번에 받는 급여 수준은 더욱 낮아졌다.

4)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은 서로 상쇄관계인가?

기초자산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기본소득과 병행되지 않을 경우 삶에서의 기회를 단 한 번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급여 소진이 일어나면 재기의 기회가 다시는 없다. 삶은 지속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할 자유가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다. 실패해도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도전도 하고, 시도도 할 수 있다. 현금 급여의 정기성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기초자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이 패키지 전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기초자산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은 기본소득 제도를 병행할 때 그 제도적 의의를 살릴 수 있다.

정의당의 기초자산 공약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정의당은 기본소득과 선을 긋는다.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초자산이 기본소득보다 우월한 제도라는 점을 곳곳에 배치시켜 놓았다. 왜 굳이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이 우월한 제도이고, 다른 국가들이 기본소득에는 부정적이지만 기초자산에는 긍정적이라는 서술들을 언급하고 있을까? 기본소득을 배제한 기초자산 제도는 특히 생활의 안정성 문제를 고려할 때 심각해진다. 정의당이 제시하는 기초자산 급여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약 9만 원에 불과하다(이건민, 2020).

정의당이 계층이 되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고, 청년 세대들 위한 진정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본소득을 배제한 기초자산 제도가 아니라,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을 패키지 정책으로 고민해야 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 확대로 풀어야 할 문제와 기초자산으로 풀어야 할 정책 목표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7년 4,910명의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시 청년수당의 도입과정, 내용 등 현재적 의의와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서정희 · 조광자(2008).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과 사회적지분급여 논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1), 27-50.
- 이건민(2019). 「청년사회상속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 『월간 시대』, 2019년 9월호(제71호), 46-56.
- 이건민(2020).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에 대한 비판적 평가」, 『월간 시대』, 2020년 3월호(제76호), 29-39.
- 정의당(2020.01.09.a). 심상정 대표, 정의당 총선공약 1 -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 정의당(2020.01.09.b). 21대 총선 ‘청년기초자산’ 공약 설명 자료.
- 정의당(2020.01.14.). [첫번째 총선공약]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시대가 열립니다! 정의당 카드뉴스/웹포스터.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3701 (검색일: 2020.03.26.)
- Atkinson, A. B.(2015).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Inequality: What Can Be Done?). 장경덕 역. 글항아리.
- Piketty, T. (2020). Capital and Ideology. Translated by Arthur Goldhammer. Belknap: Harvard.
- White, S. (2006). “The Citizen's Stake and Paternalism”, Edited by Wright, Erik Olin, 2006,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 Verso.
- Wright, E. O. (2006). “Basic Income, Stakeholder Grants, and Class Analysis”, Edited by Wright, Erik Olin, 2006,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 Verso.

‘서울시 청년수당’의 현재적 의의와 전망

백승호 교수

가톨릭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1. 서울시 청년수당의 도입과정

서울시 청년정책은 2012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2013년 4월에 청년정책을 위한 연구와 조사, 청년교류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신규 사업발굴 및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청년허브’를 개관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서울시 의회가 전국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하였다(시행은 2015년 1월 2일). 또한 2015년에는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2015년 11월)과 ‘2020 서울형 청년보장 Youth Guarantee Seoul’을 발표하였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할 공공의 책무를 규정하고, 니트 청년을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주체로 선언하였으며, 청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설자리/일자리/놀자리/살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설자리’ 사업의 하나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서울시 청년수당)’은 니트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2016년에 서울시는 19~29세에 속하고,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3천 명을 선정하여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전담할 기구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신설 및 변경과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청년수당을 문제 삼았고, 서울시가 지원자를 모집하여 1차 수당을 지급한 직후 직권취

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지만,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6개월 동안 청년수당을 받기로 했다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공공일자리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청년공간 및 어학학습지원, 심리상담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5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우여곡절의 협의과정을 거쳐, 2017년 5천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2017년 4,910명의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수당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시행했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지원했으며, 1:1 매니징 시스템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8-9).

2. 서울시 청년수당의 내용 변화

2016년의 청년수당과 달리 2017년의 서울시 청년수당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상자의 구직 의지 및 구직활동 계획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지원이 제한되었다.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되었다.

청년수당의 급여수준은 매월 50만 원이고, 지원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다. 최소 2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된다.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울지역 외 거주지 변경이나 진학 그리고 자진포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만 지급된다.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되고, 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이 중지된다. 청년수당을 받은 자는 매달 활동 목표, 구체적 활동 내역, 참여 프로그램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학원 수강비 등 구직활동비, 식비 및 교통비 등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급호텔, 카지노,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 판매점, 안마시술소, 귀금속 판매점, 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방법은 청년보장카드로 지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시행 발표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에 변화가 있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대상이 만 18~34세, 졸업·종퇴 이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으로 결정되면서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은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만 19세~34세,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로 변경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노동부의 유사사업 참여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 다시 청년수당의 확대를 발표하였다.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2019년과 동일하고, 지원대상의 규모를 2020년 3만 명, 2021년 3만5천 명, 2022년 3만5천 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선정기준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대상	만 19~29세 미취업자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근로 기준	1주 30시간 미만 근로				
지급액	월 50만 원, 1개월	월 50만 원, 2~6개월 지급			
수급 인원	3,000명	4,910명	7,319명	6,500명	30,000명

3. 서울시 청년수당의 효과

서울시 청년수당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전담 전달체계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 센터를 두고, 청년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마음건강지원, 생활상담지원, 관계형성지원,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먼저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진로·정서 자가진단, 1:1 심층상담, 집단상담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 청년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생활상담 지원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거·노동·금융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담자의 상황에 공감하는기능을 한다. 임대료와 학자금에 비싼 한국 사회에서 청년주거문제나 부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도, 정작 청년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공적 도움을 얻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로, 관계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생성하도록 돕거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참여자들의 주거지에 권역별 매니저를 배치하여 같은 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수당 참가자들의 모임을 주선하거나, 동네 단위의 사회활동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지원은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돕는 다양한 자기탐색 프로그램, 자기소개서와 면접 컨설팅, 다양한 직업 유형의 현직자들과 구직 청년들 사이의 미팅을 주선하여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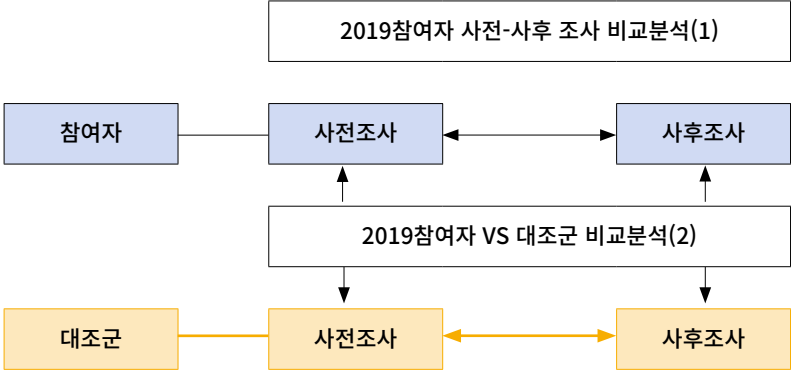
서울시 청년수당의 효과는 이렇게 청년수당이라는 직접적 지원금과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적 지원의 복합된 효과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주요 효과를 이현우 등(2020)의 2019년 참여자 대상 연구결과를 통해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설계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연구는 참여자와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청년수당 참여자 중 사전조사에는 4,338명이, 사후조사에는 2,293명이 응답하였다. 대조군은 서울시청년활동지

원사업 참여자들과 환경은 유사하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청년수당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597명이 사전, 사후조사에 참여하였다. 사전조사는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직후로 참여자들에게 청년수당이 지급되기 전에 이루어 졌다.

<그림 1> 서울시 청년수당 조사설계



2) 청년수당 수급 전 후 참여자의 변화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가져다준 변화 중 흥미로운 것은 시간 사용의 자율성, 자기확신, 사회 및 정부에 대한 신뢰의 증가라 할 수 있다. 먼저 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기존에 해왔던 아르바이트를 유지, 중단 또는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8.5%에 달했다. 1차 사전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전보다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25.5%의 청년들 중, 2차 사후조사에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그만둔 비율이 69.5%에 달했다. 1차 조사에서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6.5%의 청년들 가운데 실제 그만둔 비율은 73.3%에 달했다. 청년들은 이렇게 청년수당을 통해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를 줄임으로써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사전조사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10%만이 사후 조사에서도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90% 가까이가 사후조사에서는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림 2> 청년수당 참여 전후 아르바이트 변화

		2차 조사				전체
		시간 늘렸음	이전과 동일	이전보다 줄임	그만 두었음	
1차 조사	시간 늘릴 예정	10.0	50.0	20.0	20.0	2.2
	이전과 동일	3.7	68.8	19.5	7.9	46.5
	이전보다 줄일 것	3.4	27.1	49.2	20.3	25.5
	그만둘 것		6.7	20.0	73.3	6.5
	잘 모르겠음	2.2	51.4	21.3	24.7	19.3
	전체	3.2	50.4	27.5	18.8	100.0

다음으로 청년들의 자기확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문항에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인식은 0.73점 정도 증가했고, 일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실패 후 재기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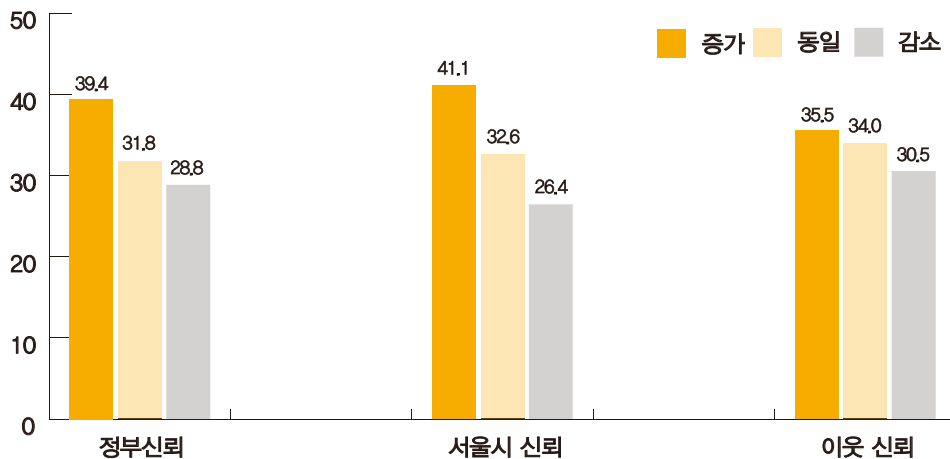
확신도 0.3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자기 확신의 변화

		1차 조사	2차 조사	차이
지원 의식	관심과 지원 받고 있다	5.02	5.75	0.73
	의지할 사람 있다	6.70	6.99	0.29
자신감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6.78	7.10	0.32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	6.39	6.67	0.28

청년들의 변화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신뢰의 변화다. 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청년수당 참가자들의 비율은 40%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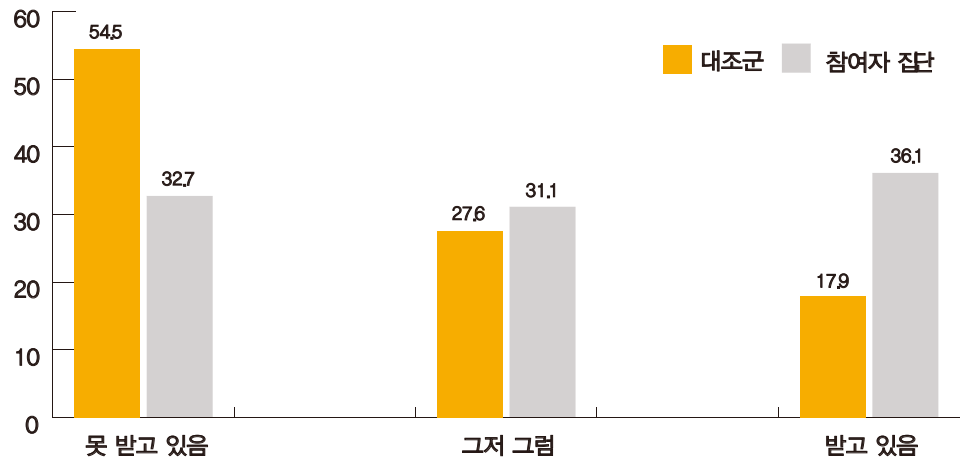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 신뢰의 변화



3) 청년수당 참여자와 대조군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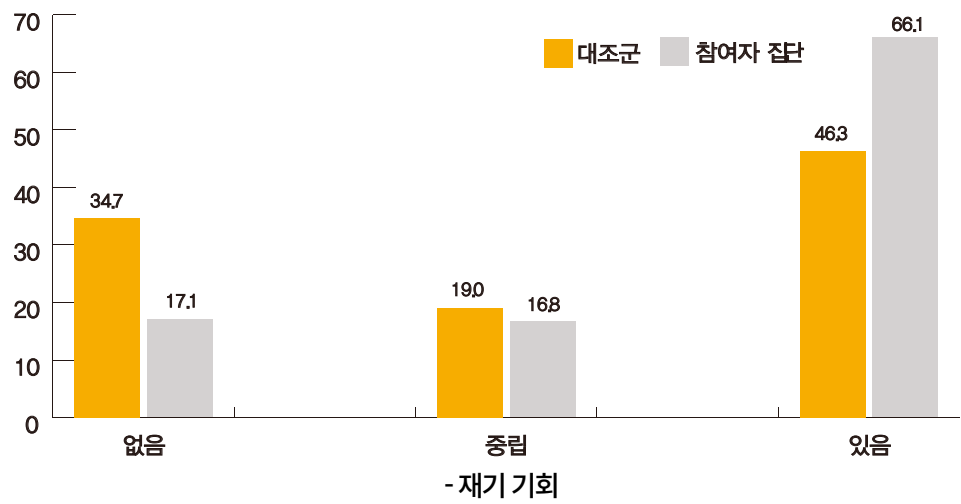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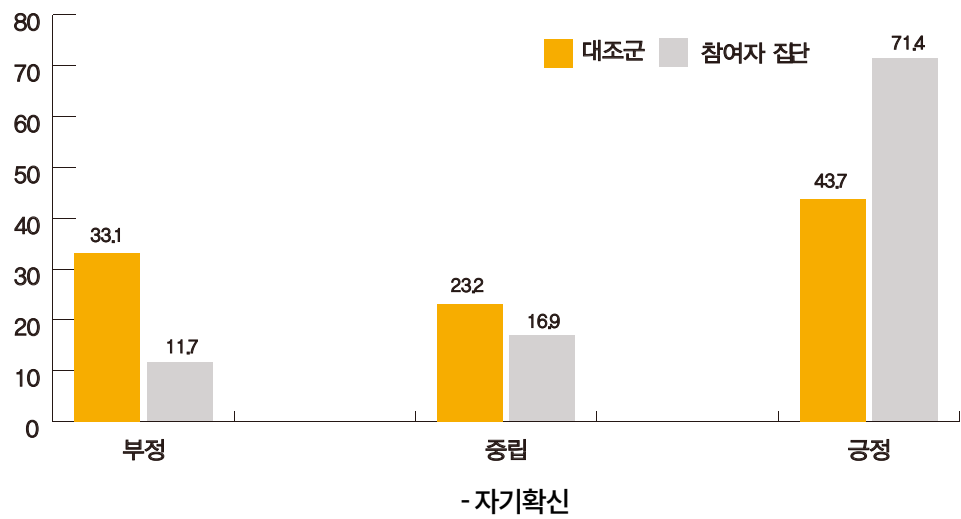
먼저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청년수당 미참여자인 대조군은 54.5%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참여자 집단은 그 비율이 32.7%에 불과했다. 반대로 참여자의 36%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대조군은 그 비율이 18%에 불과했다. 헬조선이라 표현될 정도로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 상황에서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통해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 청년들 사이에서의 삶의 불안정성은 사회로부터의 배제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혐오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지 않다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혐오를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림 5> 사회적 관심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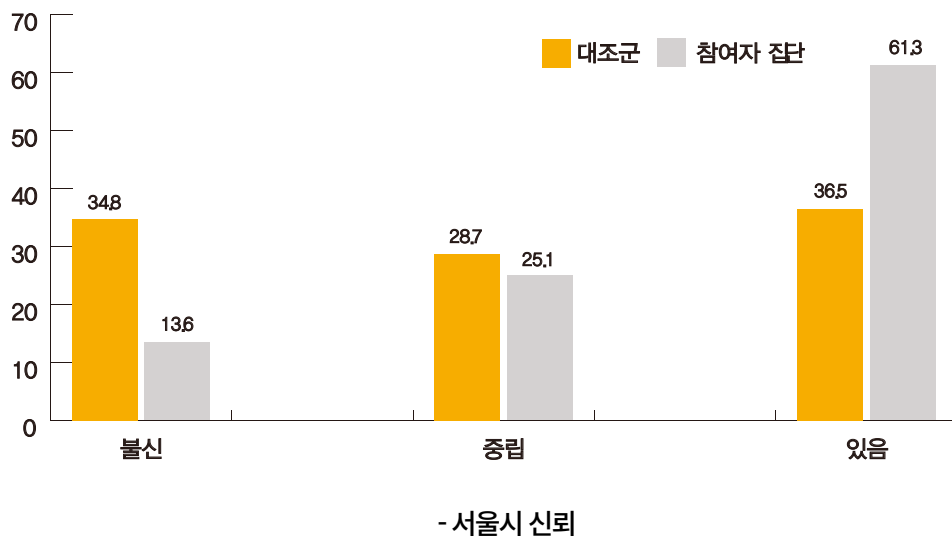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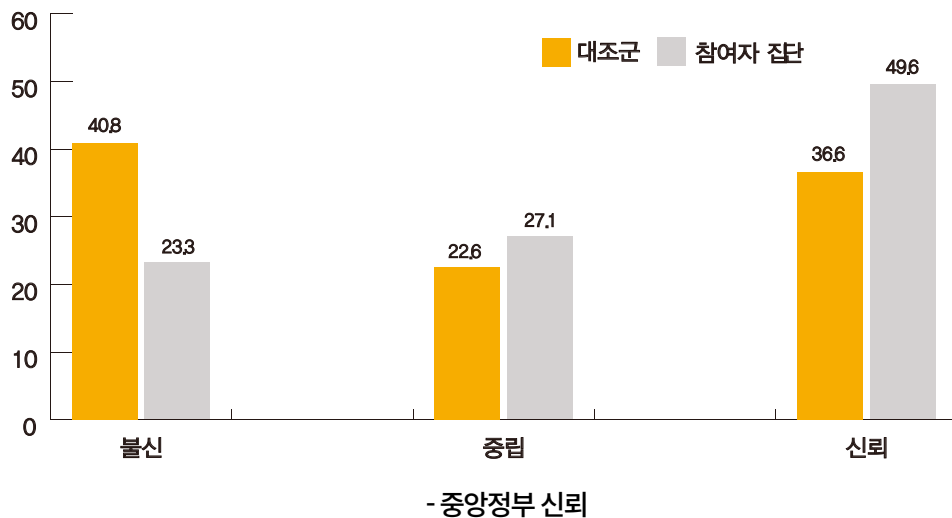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확신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년수당 참여자 집단의 자기확신 비율은 71.4%로 대조군에 비해 30% 포인트 정도 높고, 재기에 대한 확신의 비율은 66.1%로 대조군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자기확신과 재기 기회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고 이는 참여자와 대조군의 비교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수당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신뢰수준은 36% 수준임에 비해, 참여자 집단의 신뢰수준은 각각 49.6%와 61.3%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한국의 사회적 보호시스템에서 청년들은 늘 배제되어왔다.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부의 청년정책은 지금까지 청년들을 노동 시장으로 내모는 일자리 정책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들은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적 경험을 통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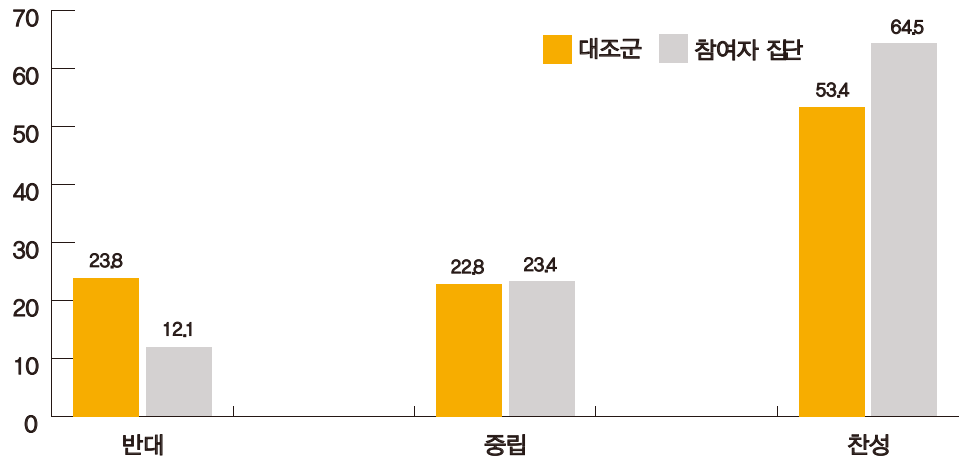
<그림 7> 사회적 신뢰 비교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이 경험한 국가에 대한 신뢰는 향후 복지국가 발전의 소중한 자산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들은 소득보장을 통해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나가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에 대한 연대의식을 쌓아갈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 확대에 필수적인 친복지 동맹의 확장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세금이 늘더라도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참여자 집단의 경우 64.5%가 동의하고 있었다.

<그림 8> 복지확대



4. 서울시 청년수당의 함의와 한계

서울시 청년수당의 함의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 청년수당의 한계를 살펴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50만 원이라는 수당의 적정성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는 데 다소 지원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이외에 서울시 청년수당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존의 정부에서 시행해왔던 청년정책들과 비교할 때, 근로 또는 구직활동 조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직활동과의 연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충분한 일자리 수요가 존재해야 하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의 좋은 일자리 수요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질 낮은 일자리와의 연계, 위탁기업의 부실한 취업알선 등으로 참여자들의 불만이 높다. 또한 제공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 부과를 없애고 자신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구축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조건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하지만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 상담 등의 고용서비스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프로그램들이 노동시장 변화 상황에 맞추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질 좋은 상담 서비스 등을 위한 인프라들이 구축될 필요는 있다. 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조건을 부과하는 것 없이

이들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현재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액을 지급함으로써 충분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교통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청년수당의 지출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경우 불합리한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생활비로 45.8%를 사용하고 있었고, 취업관련 비용으로 32.2%를 사용하고 있었다(이현우 등, 2020: 40). 청년에 대해 적정 수준의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 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저소득층과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청년 니트 인구나 근로빈곤 청년층 등 실질적인 소득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향후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앙정부 프로그램으로 흡수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청년들에게 개인적 변화와 정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취업이라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취업준비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와 청년청 등이 중심이 된 청년 대상 참여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청년마음상담소, 자기탐색지원, 청년마음친구, 현장체험학교 등은 선호도가 높았다. 청년수당과 연계된 상담, 지역사회참여, 모임 만들기 등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들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취업활동지원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라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앞서 설명했듯이,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지원 프로그램, 관계형성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청년수당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민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전달체계의 구축이 주는 함의는 크다. 기본소득은 큰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그 효과성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도 많을 수밖에 없다. 철학적으로 기본소득은 그것을 어느 용처로 사용하든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은 기본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전달체계의 구성이 기본소득 수급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수급주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구조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청년수당에서 이러한 조직은 청년들이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기본소득 실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서울시청년지원센터와 함께, 서울시의 청년청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청년청은 청년들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자립에 발판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활동 공간이다. 청년청은 2014년 5월 23일 서울시가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청 개관”

을 6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하며 시작되었다(서울청년포털, 2019).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로만 해결되지 않는 청년실업과 청년의 삶, 구직활동의 포기로 사회와 단절되고 자존감이 하락한 청년이 증가하는 문제, 다양한 청년 모임 및 활동이 존재하나 개별화되어 있어 사회적 성과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청은 청년 일자리의 문제를 포괄하여 더 폭넓은 청년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습과 문화의 복합 공간이자, 청년커뮤니티 발굴 · 육성 · 입주 공간이며 청년커뮤니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안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2015년 6월 24일 “청년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활동공간으로서 청년청의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입주단체를 모집 및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에 정식 개관하였다(서울청년포털, 2019). 이후 지속적으로 입주단체를 선정 및 재계약하고, 각종 교류회를 진행해 왔다. 현재 청년청은 청년기획팀, 청년협력팀, 청년교류팀, 청년활동 지원팀, 청년공간운영팀, 청년공간조성팀, 청년인재발굴팀으로 조직되어 서울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 세대 균형 제고를 위한 청년자치기반 조성, 미래대응 의제 발굴 및 역량강화 업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청년청, 2019).

청년청은 청년기본소득을 관리 및 지급하고 청년기획팀, 청년협력팀, 청년교류팀, 청년활동 지원팀, 청년공간운영팀, 청년공간조성팀, 청년인재발굴팀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청년들의 참여책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진행한다. 청년들은 자신이 정치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경보호 활동, 돌봄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시민활동 등으로 우리 사회의 커먼스에 대한 의무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방안에 대한 계획과 진행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청에 권한을 둔다.

온전한 형태의 보편적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청년 기본소득, 청년수당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결을 달리한다. 그리고 미래 한국 사회를 견인해갈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경험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실현가능성을 논하기 이전에, 해방적 대안은 바람직해야 한다(Wright, 2012).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에서 바람직성 원칙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 청년들이 국가의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 청년수당의 정당성으로 강조되는 지점들이다. 복지의 존재 이유를 ‘욕구’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욕구론’적 접근은 설득력을 가진다. 욕구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방적 대안은 욕구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욕구론의 확장성은 욕구가 존재하는 경계까지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배당의 권리다. 기본소득이라는 해방적 대안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청년수당에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배당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권리론을 어떻게 채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청년수당 앞에 놓여진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박원순 정책공약집(2014.5.25.). 『원순씨의 6대 청년정책』.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19).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04』.

서울청년포털(2019).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field_succ_story. 2019. 9. 6.

이현우·이지호·서복경(2020).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및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2019). 『2019년 청년청 주요업무계획』.

Wright, E., O.(2012). 『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권화현(역). 파주: 들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현재적 의의와 전망

이지은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대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4월 1일 시작하여, 2020년 2월까지 2019년 1분기부터 4분기가 지급되었다. 올해 3월부터 2020년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다. 정책 실행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글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기원과 주요 내용, 현재까지 실시된 조사결과들을 살펴보고, 현재적 의의를 찾아본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뿌리: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16년에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이하 청년배당; Youth dividend)은 제 20대 민선 6기 경기도 이재명 성남시장 임기 아래 실시된 정책이다. 3대 무상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청년배당 조례’가 제정된 후 2016년 1월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층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정부와의 권한쟁의 심판¹⁾으로 2016년 1월 시행 당시,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 5천 원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조례 원안이었던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만 19~24세까지 대상연

1)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없는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위법으로 지방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이에 대해 2015년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청년배당의 지급수준은 조례 원안과 달리 5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되었다.

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담고 있지만 현재까지 만 24세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2018년 7월 은수미 시장으로 시정이 변경된 후에도 성남시 청년배당은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2019년 4월부터 모바일 지역화폐가 도입되었다는 점, 2019년 11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이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로 변경)가 제정됨에 따라, 성남시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마찬가지로 각 시·군의 지급조례와 함께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2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되면서 명칭도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급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2016년 총 18,324명에 대해 10,360백만 원, 2017년 10,603명에게 10,546백만 원, 2018년 10,365명에게 10,283백만 원, 2019년 8,609명에게 9,630백만 원이 지급되었다(성남시 청년정책과, 2019).

청년배당은 나이 제한이 있지만 일정 정도의 거주조건만 만족하면 소득, 재산, 직업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칙과 특성을 가진다. 청년배당이 ‘무조건성’과 ‘인구학적 특징을 조건으로 한 (준)보편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수당의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청년배당이 (부분)기본소득인지 사회수당인지의 논란이 일부 존재했지만,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을 표방한 정책이다. 2015년 청년배당 시행을 앞두고 이를 검토한 강남훈·이상동의 보고서(2015)에 따르면, “청년배당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29쪽)이며, “청년배당의 사상적 근거는 공유자산으로부터의 수익”(49~58쪽)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유부 배당 논리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몫에 대한 권리’ 강조, 이에 근거한 새로운 조세(예: 국토보유세) 발굴방안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표1>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연혁

2014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공약으로 청년배당 제안
2015년 9월	공약 실천을 위해 프로젝트 발주 강남훈·이상동,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2015년 12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2015.12.18.) - (조례원안) 만 19~24세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지급 성남시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3건 청구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2015헌라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2015헌라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2015헌라8)’
2016년 1월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 만 24세 청년, 1인당 연 50만 원(분기별 12만 5천 원), 지역화폐로 지급
2017년 1월	조례원안대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2018년 5월	정부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2018년 7월~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경기도 청년배당 계속 시행
2019년 4월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2019년 12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019.12.23.)로 개정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주요 내용과 특징²⁾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① 청년 개인에게(준보편성/개별성), ② 소득/재산/직업과 관계없이(무조건성), ③ 지역화폐로(준현금성), ④ 분기별/최대1년 간(준정기성) 지급한다는 특징을 가진 성남시 청년배당을 확대·계승하였다. 세부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하 청년기본소득; Youth basic income or Youth dividend)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자.

2018년 7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8년 10월~11월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이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로 개정)가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4월 1일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전면 실시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만 24세 청년 개인에게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2019년 6월에 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르면, 사업목적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급대상의 경우, 만 24세에게 매 분기 지급하고, 매 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의 구간이 정해진다. 매 분기 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다. 2019년 만 24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은 약 17만 5천 명, 2019년 소요예산 규모는 1,753억 원이다. 재정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각 7:3의 비율로 서로 분담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시행하고 개별 시·군 단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실시한다. 지역화폐는 종이류, 카드, 모바일 중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단위: 억 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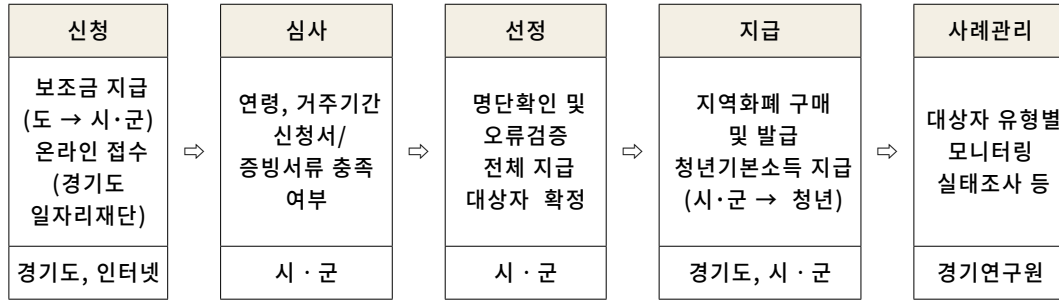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계	6,866	1,753	1,746	1,698	1,669
	도비(70%)	4,806	1,227	1,222	1,189	1,168
	시·군비(30%)	2,060	526	524	509	501
사업량	(주민등록수)	686,550	175,281	174,557	169,812	166,900

자료: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는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군의 경우 대상자 신청·접수·선정과 지역화폐 발급, 기본소득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온라인시스템(잡아바, www.jobaba.net/)을 구축·운영하고,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연구원은 대상자 모니터링(사전·사후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제366호, 제384호, 제402호 참고.

<그림 1> 청년기본소득 지급 지원체계 및 흐름도



자료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이를 종합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배당’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둘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 정여건에 따라 지급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고유사무로 자체 재 원을 통해 실시한다. 단, 「조례」에 따라 본 사업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금전 지급사업에 해당하기 때 문에, 국가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지리적 범주로 설정하고 있지 만, 엄밀하게 지역화폐의 통용범위는 개별 시 · 군 안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 · 군간 연합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지역금 융정책과 결합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청년 권리보장과 사회적 참여 촉진)와 경제정책의 효과(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여섯째, 청년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중복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가령 기초 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중복 참여는 가능하지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2단계 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

<표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혁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기 시작
2018년 10~11월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19.10.23.)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2018.11.13.)
2019년 4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작 2019년 기준 약 17만 5천 명에 해당하는 만 24세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지류, 카드, 모바일 혼합)로 지급 - (가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토지보유세의 입법화 추진
2019년 6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019.6.8.)로 개정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사³⁾

성남시 사업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성과는 '조사'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기본소득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시된 주요 조사로는 크게 ① 만족도 조사, ② 사전·사후조사, ③ 공론화 조사이다. 각 조사에 대한 설계내용은 <표3>을 참고하고 본 장에서는 결과를 위주로 간략히 기술하였다.⁴⁾

첫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후, 이를 수급한 대상자들에 대해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를 두 차례 조사하였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80% 이상이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만족한 이유로는 1·2차 조사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모두 지급되기 때문'(각각 35.2%, 29.6%),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각각 31.6%, 30.7%)이라고 응답했다. 보편성, 무조건성, 지역화폐 방식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급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물음에 대해, 1분기와 3분기 모두 변화있음(각각 60.3%, 65.4%)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삶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친구들과의 교제에서 금전적 걱정을 덜 수 있으며'(각 31.0%, 28.0%), '자기계발에 대한 시도'(각 31.0%, 30.4%)라는 점이었다. 또한 기본소득 수급 후 사회적 이슈(경제적 자유, 사회불평등 해소,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80% 이상이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취지를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받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함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둘째,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실험집단'으로, 경기도 외 지역의 만 24세 청년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사전·사후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범주는 크게 ① 행복, ② 건강과 식생활, ③ 인식과 태도, ④ 경제활동 ⑤ 꿈·자본이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 대비 사후조사에서, 그리고 비교집단에 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실험집단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어제 행복함 정도' 문항의 경우, 사후조사 기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전·사후조사 비교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과 식생활' 관련,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문항의 경우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사후조사 기준), 사전·사후조사 비교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증가한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식과 태도' 중 '법·제도에 대한 신뢰' 문항의 경우, 비교집단보다 경기도 실험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사후조사 기준), 사전·사후조사 비교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에서 신뢰도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했다. 넷째, '경제활동' 관련 문항 중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사후조사 기준), 사전·사후 조사 비교 결과 두 집단 모두 사후조사에서 일을 더 많이 하였고, 증가폭은 비교집단이 실험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제384호, 제402호 참고.

4) 공론화 조사의 경우, 계간 <기본소득>3호(겨울호)의 국내동향(81~84쪽)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꿈-자본의 하위항목 중 ‘희망’의 경우, 사후조사 기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사전/사후 비교결과 실험집단은 값이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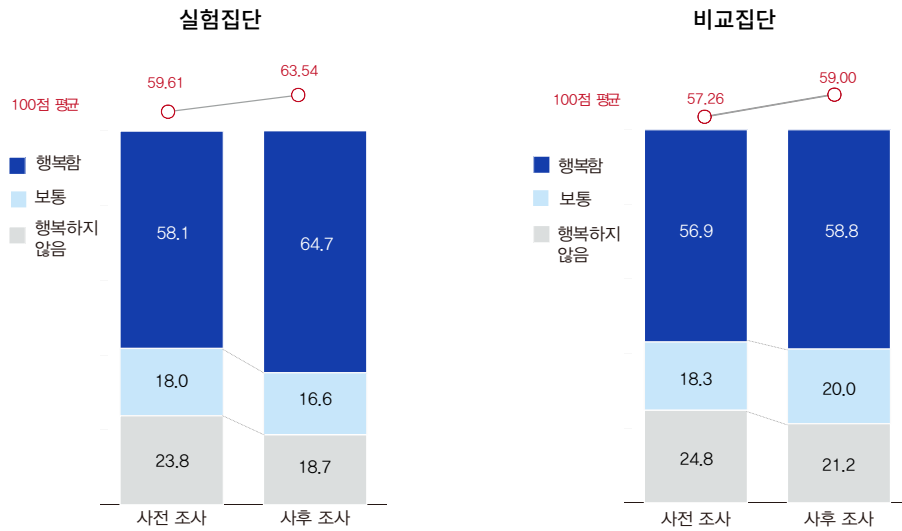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은 1~2분기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지역화폐가 다소나마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인해 2019년 2분기 동안 올린 전체 매출액 중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올린 매출액(소상공인 업체당 월평균 87,680원) 비중은 0.47%에 해당했다. 이때,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으로 소상공인의 1분기 대비 2분기 전체 매출액 감소추세 중 0.46%p만큼의 저지효과를 발생시킨다.

<표3> 조사설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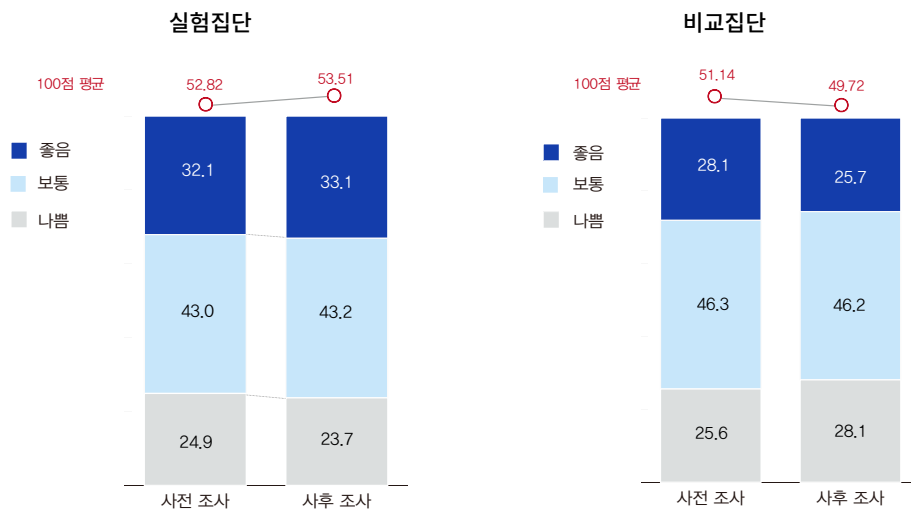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조사기간	(1차) 2019.07.17. ~ 2019.07.22. (2차) 2019.11.04. ~ 2019.11.15.
표본규모	(1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124,355명) 중 수급대상자 3,500명 (2차) 1분기 신청자 중 1~3분기 모두 수급한 청년 3,500명
조사방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1.6\%p$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조사기간	(실험집단) 사전조사 : 2019.04.12. ~ 2019.05.20. (1분기) / 2019.06.27. ~ 2019.08.25. (2분기) 사후조사 : 2019.09.16. ~ 2019.10.21. (사전조사에서 지역화폐 수령/사용자는 배제)
	(비교집단) 사전조사 : 2019.05.14. ~ 2019.05.17. 사후조사 : 2019.09.16. ~ 2019.11.04.
조사대상	(실험집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중 조사응답자 32,687명 사전조사 응답자 63,300명 (1분기 신청자 57,540명 + 2분기 신청자 5,760명) 사후조사 응답자 32,687명
	(비교집단) 경기도 외 지역 만 24세 900명 (사전조사 1,300명, 사후조사 900명)
조사방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1.6\%p$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패널조사	
조사기간	2019.03. ~ 2019.08. 사전조사 : 2019.03. ~ 2019.04.20. / 사후조사 : 2019.07. ~ 2019.08.
표본규모	경기도 31개 시·군 소재 소상공인 업체 3,212개소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 수: 약 70만)
조사방식	각 시·군 소속 마케터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조사
조사내용	(사전조사) 1분기 영업실적 등 / (사후조사) 2분기 영업 실적 등

<그림2>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패널조사 분석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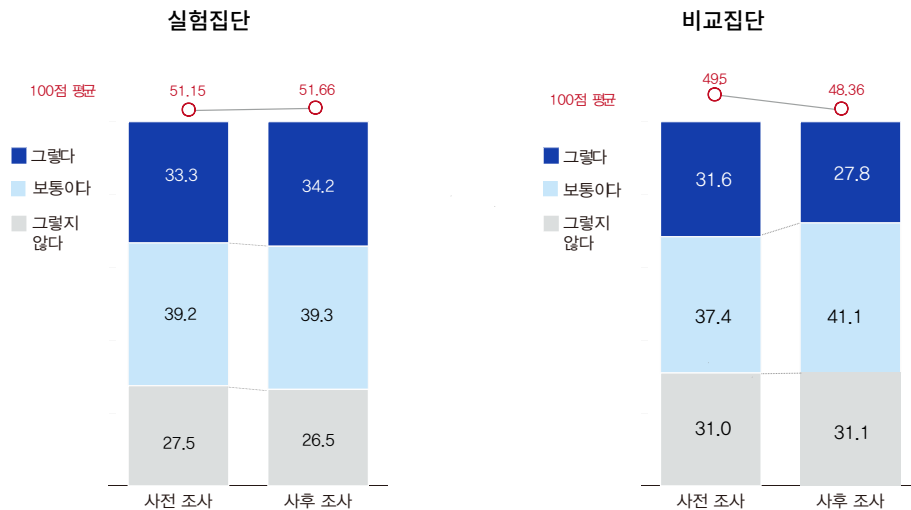
[어제 행복함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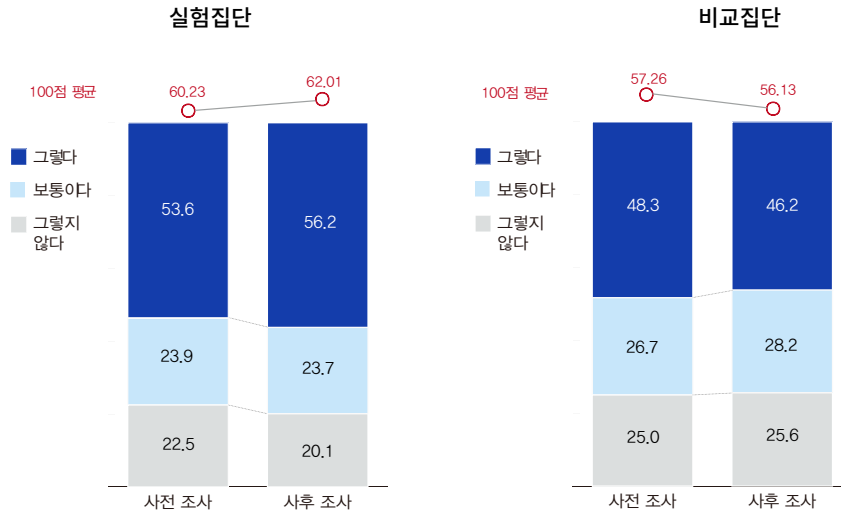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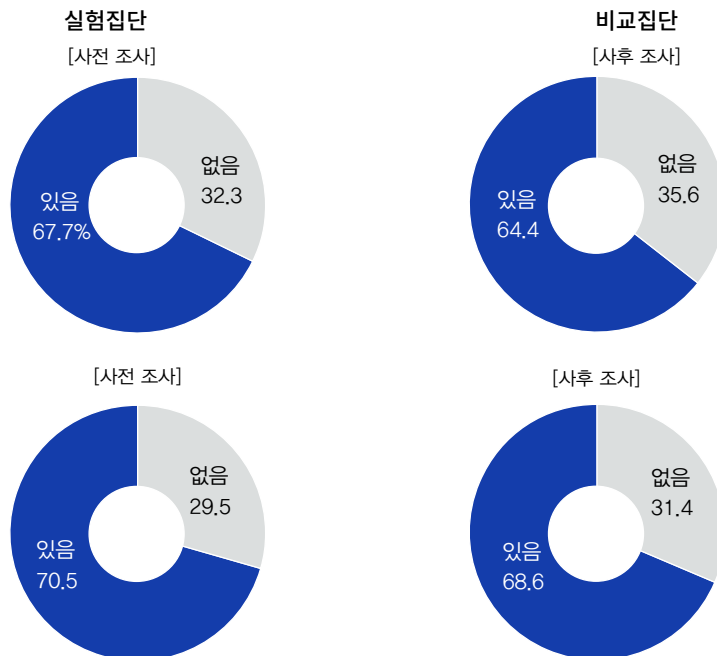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여부]



4. 현재적 의의와 전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4월에 시작하여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까지 계속 시행될 중·장기 정책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기본 설계와 원칙을 확대·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 관되며, 사회수당이 아닌 ‘기본소득’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정책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기본소득 자원마련을 위한 ‘토지 보유세’의 입법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자체 간 협력관계 구축방안,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분담에 대한 고찰, 그리고 새로운 조세재원 마련에 대한

확장된 논의로 진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표면적 가능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과정”으로서 현재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정책으로서, 한국 사회에 ‘노동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청년기본소득과 자주 비교되고 있는 정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또는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류의 정책과 다른 차이는 ‘고용’을 ‘복지’의 조건으로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특히 노동능력이 있는 인구집단인 청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은 기존 관념에서는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전무했던 ‘무조건성’에 대한 감각을 생성시킴과 동시에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선례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지역화폐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지역화폐 방식을 통해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결합시켰으며 (대안적)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상인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공유부 배당이라는 한국사회에서는 다소 생경한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권리의 개념에서 보다 확장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몫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한국 사회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의제 확산에 기여하였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행 전·후로 청년정책의 증가 및 수당 형식의 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 장애인기본소득,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의 정책 제안들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을 논의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제도(Basic Income Scheme)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보다 많은 제반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청년기본소득이 담지하고 있는 ‘청년’에게 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현재 조례에서는 목적을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시되어 있다. ‘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담론에는 ‘청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가 내포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빈민에 대한 복지’라는 관점과 ‘개발 담론’이 혼재된 것이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이 ‘필요와 욕구의 원리’에 기초한 정책으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와 배당의 원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왜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보편적 권리’ 인식의 씨앗이 잘 자라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소중한 경험’에 대한 ‘실증분석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기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의 단절’, ‘보편적 권리와 공유부 배당’, ‘지역화폐에 대한 경험’, 그리고 ‘기본소득제도의 이행’에 대한 혁명적 이슈들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이 한국 복지국가 이행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혹은 그렇지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전면적 시행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 열린 결말이라는 사실은 가슴을 뛰게 한다.

참고문헌

강남훈, 이상동 (2015).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성남시.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성남시 청년정책과 (2019).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 실천계획서(2019.4분기)」.

유영성, 정원호, 이관형, 마주형 (2020).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인다”. 「이슈&진단」 제402호, 경기연구원.

유영성, 김병조, 마주형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이슈&진단」 제384호, 경기연구원.

유영성, 정원호, 이관형 (2019).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이슈&진단」 제366호, 경기연구원.

성남시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ri.re.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기본소득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20대 국회 ‘기본소득 전도사’
유승희 국회의원

인터뷰어
오준호
논픽션 작가

20대 국회 자타공인 ‘기본소득 전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인터뷰하러 가는 마음은 다소 복잡했다. 인터뷰를 구상할 때는 유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를 정하는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할 거라 기대하면서, 당선되면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어떻게 펼치려 하는지 물으려고 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2월 24~26일에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후보에게 65대 35로 졌고, 그 직후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싸우는 중이다.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생애맞춤형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했고, 그의 활동 경험과 그가 느낀 한계를 듣는 것은 향후 기본소득 운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본소득 전도사를 자임한 유승희라는 정치인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도 관심이 갔다.

코로나19 여파로 거리가 한산한 3월 3일 오후, 유승희 의원의 서울 성북갑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다. 인터뷰할 인물을 마주하기 전에 우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요새 상황이 만들어낸 특이한 풍경이다. 유 의원에게 경선 관련 상황이 어떠하냐고 먼저 물었다.

지금 당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65 대 35라는 결과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예요. 조작이라고 봐요. 투표 시스템을 디지털 포렌식 해서 진상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해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끝까지 규명할 생각이예요. 이 결과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내가 12년 동안 성북구에 쏟은 땀, 나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명예, 우리 당의 미래를 봐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 원래 의원님을 인터뷰하려고 한 이유는 첫째, 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가장 열심히 펼치신 분이고, 둘째, 21대 국회에서 한 걸음 더 기본소득을 밀고 나갈 계획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나도 황당해요. 경선 이기고 기분 좋게 인터뷰하면 좋았을 텐데.

사상의 바다에서 헤엄친 청년 시절

유승희 의원이 지금 싸우고 있는 ‘당내 경선 부정’ 문제는 인터뷰 후반에 다시 듣기로 했다. 인터뷰 전반은 유 의원이 살아온 삶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올해 1월, 자신의 활동과 견해를 담은 책 『포용사회와 기본소득』을 출간했다. 책의 맨 뒷장에 유 의원 생애가 짧은 연표로 정리되어 있다. 연표의 첫 줄은 유 의원이 1960년 4월 26일에 태어났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민혜’였다는 내용이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날 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민중에게 큰 은혜를 내린 날’이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민혜라고 지었대요. 저희 아버지는 당시 정부 경제기획원 사무관이셨는데 비판의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민혜라고 지어놓고 곧 작명소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바꿨나 봐. 호적에는 유승희로 올랐어요. 제가 아버지와 대담한 내용으로 책 『활 쓰는 목민관』(2016)을 만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

정부 중앙부처 공직자인 아버지가 민중 혁명으로 대통령이 하야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다니 흥미롭다. 유 의원의 아버지는 역량 있는 공무원이자 검소, 정직 등의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기독교 가정의 배경에서 유 의원도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했다. 아버지는 최연소 세무서장으로 천안 세무서에 부임했고 유 의원도 천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유치원 시절 꿈은 피아니스트였다. 성당 부설 유치원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심통이 나 피아노를 쿵쿵 두들겼고, 수녀님에게 한바탕 꾸지람을 당했다.

중고등학교는 서울에 올라와서 다녔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 대학은 영문과를 가려고 했다. 아버지가 연세대 영문과

를 졸업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도 딸이 영문과에 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유 의원은 1978년 이화여대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해, 3학년 2학기에 기독교학과로 전공을 정했다.

- 기독교적 가정 배경이 기독교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인가요?

신앙적 이유로 정한 것은 아니고, 철학적 이유에서 전공을 정했어요. 그때에는 3학년 때 과를 선택하는데, 1학년 때는 영문과를 택하려고 했어요. 교양영어는 A학점 받기도 했고. 그런데 영문과 가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겠더라고. 저는 기독교 학생운동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영문과는 포기하고 3학년 1학기에 사회학과를 선택했죠. 그러다가 3학년 2학기에 기독교학과로 바꿨어요.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운동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 기독교운동에는 이른바 아이티(Identity) 대 비(非)아이티 논쟁이 벌어졌다. 간단히 말하면 아이티는 기독교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비아이티는 기독교는 형식적 틀일 뿐 사회과학 이념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에서 강조하는 이념이란 마르크시즘을 말한다. 전자는 마르크시즘과 기독교 철학은 다르면서도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

저는 아이티 쪽이었어요. 기독교 신앙과 마르크시즘은 서로 통하니까,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운동하면 결국 만나는 입장이었죠.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라든지 민중신학, 해방신학, 나치즘에 맞서다 감옥에 갇힌 본회퍼의 『옥중서신』 등을 읽으며 제 생각을 만들어갔죠. 기독교학과에 가서 제대로 이론적인 무장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동기 중에 기독교학과 선택한 사람은 나 말고 한 명뿐이었어요. 지금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박경미 교수.

박경미 교수는 3학년 1학기에 기독교학과 전공을 선택했고 유 의원이 2학기에 같은 과로 들어온 것이다. 박 교수가 친구인 유 의원에 대해 쓴 글이 재미있다.

우리 학년에 나 혼자 기독교학과를 선택했는데, 뒤늦게 사회학과에서 기독교학과로 오는 학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게 유승희였다. 속으로 반가웠지만 유승희는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수업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야 기독교학과 언저리에서만 맴돌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유승희는 전교적 인물이었다. 왜 저렇게 바쁠까 싶을 정도로 하는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 보였다. (『활 쓰는 목민관』 추천사)

학과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요. 학생운동 하느라 바빠서. 하지만 시험은 주관식이니까 지식을 총동원해서 써서 학점은 잘 받았어. 독서는 많이 했거든. 지금은 아무도 안 읽는 한자 많고 세로로 된 책들, 사회과학, 철학, 신학, 역사 관련 책들을 많이 봤죠. 서양경제사, 후진국경제론, 시몬 베유, 본회퍼,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한 폴 틸리히 신학 등을 읽었어. 사상의 큰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그 시절을 보냈죠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나아가다

1982년에 대학을 졸업한 유승희 의원은 1984년에 결혼하고(남편 유종성은 현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이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산돌노동문화원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조직했다. 친구인 박경미 교수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유승희는 바닥으로 내려가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함께’ 했다. 유 의원은 영등포공단 내 지역사회개발원 간사로 근무하며 1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산돌노동문화원에서는 보수 없이 총무로 10년 동안 일했다.

-산돌노동문화원은 어떤 단체였나요?

그 당시 기독교운동 출신들이 민중교회, 노동교회, 빈민교회 등을 만들었는데, 구로공단 쪽에서는 산돌교회를 만들었죠. 산돌교회를 기반으로 산돌노동문화원을 열어 공단 노동자들을 모집했고 저는 문화원 총무, 즉 간사를 했어요. 경찰 눈을 피해서 밤중에 풀통 들고 공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모 집 포스터를 붙였어요. 노동자들과 사회과학 학습도 하고 같



사진 설명: 구로공단 신발공장에서 일하던 시절(맨 오른쪽이 유승희 의원)

이 연극교실, 합창단 등 다양한 문화 활동도 했죠. 재미있는 행사도 많이 했어요. 배우 문성근 씨 초청해서 연극 교실 강연하고, 가수 김광석 씨와 노찾사(노래를 찾는 사람들) 초청해서 노래 교실 열고. 영화감독 정지영 씨, 김남주 시인도 와서 강연해주셨어요. 산돌노동문화원은 노동자들과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노동현장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셨죠?

1년 정도 가리봉동 신발공장에 다녔어요. 노동자를 조직 하려는 생각보다는 노동자들의 환경을 경험하려고. 누구를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 나이 많은 분들도 많고, 일이 너무 셌어.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밀려오던 때였거든. 같이 일하던 한 아주머니가 자기는 사흘 밤잠을 안 자고 일한 적 있다고 자랑하듯 말하던 게 기억나요. 신발공장에 1년 다니고 봉제공장에도 잠깐 다녔고, 나중에 전자제품 공장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위장취업인지 알아내려고 집에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 전화를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유승희에 대해 물으니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린데 산돌문화원에서 일한다.’고 말하시는 바람에 공장에서 잘렸죠.

유 의원은 기독교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소수의 선도적 투쟁보다 대중과 함께 장기적 안목으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 노동현장에 들어가거나 노동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활동을 10년 간 우직하게 한 것도 그러한 철학에서였다. 장기적 안목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목표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을 하는 것이었다. 비참한 민중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 목표를 품고 민중의 현장을 지켜온 유승희이지만, 1990년대 운동진영에 닥친 변화의 파도를 피할 수 없었다.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해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했다. 1995년 광역단체장 선출까지 포함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운동진영은 제도권 정치 진입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1995년 광명시의원이 되며 제도권 정치를 시작하셨죠. 선거에 나서게 된 계기는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사회운동, 여성운동과 접촉하면서 여성 출마자를 발굴하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이우정 선생님 같은 분이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를 이끌고 계셨죠. 저는 정당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기층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대 선배들이 찾아와서 출마를 권유했어요. 그 제안을 듣고 한참 고민했어. 남편은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했죠. 출마한다면 표면적인 이유는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정치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나 자신의 이유가 있어야 했

쥬.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느냐. 고민하느라 혼자 도선사(삼각산 사찰)까지 걸어 올라가기도 했쥬. 그러다가 결심을 했는데,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우리 역사』에 나오는 말처럼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유 의원은 기초의원 가운데 득표율 전국 2위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최초 공채 여성국장에 임명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17대 총선(2004)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 성북갑 원외 지구당위원장을 거쳐 19대 총선(2012)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성북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20대 총선(2016)에서 3선에 성공했다(더불어민주당).

의정 활동 하며 유 의원은 ‘화장실 남녀평등법’으로 불리는, 공중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합 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2006).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성폭력 친고죄 폐지를 이끌었다(2012). 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을 발족해 공동대표를 맡았다(2012).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의 보육, 교육, 복지 여건의 향상을 위해 여러 활동을 했다.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한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싸우며 보인 야성 덕에 ‘쌈닭’이란 별명도 얻었다.

20대 국회, ‘기본소득 전도사’로 활약하다

유 의원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직속 기본소득위원장을 맡았다. 그 후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전도사’로 활약했다.

- 기본소득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가요?

기본소득을 접한 것은 꽤 오래 전이에요. 10년보다는 조금 안 된 거 같아. 친구가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있다며 알려줘서 알고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20대 국회(2016~2020) 들어와서쥬. 복지, 일자리, 경제 민주화 이런 서로 얹히고설켜 여러 문제를 하나로 꿰뚫는 해결책이 있겠

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쥬.

- 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포럼을 오래 이끄셨쥬. 경제구조, 분배구조 개선 방안을 탐색하던 중에 기본소득을 만나신 건가요?

국민의 삶을 보호해 줘야 제대로 된 국가인데, 현대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절부터 해방 후 독재정부 시절까지 제대로 된 국가가 없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고 기초노령연금도 도입하면서 부족하나마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작했쥬. 그럼에도 점점 불평등은 심해지고, 젊은 사람들 취업은 점점 어려워졌쥬. 그럼 이제는 뭘 해야 할 때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선별적인 사회보장제도는 복잡하고 행정비용도 많이 든다, 기본소득으로 단순명쾌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쥬.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기본소득위원회도 만들며 의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후보 캠프에서 내가 기본소득위원회를 한다고 했어. 대통령 후보 직속 기본소득위원장으로 임명장이 나왔어요. 마음이 꽤 들었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기본소득을 세게 밀고 나갈 수 있겠다,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기본소득을 정책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기본소득은 해외 실험 또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도의 이슈였고, 메인 이슈는 아니어서 후보의 핵심 정책이 되기는 힘들었지. 아무래도 기본소득하면 ‘이재명’이란 게 있었으니까(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당의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수용한 점도 있겠쥬.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포용성장 기조에 기본소득의 취지를 일부 수용하기는 했어요. 나는 문 정부가 기본소득을 강하게 추진하길 바라면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본소득 연구 용역 예산 2억 5천만 원을 요청해 확보했어요. 국회 차원에서는 최초로 기본소득 입법화를 검토한 보고서가 나왔쥬.

2019년에 ‘기본소득제의 가능성과 입법화 방안 연구’ 보



고서가 제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을 없애고 기본소득 실시로 중복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면 기본소득 재원으로 약 113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 실시에 따른 재정 부담은 우려한 것보다 크지 않다는 내용이다.

- 만약 정부가 기본소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걸림돌일까요?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에서 전면 실시하려면 예산구조, 조세구조, 정부 조직구조 등을 다 손봐야 합니다. 부유층에게 유리한 세금 공제·감면 제도도 다 바꿔야 하고, 칸막이로 나눠진 행정체제도 단순화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복지제도도 정리하고 통합해야 해요. 기본소득은 제도를 단순히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없어지는 조직 부처도 있죠.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같은 부처의 관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저항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또는 어떻게 극복할 건가 앞으로도 고민할 과제입니다.

-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실현에 대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이 방향은 옳으나 실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많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복지정책도 보편복지로 과감히 확대

하지 못했고, 또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도 보수적으로 짜게 되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 남북관계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는데 잘 나가다가 벽에 부딪혔고, 지금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국이 아우성이고, 이래저래 기본소득을 강하게 얘기하기 힘들었죠. 여당이 더 잘하지 못한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개혁적 입법을 실현하기에 정치 지형의 한계가 컸어요. 제1야당이 정책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유치원 3법 같은 누구나 동의할 만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조차도 제1야당 제치고 정당들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모여야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 3법은 4+1로 통과시켰지만 불로소득 환수라든지 토지보유세 도입이라든지 하는 보다 진보적 개혁 정책들은 4+1에서도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민주당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 지형의 한계도 컸죠.

- 의원님은 나름대로 기본소득 운동을 정치 공간에서 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를 국회 차원에서도 열고 지역 차원에서도 많이 열었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 4차 산업혁명 등을 접목한 행사를 열어 대중적 관심을 모았고요. 대정부 질의를 통해 기본소득이 불평등 해소의 정책 수단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인기초연금도 노인 100퍼센트가 받도록 확대하고 지급 액수를 올려

야 한다고 주장했죠. 기초연금 액수 30만 원으로 올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정부가 그 인상 시기를 앞당겨 작년부터 시행한 데는 제 역할도 있었어요. 21대 국회에 내가 들어가면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제안해 만들고 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려 했어요.

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으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 3당이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한 걸음 더 진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유 의원이 원내에서 해온 노력의 반향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기본소득’이 준 행복

- 기본소득은 내게 한 마디로 이것이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은 안 하고 노동운동을 10년이나 했어요. 운동을 하는 동안 돈이 없어도 제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했다고 느꼈어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아버지가 주는 기본소득 덕분이죠. 나도 꾸준히 적금도 붓고 했지만 그건 산돌문화원에 갔다 냈고. 아버지가 나한테 돈 벌라고 닦달했으면 그렇게 살 수 없었겠죠. 그리고 내가 옷이니 브랜드니 하는 것에 욕심이 근본적으로 없어서 거기 돈이 들지 않았고요. 한 번은 아버지가 비싼 가죽 외투를 사 주셨는데, 너무 고급이라 싼 것으로 바꾸고 남은 돈으로 다른 옷을 샀죠.

유 의원은 기본소득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은 돈을 주는 것에 앞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유 의원은 말한다.

유 의원은 『딸에게 들려주는 리더십 이야기 1, 2』, 아버지와 대담집인 『할 쏘는 목민관』, 기본소득과 포용사회의 비전을 담은 『포용사회와 기본소득』 등의 책을 썼다.

-『딸에게 들려주는 리더십 이야기』란 책을 쓰셨습니다. 세계 여성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무엇이 좋은 리더십인지, 진보정치를 고민하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말해주신다면요?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2006~2010, 2014~2018)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칠레에 갔어요. 대통령은 못 만나고 대신 여성부 장관을 만나 인터뷰를 했죠. 나라가 기니까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나라를 순방을 하는데 하필 그 때였어. 바첼레트 대통령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정부 각료 50퍼센트를 여성으로 하겠다고 공약하고 그 공약을 지켰어요. 국방장관도 여성으로 했고. 또 칠레는 가톨릭 국가라서 미혼모들이 많아요. 피임도 안 되고 낙태도 안 되고, 임신해서 고등학교 포기하는 여자애들이 많았어요. 바첼레트 대통령이 고등학교마다 어린이집을 몇 천 개나 지었어요. 약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정확히 찾아내어 과감하게 실행하는 리더십이 대단했어요. 정치를 하다보면 현실에 휘둘리기 쉬운데, 소신 있는 정치를 하려면 다양한 경험, 깊은 철학, 인간에 대한 관심, 헌신성, 전문성 등을 갖춰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패거리 정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 의원이 당내 경선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물었다. 먼저, 유 의원 측이 집계한 권리당원 투표수에 비해 권리당원 개표 결과가 훨씬 모자란다고 한다. 또 경선 3주 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 의원이 김영배 후보보다 앞섰는데, 막상 일반시민 투표에서 두 배 표차로 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한 선거 컨설팅 회사의 전 대표이자 최대 지분 보유자인데, 김영배 후보는 이 회사에 경선 홍보기획을 위탁했다. 이근형 위원장이 임명된 작년 7월 이후 민주당 경선 규정에서 ARS 경선투표 실시 기관을 복수로 지정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번 경선 ARS 투표는 한 회사가 단독 관리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김영배 후보와 이근형 위원장, 업체 사이에 유착과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투개표 참관에 제약이 많았어요. 지금



투표 로 데이터(raw data, 가공되지 않은 원 데이터)를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경선 전 당에서 진행한 성북갑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겼어요. 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가 60퍼센트, 선호도가 50퍼센트가 나왔어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했고, 상대 후보와 차이를 더 벌리려고 주민들 계속 만났죠. 그런 제가 상대 후보에게 두 배 차이로 진다는 결과는 용납할 수 없어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총선 이후라도 이 진실을 밝히려려고 해요.

저는 무소속 출마는 안 해요. 정치를 민주당 밖에서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35대 65라는 이번 경선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보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를 지지해온 사람들의 자존심과 명예, 12년간 제가 성북 지역에서 해온 노력을 생각해서라도요. 지금 이 상황이 당의 재심을 통해 뒤집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의를 보고 외면하는 것이기에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밝혀내려고 합니다.

유 의원은 인터뷰 직후인 3월 5일에 서울 남부지법에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ARS 투표 과정의 부정 의혹 규명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경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치의 개표결과가 나왔으며 경선 절차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되었기에 이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인터뷰가 따뜻한 희망을 선물하거나 또는 비극적 진실을 드러내거나 어느 쪽으로 분명하면 좋겠지만, 인물과 상황은 그렇게 정리하기 힘든 때가 더 많다. 유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본선 진출 기회를 잃은 데 대해 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든 기본소득 지지자로서든 아쉽고 안타깝다. 한편 유 의원이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을 위해 퍼트린 씨앗이 적지 않고,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내걸고 도전하는 정치세력들이 그 노력을 이어간다면, 곧 씨앗의 결실을 보게 되리라고 희망을 품어본다.

미국 시인 에즈라 파운드는 말했다. “한 사람의 희망은 그가 속한 문명의 척도다.”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가 그가 품는 희망의 내용과 크기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시인의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의 희망은 지금까지 진행한 기본소득 운동의 척도다. 기본소득 운동이 쌓은 성과 위에 기본소득에 대한 희망은 더 뚜렷해진다. 기본소득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 의원의 노력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충북의 미래를 바꿀 기본소득을 만나다

송상호 충북네트워크 대표

인터뷰어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 활동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인 까닭에, 일단은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즉 직접 만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 이런 사정은 ‘화제의 인물’ 인터뷰에도 어려움을 주었다.

계간 <기본소득> 제4호의 ‘화제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송상호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를 청주에서 만나 인터뷰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7번째 지역네트워크로, 2019년에 생겼다). 인터뷰는 부득이하게 2월 28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송상호 대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회원조직으로 전환되었던 201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 그의 인생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분투의 이력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아쉽게도 그 결과가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던 그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만나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견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뚜벅이’도 편히 이동할 수 있는 소도시 청주를 좋아하는 그는, 느리지만 꾸준한 기본소득운동을 해왔다. 그리고 최근,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이라는 너른 틀을 만들고 ‘충북형 기본소득’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내세우며 충청북도에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운동을 펼쳐려 하고 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다.

- 기본소득을 왜 지지하냐고 물으면, 대개 지난 인생의 경험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인간 송상호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앗, 너무 어렵네요. 언제부터인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덕분에 간만에 과거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과거 송상호를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별’입니다. 하늘의 별을 사랑했었지요. 정확하게는 대우주의 신비에 매료되었다고 할까요? 몇 천만 명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백여 개의 국가에 몇 십억 명이 모여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한데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99.8%의 질량은 태양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고, 이런 태양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이런 은하 수천억 개가 모여서 대우주를 이룹니다. 관측 범위 안인 대우주를 벗어나 얼마나 많은 대우주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까지 상상하면... 음. 세

상이 하찮게 보이기도 했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별에 미쳐 있었지요. 당시 『과학동아』, 『뉴튼』을 탐독하면서 황홀해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묻더군요. ‘넌 다시 다음 생이 있다면 뭘 할 거냐?’고. 그래서 전 주저 없이 ‘천문학’을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대학도 ‘천문학과’를 선택했구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키워드는 ‘종교’였습니다.

감수성이 민감했던 시기, 작은 일에도 사람을 속여야 하는 세상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일 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라면과 우유를 사다 보면 가끔 계산이 몇 십 원에서 몇 백 원이 틀린 경우가 있었습다. 이상하게 역전이나 터미널에 가면 경우가 심해지지요. 물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속이고 싸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왜 사는지?’, ‘존재의 의미’는 뭔지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을 해 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종교도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독교, 중학교 때 불교, 대학

교1학년 때에는 심지어 ‘도를 아십니까?’로 유명한 대순진리회까지 만나봤습니다. 답을 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천문학’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대학교 2학년 때 후배 한 명이랑 ‘도보여행’을 떠났습니다.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많은 이들이 폭력 앞에 쓰러져 가는 모습,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 폭력 앞에서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삶에 새로운 해답을 찾고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지독스럽게 비를 맞았어요. 온몸에 물이 똑똑 떨어졌지만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어요. 소위 ‘운동권’ 학생이 되기로 한 겁니다. 당시에는 ‘별’을 공부하게 죄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생, 농민, 빈민, 노동자, 청소년 등등.

하필 IMF 이후인 1998년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과학강사’가 되었습니다. 청년진보당이라는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입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사교육이 유행했던 시기라 과거의 천문학 공부를 살려 ‘학원강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강사로 3일만 저녁에 출근했는데 주 2일 저녁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야학’입니다. 주 3일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만나고 주 2일은 탈학교청소년과 중장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야학을 통해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장애인이 공부할 곳이 정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인 야학’을 만들었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장애인들의 권익옹호’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다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었고 ‘장애인인권연대’ 등 장애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삶의 근간이 되었어요.

사회에 나오니 참 할 일이 많았지만 ‘일 욕심’은 병도 불러왔습니다. ‘학원강사’, ‘야학강사’, ‘장애인인권운동가’, ‘진보정당 당직자’를 겸하면서 30대 내내 아침 8시에 나가서 새벽 1시 반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딱 10년 만에 ‘혈관이 수축하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욕조에서 한 시간 정도 끙끙 대다 겨우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한 번 더 참을까’ 하다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들



이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놀라서……. 대학병원으로 구급차타고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스트레스에 의해 혈관이 수축하는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은 피했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진보정당운동’은 여전히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40대에는 본격적으로 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사회당’이 ‘진보신당’과 합당해서 ‘노동당’이 되었고 다시 노동당의 일부는 ‘정의당’으로, ‘기본소득당’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말부터 1년간 노동당 총북도당위원장과 전국위 의장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건 ‘기본소득 운동’이었지요.

- 지난 인생으로 얻은 깨달음,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

하시나요?

‘연대와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 우리 사회의 위기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과 ‘신천지신도’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건 ‘확산 방지’, ‘환자 치료’입니다. 특정 집단을 자꾸 ‘배제’하게 되면 점점 음성화되고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이를 알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비상시기여서 서로 서로가 자신을 ‘오픈’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경쟁’과 ‘배제’의 방식은 결국 서로의 차이에 따른 권력의 차이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소위 지배층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피지배층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대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와 ‘공존’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적절한 가치가 아닐까요?

-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본소득은 매우 단순하게 정의되지만,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배경은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3년에 소규모 연구자/활동자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대중적 회원조직이 되기로 합니다. 바로 그 해에 송상호 대표님은 회원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를 잠시 돌이켜볼까요? 맨 처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먼저 금민 소장님이 떠오르네요. ‘사회적 공화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의 근본적 혁신’에 더 고민하고 시기라 조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민 사회당 대표에게 ‘당신은 사회주의자입니까? 당신은 혁명가입니까? 등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소득’ 정책을 듣게 되었지요. 이걸 확 와 닿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론’의 정치가 아닌 ‘현실’의 정치에 진입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아쉬운 건 당시 주류정치와 언론의 외면이었지요. 비판이라도 내놓고 해주시면 반론이라도 하겠는데. 그냥 ‘미친 소리’로 일축하고 외면하더라고요. 유사종교인인 ‘허경

영’과 비슷하게 취급하기도 해서 화도 났습니다.

- “‘이론’의 정치가 아닌 ‘현실’의 정치에 진입하는 순간.” 뭔가 꽤 함축적인 말인 듯합니다. 왜 그런 직감을 하게 되었을까요? 기본소득은 뭐가 그리 달랐을까요?

일단 쉬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을 줘야 합니다.’ 논란을 부를 수 있을지언정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전까지 진보정당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정책으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도만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복지국가잖아’라는 비판도 받았고 ‘사회 경제적 문제’와 시민의 ‘권리’의 문제를 드러내기에는 정책적 공백이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은 ‘경제적 문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권리투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징을 한두 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모두 다 중요하긴 한데 굳이 선택하라면 저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입니다.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에 타 OECD국가에 비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인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경우에도 특정 취약계층에게 ‘자산’, ‘부양의무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사리학교(송상호 대표가 오래도록 활동하고 있는 청주 장애인 평생교육학교이다)에 수급자였던 학생 한 분이 어느 날 ‘아버지가 나쁘다’고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분의 아버님께서 일일 ‘노가다’를 몇 번 하셨는데 수입이 잡혀서 장애인 아들의 수급비가 삭감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가족의 계좌거래와 통화 내역까지 조사하는 일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게 되면 ‘불쌍해서 받는 복지’가 아니라 ‘주권자로 받는 권리’가 됩니다. 또한 쓸데없이 심사하는 인력을 모두 다른 복지서비스로 돌리게 되면 새로운 ‘복지’마저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래도록 장애인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한 경험이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필요를 더 느끼게 한 것 같네요.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꽤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등급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장애인 수당을 장애인기본소득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보편적 기본소득과 장애인 특별수당을 결합하는 식으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불리할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제도 기본소득에 대한 각종 오해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수급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소득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보편적 기본소득의 최소치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비와 별도로 장애인 저소득층에게는 장애연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이 부분 역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부자나 저소득층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과 별도로 '장애연금'을 확대 개편하는 '보편적 장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충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에서 사시죠. 충청북도와 청주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 말씀해주세요.

대학을 가기 위해 처음으로 청주에 버스를 타고 들어왔는데 '가로수길'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맑고 도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미세먼지가 심한 곳으로 1~2등을 다투는 지역이 되긴 했지만요.

전 딱 이 규모의 도시가 좋습니다. 저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뚜벅이'에게도 편히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교통체계가 있는 도시입니다. 수도권에 가면 길에서 사람과 부딪치지 않게 피해 다녀야 해요. 사람만 봐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청주는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좋고요. 각종 교육, 문화

시설과 의료, 복지제도도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청주사람과 대화하면 속내를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30년을 함께 살았더니 '사람들은 원래 그래' 하지만 타지 분들은 조금 적응하기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아 청주는 충북 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표준말을 쓰고 말도 느리지는 않아요.

청주는 교육의 도시, 직지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4개의 행정구가 있고 85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입자의 수가 전출자의 수보다 약간 많은 지역이라 미세하게 아직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고요.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살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특단의 정책이 없으면 청주도 이후 전출자가 많아질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까지 의미 있는 정치적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 그런 충북에서 지역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 '인공지능'의 충격적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미래의 정책에서 현실의 정책이 되는 순간이라고 전 느꼈어요. 기본소득운동이 충북에서 필요하다 생각하게 되었고 2016년부터 기본소득 대중강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기본소득 대중강좌를 진행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있었지만, 큰소리치면서 충북대학교 문화관 1층을 대여했습니다. 강사도 강남훈 교수님을 초청했어요. 한데 대중강연이 11월 말이어서 제법 추워서 그런지 유인물을 나눠줘도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주변서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봐 '걱정' '걱정' 했습니다. 강남훈 교수님까지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다행히 70여 명이 참여해 주셔서 선방했지요. 그해에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청주도 함께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 및 기본소득캠페인을 12회 정도 진행하면서 나름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런 일을 함께하는 '멀티인생'이다 보니 집중을 못해 계속 늦어지다가 2019년 9월에서야 기본소득층



북네트워크를 창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충북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만들고, 또 ‘충북형 기본소득’에 대해 구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지역에서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부터 고민하던 지점입니다. 지역에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미래당, 녹색당, 노동당이 있었고 이를 연계해 ‘청년기본소득’운동을 전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서도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민중당 충북도당도 청년수당, 농민수당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을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집담회와 강연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2020년 2월에 기본소득 연대모임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충북 정치인들은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특히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충북은 잠잠하지요. 충북에서는 지역의 청년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이런저런 ‘직업’이나 ‘창

업’ 지원책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즉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청주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조금 능력 있는 청년들은 타지로 떠나려 하고 청주에 남은 청년들은 ‘자신감’보다 ‘루저’의 이미지와 싸워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삶에 대한 안정뿐 아니라 ‘청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기본소득정치네트워크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본소득 정책 제안’을 하고, 이후에는 청년기본소득조례 등 청년기본소득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 충북형 기본소득은 ‘충북의 청년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문득, 청주에 “청년놀이터”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가 생각나는군요.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인구여야 한다는 “청년”들이 일은 안하고 노는 곳을 만든 거지요! 충북네트워크 회원들도 함께한다고 하던데, 청년들이 왜 그런 건가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은 힘들고 지쳤을 때 갈 곳이 없습니다. 밥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마음이 답답할 때 대화할 사람도 적습니다.

수많은 카톡방이 직접 만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전에 강제로 ‘개인화’된 거지요.

21세기 한국의 청년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국 사회를 만든 것도 아닌데 한국 사회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청년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면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하고요. 알바도 해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지원하는 관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만나요.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놀아야 하고요. 한데 현실적으로 놀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돈’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작한 게 ‘청년놀이터’입니다. ‘나를 위해서 놀자.’, ‘서로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놀자.’ ‘그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자.’ 한데 청주시에 의외로 이런 제안에 ‘응답’하는 청년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놀이터의 경험은 충북형 기본소득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휴식도 삶의 구성부분입니다. 청주에서 구상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휴식을 ‘현실의’ 휴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중소도시 청년들이 경쟁을 위해 대도시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데 기초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충북형 기본소득은 사실상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범주형 기본소득을 시도하려 할 때 늘 고민이 되는 것은 이 범주형 기본소득이 과연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에 기여하는가입니다. 충북형 기본소득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청주형 기본소득의 핵심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전형적인 범주형 기본소득이에요.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범주형 기본소득과 다르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직행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소득형태로 진화가 가능한 현금성 복지로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 현금성복지의 핵심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입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다릅니다. ‘노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노동’을 해서 ‘복지’를 준비하고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복지’를 제공한다는 현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노동’을 안 해도 국민의 ‘최소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충북형 기본소득이 잘 진행되어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지역네트워크들과 한국네트워크에 바라는 게 있을까요?

타 지역보다 늦게 시작해서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전이나 전주의 기본소득실험은 우리 활동의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충북네트워크는 ‘청년기본소득실험’을 통해 지방정부에 ‘청년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국네트워크와 타 지역 네트워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북의 다른 회원들에게, 기본소득 공동행동에 참여한 여러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뭐 이제 시작이라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항상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그 단체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 충북네트워크 회원 여러분의 힘으로 충북에 기본소득의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또한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을 위해서 결단해주신 정당들에 감사드리고요.

기본소득은 미래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보가 충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달 50만 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된다면, 송상호님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딱 일주일씩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거든요. 그리고 잠시 접었던 별과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화는 다큐멘터리다

— 홍상수 식의 영화를 보다가

이희중

시인

어떤 옛날 영화를 보면
내가 살던 세상이 슬쩍 보이지.

꾸며낸 이야기 뒤, 멀리
영화 만드는 이들이 미처 손쓸 수 없었을
산 강 들 바다 그리고 바람과 햇살
널리 그냥 있는 것들, 더 가까이
내가 돌아다니던 허술한 소도시, 눈에 익은 탈것들,

저런 전화를 걸고 저런 데서 뭘 마시고
저런 담배를 피며 저런 볼펜, 타자기, 컴퓨터로 일했었지.

저기 골목 들어서면 어디 그 시절 내가,
알던 사람들이, 사랑한 여성들이 다 있을 것 같아,
초점 희미한 곳 군중 속과 뒤를 살피지.

공기도 맑았고, 몹쓸 역병도 없던,
궁핍했으나 그래서 어울려 떠돌고 모여 다닐 일이 더 있던
내 젊은 날의 山川과 마을이 화면 먼 곳에 있지.

언젠가 미래의 영화를 보게 되겠지.
지금보다 늙은 내가 사는 세상,
이윽고 내가 없는 세상까지도.

빵을 굽는 동안

신경숙

소설가

그가 빵을 구워볼까 생각한 것은 새벽 3시 무렵이었다.

이스트가 있을까? 그는 통증 때문에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이스트를 찾아보기 위해 가스렌지 아래 잡아당기게 되어 있는 다용도 서랍을 열어보았다. 뜯어보지도 않은 월계수 잎 봉지가 보여서 꺼내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월계수 잎 봉지를 보는데 엉치에서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훅 쓸렸다. 이게 왜 여기에 있나? K가 사다놓은 것일 수 있다. K는 곧 잘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그는 월계수 잎을 처음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이스트는 봉지가 접혀진 채 페페로니와 통후추 사이에 끼어 있었다. 페페로니와 통후추도 그는 처음 보는 것이다. 어느 새 바깥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내리는 비는 겨울비인가, 봄비인가. 그는 통증 때문에 주춤거리며 가스렌지 바로 밑칸을 열어 통밀가루와 강력분과 호밀가루를 개수대 옆에 꺼내놓았다. 어느 날 K는 그에게 한 번도 안해 본 일을 해 보자고 했다. 통증 때문에 고통 받는 그를 위한 제안이었다. 생각해보니 K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는 모르지만 K는 그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을 것이다. 그가 빵은 무슨 빵을 만드냐고 심드렁해 하자,

그럼 적을 한 사람 만들어보든지. 혹시 알아. 그 적을 미워하다 보면 통증을 잊을는지.

K의 말에 그가,

적을 어떻게 한 사람만 만들어? 얼른 세어도 백 명은 되는데

하자, K가 헛웃음을 웃었지. 말이 안 되는 소리도 곁에서 들어주려고 노력했던 K였다. 그랬던 K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K는 떠난 것일까? K가 돌아오지 않은 후부터 그는 문득 문득 자신이 여태 한 번도 안해 본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자각했다. 한 번도 안해 본 일을 하고 있으면 K가 곧 돌아오거나 한다는 듯이. 왜 그렇게 매사가 비관적이야? K가 남긴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다. 아마 두 번 째로 K가 그에게 많이 한 말은 왜 아무것도 안하려고 해? 일 것이다. 그는 가끔 문 쪽을 바라보며 자신이 비관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K가 떠났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K가 떠나고 나니 그에게겐 통증만 남았다. 통증을 참으며 한 번도 안해 본 일들을 생각하다가 그는 살았다고 할 수가 없군, 자신에게 투덜거렸다. 한 일보다 안한 일이 너무 많아 세어볼 수가 없었다. 실직을 하고 마흔일곱 번 재인가 이력서를 쓰고 그제 허사로 돌아간 후에 그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 살

아온 지 삼년 쯤이니 당연한 결과다. K의 부재는 홀로 남은 그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그는 자신이 안 해 본 일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안해 본 일을 좁히기 위해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일들을 노트에 적어보았다. 권투를 배워보기 위해 도장에 나가보는 게 세 번째에 적혔고, K와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빵을 구워보는 일이 열 번째인가에 적혔다.

간밤에 그는 새벽 3시가 되도록 왼쪽 엉치 통증 때문에 잠을 한 숨도 이루지 못했다. 앉아 있기도 서 있기도 불편한 통증이었다. 이게 통증이라는 한 걸까? 지금 겪는 통증은 여태 그가 경험한 통증들과는 결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두통이나 요통을 겪을 때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거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통증인데 그가 겪는 엉치 통증은 깨지거나 끊어질 것 같은 게 아니었다. 쑤시거나 패이는 것 같은 통증도 아니었다. 엉치가 감각이 없어지는 게 싫었다가 엉덩이 쪽으로 내려오며 뒤틀리는 것 같다가 어디랄 것 없이 엉치와 엉덩이가 서로 잡아당기는 것 같다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저릿함이 왼쪽 다리 바깥쪽을 타고 발바닥까지 이어졌다. 저릿한 통증이 발바닥까지 전달될 때는 발을 딛는 감각이 무뎌지고 왼쪽 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도 모르게 오른쪽에 힘을 주곤 했다. 지나치게 오른쪽에 힘을 주어 기우뚱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이게 벌써 5개월 쯤이었다.

그가 K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빵 만드는 법을 읽을 때도 통증은 엉치를 휘감았다.

재료: 호밀(또는 통밀) 75g 우리밀 (강력분 혹은 중력분 175g, 물 75~80g 꿀 (또는 메이플 시럽) 7g 소금 5g 이스트 6g.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저울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는 난감한 느낌이 들었으나 언젠가 까사미아라는 곳에서 사온품으로 받아놓은 저울이 기억이 나서 그걸 찾기 위해 식탁의자를 끌고 싱크대 앞에 세워둘 때도 통증은 그의 입에서 아파, 혼잣말이 나오도록 허벅지 외곽을 타고 내려왔다. 저울은 싱크대 맨 윗칸 구석에 놓여있었다. 가운데 붉은 선을 두고 위는 0에서 2kg, 아래는 0에 5 Lb로 표시되어 있는 저울이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저울은 불행히도 눈금이 0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는 동안 스스로 고장이 나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저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눈금은 맨 끝까지 튕겨지듯이 옮겨졌다가 그가 손을 떼자 다시 앞에서 삼분의 일 지점에 머물렀다. 뜯지 않은 통밀가루 봉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아 보았다. 눈금은 또 빠르게 끝까지 튕겨졌다. 그는 얼른 통밀봉지를 들어올렸다. 그는 잠시 저울 위에 눈에 띄는 대로 무엇인가를 계속 올려놓았다가 집어내는 무의미한 일을 반복했다. 먹다 남긴 반쪽의 사과를 올려보고 호두 몇 알을 올려보고 작은 접시도 올려보고 소독용 에탄올도 올려보다가 책을 한 권 올려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저울은 비명을 지르듯 끝까지 눈금이 튀곤 했다. 저울에 뭔가를 올려보는 걸 그만두고 그는 저울 안을 깨끗이 닦아냈다. K가 써놓은 레서피엔 재료들의 그램 수가 정확했다. 어떻게 해도 0으로는 맞춰지지 않는 저울에 그는 그의 짐작대로 통밀가루와 호밀가루와 강력분과 이스트의 비율을 저울로 재서 스펀볼에 담고 메이플 시럽을 넣고 물을 넣어 주걱으로 저었다. 분분한 가루들이 부엌바닥으로 날렸다. 가끔은 눈 속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반죽이 어느 만큼 뭉쳐지자 그는 싱크대 바닥을 닦아내고 그 위에서 반죽을 치냈다. 손가락마다 아직 덜 섞인 반죽들이 달라붙었다. 내 엉치에도 통증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건가? 그는 울적해졌다.

이 통증을 처음 만났을 때는 곧 가라앉겠지 생각했다.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경험한 통증들의 시작과 퇴행로는 출처가 불투명했다.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쑤시거나 발목이 당기거나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가 도 찜질을 하고 지압을 받고 혹은 침을 맞으면 또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여겼다. 왜 무엇 때문에 이 통증이 시작되었는지 그는 기억나지 않았다. 5개월 전에 갑자기 엉치가 불편해 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더니 나중엔 엉덩이 전체로 번졌다. 그동안의 찜질, 지압, 침이 통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통증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검색 창에 “통증”이라고 써 넣어봤다.

통증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신체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이나 감정적 경험을 의미한다

불쾌한 감각이나 감정적 경험? 그는 검색된 창에 쓰여진 통증에 대한 해석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특히 감정적 경험이라는 문구를.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고통에 휘둘리는데 이걸 두고 감정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나, 감정적 경험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자신이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일까? 싶은 생각에 이르자 그는 자신이 모국어와 제대로 소통도 못하는 인간이 되었는가... 싶어 더 울적해졌다.

K는 반죽기가 없으면 손으로 반죽하면 되고 끈기가 생길 때까지 한다고 써 두었다. 그는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치대면서도 무엇을 두고 끈기라고 말하는지를 몰라 치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죽을 폄다가 오므렸다가 다시 뭉갸다가를 반복했다. 손목이 아파왔다. K가 했다면 K의 손목도 아팠을까? 그는 K의 필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끈기가 생길 때까지 반죽을 하다가 따뜻한 곳에 뒹서 50분간 1차 발효를 시킨다, 고 쓸 때 K는 혹시 이 순간을 짐작했던 것 아닐까. 그는 반죽을 동그랗게 뭉쳐 볼에 담고 입구를 면포를 둘렀다. 따뜻한 곳에 두라고 했으니 오븐 안이 적당하겠다 싶어 오븐 안에 반죽이 담긴 볼을 넣었다. 무선주전자에 물을 데워 그릇에 따라 물그릇도 볼 옆에 두었다. 이만 하면 따뜻할 것이다, 생각하며. 1차 발효는 50분이라고 해서 그는 똑딱 소리가 나는 타이머를 50에 맞춰두었다. 반죽을 하는 동안 한 순간도 가라앉지 않던 통증은 손을 씻을 때도 더 심해져 그는 젖은 손으로 허리를 받혔다. 부엌 창 쪽에서 빗소리가 스며들었다.

그는 나름 통증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오는 시골 마을에서 자란 그는 어려서 충치 때문에 극심한 치통을 앓았는데 어린아이의 치통을 관심을 가지고 극진히 돌봐 줄 만큼 시골 생활은 여유롭지가 않았다. 그는 이가 아플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집밖으로 나가 철로를 따라 걸었다. 먼데서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 철로에서 내려와 풀숲으로 들어가 기차가 철로를 쿵쿵 울리며 쏜살 같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신기하게도 그럴 때만 통증을 잊었다. 지층을 뒤집어버릴 듯 기차가 철거덕 철거덕 소리를 내며 눈앞을 지나갈 때만. 결국 충치 먹은 이가 흔들거리자 그는 실로 이를 묶고 그 실을 문고리에 걸은 다음 눈을 딱 감고 하나 둘 셋, 을 센 다음 앞으로 내달렸다. 실에 걸려 뿔혀 나온 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입안에 고이는 피를 꿀꺽 삼키며.

1차 발효가 끝날 때까지 그는 유튜버들의 빵 만드는 영상을 검색해 보았다. K가 메모지에 써서 냉장고 문에 붙여놓은 빵 만드는 순서들보다 영상을 통해 눈으로 보니 실감이 났다. 반죽기 없이 손으로 반죽할 때 체에 받힌 밀가루를 살살 뿌려가며 반죽을 하니 손에 달라붙는 것도 없어 보였다. 그는 가루를 체에 받히면서도 허리를 몇 번이나 폈다. 통증도 어김없이 밀가루같이 미세하게 그의 엉치 주변으로 퍼지고 있어서.

그동안 겪어왔던 요통 어깨통 두통들을 무엇이 가라앉게 했는지 그는 모른다. 그 통증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가 한 일들을 번호를 달아 써보면 열은 거뜰히 넘길 것이다. 그중 무엇이 통증을 사라지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통증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이 이제 그 통증에서 벗어났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 기간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흘 만에 보름 만에... 길어도 한달 이쪽 저쪽으로는 통증들과 작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엉치 통증은 겨울 초입에 시작이 되어 봄이 오려고 하는데도 여전했다. K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전시를 해서 그 오프닝에 갔다가 결국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만 있다가 왔다. 그날은 통증이 더 심해져서 아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앉으면 좀 가라앉고 일어서면 통증은 점액질처럼 엉치와 엉덩이 사이로 흐르다가 하체를 뒤흔드는 듯이 몰려다녔다. 오프닝은 보지도 못하고 전시관의 화장실 앞 의자에 구부리고 앉아서 그제야 병원에 가야하겠다는 생각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낼 수밖에 없겠다고. 다음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형외과 의사는 증상을 묻더니 무엇이 가장 문제냐고 물었다.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책을 한 권도 통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책요? 의사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곧 엑스레이를 찍어보도록 권했다. 통증은 그를 한 가지 자세를 지속할 수 없게 했다. 그는 앉아 있다가 통증이 오면 일어났고 서 있다가 통증이 오면 누웠으며 누워있다가 통증이 오면 앉았고 앉아있다가 통증이 오면 다시 일어났다. 가끔은 집 바깥으로 나와 동네 골목을 걷다가 걸을 수 없도록 아프면 보는 눈을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가 어디든 우선 앉았다. 앉아 있기가 불편해지면 서고 다시 앉고를 반복하다가 겨우 집으로 들어오곤 했다.

새벽에 빵을 만들기 직전에도 그는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없어서 앉아 있다가는 일어나고 서 있다가는 앉고 앉아 있다가 늑골을 반복했다. 그는 화풀이하듯 그때마다 몇 페이지 읽던 책을 바꾸고 또 바꾸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집어든 책이 여기저기 내팽개쳐졌다. 그 사이로 문득 K가 함께 해보자고 했으나 따르지 않았던 빵 굽는 일이 떠올랐고 빵 만드는 재료들이 집에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엑스레이를 들여다보던 의사는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아픈데? 그는 병원을 나오면서도 엉치가 뒤틀려 참을 수가 없어 계단 앞에 앉아 있었다.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해서 더 미세하게 볼 수 있는 엠알아이까지 찍었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었다. 이상이 없다는데 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세 군데의 병원을 더 찾아가 봤으나 그가 찾아내고 싶은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1차 반죽 시간이 지나자 그는 반죽을 꺼내 손으로 둥글게 공글렸다. 이번엔 랍으로 덮어씌운 뒤에 15분 쯤 기다리는 동안에도 유튜버들이 빵을 만드는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그들은 숨씨 있게 빵을 만들어내

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빵이든 만들지 못하는 빵이 없는 듯했다. 그는 이제 K의 문자와 유튜버들이 팀으로 알려준 디테일들을 섞어서 휴지기가 끝난 반죽을 편편하게 손으로 누르면서 공기를 빼고 다시 동그렇게 타원형으로 만들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손에 달라붙는 반죽의 느낌이 점점 좋아졌다. 보드랍고 늘어나고 달라붙고 떨어지고... 반죽은 손이 가는데로 모양을 바꾸는데 저항이 없었다. 자신의 영치에 둘러붙어 있는 통증은 그 사이에 발등으로까지 이어지며 이어졌다. 통증을 꺼내서 손으로 얹었다가 뒤집었다가 납작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통증에 대항하듯이 반죽을 최선을 다해 타원형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세 개로 나누어서 동그렇게 만들고 공기가 통하도록 가운데에 칼집을 내었다. 어떤 유튜버의 반죽에 칼집을 내는 칼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기회가 닿으면 그 칼을 구해야겠다고도 생각했다. K는 다시 50여분 2차 발효를 하면 반죽이 두 배로 부풀어 오른다고 써 두었다. 2차 발효 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는 다시 유튜버들의 빵 만드는 손놀림을 찾아서 보고 또 보았다. 동영상을 보는 재미중 하나는 그들에게 실패가 없다는 것이었다. 인내심이 필요하군, 싫은데도 발효를 마친 반죽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참으로 먹음직스런 빵으로 탄생했다. 호밀 빵, 크랜베리 바게트, 앙꼬빵, 치아바타, 영국 사람에게 직접 배웠다는 스콘들이 먹음직스럽게 네모나게 둥글게 길다랗게 척척 구워져 나왔다. 빵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 빵칼로 막 구워진 빵을 잘라낼 때 바삭한 소리는 고소한 빵 냄새를 단번에 연상시켰다. 누구도 실패가 없었다. 반죽들이 오븐 안에서 노릇노릇하게 빵이 되어 구워져 나올 때마다 그는 눈이 반짝거렸다. 반죽을 시작한지 3시간이 지나 그도 드디어 빵을 굽는 시간을 맞이했다. 예열을 위해 오븐 온도를 230도로 맞췄다. 세 덩이로 나눈 반죽을 정성스럽게 오븐에 넣었다. 예열된 오븐의 온도를 다시 190도에 두고 타이머를 25분에 맞췄다. K는 오븐 구석에 물그릇을 두고 구우면 겉은 더 바삭하고 속은 더 부드럽게 구워진다고 써 두었다. 그는 물그릇을 오븐 구석에 두고 문을 닫았다.

25분 후 그는 세 개의 돌덩이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새벽 3시부터 3시간 30분을 들여 그가 만들어낸 것.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딱딱한 돌이 되어 나온 자신의 실패덩어리들을 그는 바라보았다. 서랍을 열고 K의 빵 칼을 꺼냈다. 칼날이 빵인지 돌인지에 들어가질 않아 자를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참담한 실패를 내려다보다가 뭔가 이상해서 허리를 폈다. 그는 정말 이상해서 빵 칼을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서 식탁의자까지 걸어보았다. 내친 김에 현관문을 열고 나와 비에 젖어있는 대문까지 걸어보았다.

지난 5개월 동안 그를 까무러치게 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미-재난적 상황과 '아름다운 나라'라는 꿈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1.

낮은 곳을 향한 의지와 공정한 분배의 열망; <두 교황>의 경우

<두 교황>을 봤다. 긴장감 넘치는 영화였고, 역동적인 영화였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의아한 눈빛들이 느껴진다. 인정한다. 나도 안다. <두 교황>을 보고 역동성을 말하는 것은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일반적인 감상평이기 힘들다. <두 교황>은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두 노인네(?)가 나와서 각자의 인생을 들려주고 들어주는, 그것이 전부인 영화이다. 그런데, 내게, <두 교황>은 근래 내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긴박감을 주는 영화였다. 나는 <두 교황>의 두 노인네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보면서, 그리고 보고 들으면서 마치 <본> 시리즈

즈의 맷 데이먼이 펼치는 카체이싱 장면이나 <용의자>에서 공유가 보여준 후진(後進) 카체이싱 장면을 볼 때만큼 긴박감을 느꼈고, 또 마치 왕가위 감독의 <일대종사>의 부드럽구면서도 절제된 액션신이나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빌>의 미학적으로 통제된 각진 액션신, 그리고 나홍진기의 <추격자> <황해>에서의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을 보는 듯한 미친 역동성을 맛보았다. 두 노인네가 장소를 몇 군데 옮겨가며 대화를 주고받는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러니 당연히 거의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장면뿐인데, <두 교황>은 보는 내내, 그리고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앞질러 말하자면 <두 교황>은 진정한 대화란 것이 한편으론 얼마나 다이내믹 하고, 다른 한편으론 얼마나 위대한 행위, 그러니까 액션인지를 알려주는 영화였다.

두 노인네의 나지막한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숨 막히게 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고 사후적으로 추론해 본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대화를 주고받는 두 노인네가 둘 다 교황, 그러니까 한 명은 전직 교황 다른 한 명은 현직 교황(영화에서는 현직 교황과 후임 교황)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교황이 누군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교황은 “가톨릭교의 최고위 성직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전(全) 가톨릭교회의 우두머리인 로마 대주교”이다. 한마디로 교황이란 전 세계 13억 명 가량의 가톨릭교도를 대표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교황들의 신을 향한 믿음과 열정, 그리고 그것에서 출발한 종교적 진리에 대한 실천의 의지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고 측량하기 힘든 경지에 올라서 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터이다. 어떤 면에서 교황이란 존재는 가톨릭교의 총화이자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높은 경지에 올라선 두 존재가 주인공이니, 그리고 그들이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신의 뜻에 따라 만나 말을 주고받으니, 긴장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아니, 지켜보다 보면 긴장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두 교황>에 등장하는 두 교황은 교황의 역사에 있어서, 더 나아가 가톨릭의 역사에 있어서 특히나 예외적인 존재들이다. <두 교황>의 한 축인 베네딕토 16세는 종신직인 교황 역사상 두 번째로 자진 사임한 교황의 역사에 있어서 문제적인 흔적을 남긴 존재이고, 또 다른 축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초의 남미출신 교황으로 알려져 있다. 두 교황 모두 다 오랜 가톨릭 역사에 있어서 뚜렷한 흔적을 남길, 아니 이미 선명한 족적을 남긴 사건적 존재들인 것이다. 여기에 두 교황은 가톨릭 역사상에 가장 극단적인 지향점을 보이고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베네딕토 16세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교리해석과 보수적 성향으로 가톨릭 정통 교리를 강조한 인물이다. 그는 특히 동성애와 이혼, 인간복제, 콘돔 사용, 혼전 성관계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고 혁신하려는 해방신학 등을 세속주의, 행동주의로 규정, 단호하게 선을 긋고 기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 동성애, 안락사 등 신학적 이



슈에 있어서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미혼모 세례 거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인물이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관용을 촉구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배경과 신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도 소통과 대화를 마다하지 않는 존재이다. 이렇게 다른, 달라도 너무 다른, 게다가 이제까지 가톨릭의 보편성과 업적을 각각의 방식으로 집대성한, 그래서 비교불가능하고 측량불가능한 인식의 넓이와 깊이를 지닌 두 인물이 만나 자신들의 전존재를 걸고 대화를 나누어가는 것이 바로 <두 교황>인 것이다. 당연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깊은 내공이 묻어나올밖에.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또 그 얼마나 부드러우면서도 치명적인지, 아니 말의 내용은 살벌하기 짝이 없는 데도 그 말투는 또 얼마나 녹아내리듯 부드러운지. 그러니 <두 교황>을 보는 내내 손에 땀이 찼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해야 하리라.

<두 교황>이 그 특유의 극적 긴장으로 보는 이들을 경탄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두 노인네가 진정한 대화란 것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두 노인네는 그간 누구에 못지 않은 치열한 자기의식의 실현과정과 자신의 전존재를 건 종교적 헌신으로 일가를 이룬 이들이다. 한데, 이 두 노인네들, 대단하다. 자기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다. 못한다. 어떤 결여와 결핍을 느끼고 절대정신에 도달하기 위해 또 다른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의 권위에 기대어 독백을 이어나가는 대신 잠깐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말에 대한 혹은 상대방의 말에 관한 말을 한다. 서로의 독백에서 시작하는 말은 곧 서로의 말이 뒤섞이고 겹쳐져 놀라운 말의 향연이 된다. 그리고 둘은 보다 고차의 둘이 된다. 둘이 만나 둘의 말이 맞부딪치는데 그중 어느 한 사람의 말이 다른 한 사람의 말을 집어삼키거나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살아남는다. 물론 이전과 같은 형태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이합집산이 일어난다. 상대방에 의해 검증된 언어들은 자기 안에 그대로 남기고 상대의 언어 중 자신의 결여를 메울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에게 옮겨주고 싶은 언어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두 사람 모두 다 더 밝아지고 더 빛나는 언어체계를 지니기에 이른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주고 받더니 끝내 서로의 역사를 내면화하여 상대방을 만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숭고한 존재들로 올라선 것이다. 만약 바흐찐이 살아서 이 장면을 보았다면 이를 두고 망설임없이 ‘대화의 진리성 혹은 진리의 길로서의 대화’라고 이름붙이고 환호했을 듯싶다. 하여튼 그만큼 <두 교황>은 대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편 대화의 위력을 일깨워주는 바로 그 작품이다.

<두 교황>이 나에게 그토록 큰 긴장감과 긴박감을 준 마지막 요인은 두 교황 중 한 인물과 연관이 있다. <두 교황>을 통해 비로소 진면목을 접하게 된 바로 현재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다. <두 교황> 속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랄까 부

드러우나 단호한 세계사적 개인이라 이름붙이고 싶은 인물이었다. 그는 그저 거
 듭거듬 낮은 곳에 임하려는 자세로 살아간다. 모든 것에 관용적이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나, 자신이 세워놓은 그 원칙에는 엄격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품격
 은 <두 교황>에 표현된 바에 따르면 죄책감 탓이다. 아르헨티나의 군부가 만성적
 인 경기침체의 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자비한 탄압 정치를 자행하던 ‘더러운
 전쟁’ 시절, 아르헨티나 예수회 총장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군부 정권과의 더
 긴 전쟁을 대비 우선 교권을 수호하고자 민중과 함께 군부정권에 저항하던 세력
 과 거리를 둔다. 그런데, 아뵘싸, 이 선택은 몇몇 예수회 신부와 신자들을 죽음으
 로 내몬다.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은 속죄의 그것이 된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군부 독재와 야합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난 그는 뒤늦게 알려진 ‘베르고글
 리오 리스트’를 내세우며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자신이 지키지 못한 그들을 좇아
 빈민가 사역을 충실하게 이어간다. 비록 최선을 다했으나 정의롭고 바람직한 결
 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자책과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자기 자신 안에 혹여 자신
 의 비겁과 비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욕망은 없는가 하는 처절한 자기반성은 그
 를 예수회 신부들이 끝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사회적 소수자들의 곁으로 이
 끈다. 그리고 그는 늘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지
 구상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 그것도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해진 경제적 불
 평등 문제와 조우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후의 삶이 이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
 었음은 물론이며, 교황이 되어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현장에 임재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거니와,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를 두고 인류 역사를 또 한 차례 변화시
 킬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샤를마뉴상 수상 연설에서 “지구와 인간의 노동
 이 맺는 열매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은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
 적 의무이다. 만약 우리 사회를 다시 판단하고 싶다면, 특히 청년들을 위해 품위
 있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만족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혜택을 지향하는 새롭고 포괄적이며 공
 정한 경제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유도하는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
 로의 이동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니와 이 말을 종합해보면 프란치스
 코 교황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도 기본소득의 이념에 깊이 찬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프란치스코 교황
 은 기본소득 세상을 운명으로 열망하는 행보를 멈추지 않는 바, 그러니 기본소득
 세상을 간절히 원하는 내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모습을 어찌 냉정하게만 바라
 볼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두 교황>을 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건
 네는 한마디 한마디에 숨막히는 기대와 긴박감을 느꼈던 핵심적인 이유이다.

2.

‘그녀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성혜의 나라>의 경우

그렇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밝힌 대로 ‘지구와 인간의 노동이 맺는 열매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이고, 그런 사회의 출발점은 ‘특히 청년들을 위해 품위 있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엄밀히 적용하자면, 우리는 그러나 기본소득 세상에 가까이 가기는커녕 아직 그 출발점에 서지도 못한 상태라 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 출발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천만다행 ‘지구와 인간의 노동이 맺는 열매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혹은 제도라는 형식으로 발명되어 있으나 그것의 전면적 도입은 아직 요원한 감이 없지 않고, 특히 ‘특히 청년들을 위해 품위 있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갈수록 난망해지고 있는 상태다.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1년 7개월만인 2020년 1월 30일 어렵게 스크린에 걸렸다가 안타깝게 스크린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정형석의 <성혜의 나라>는 우리의 청년들이 품위 있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구와 인간의 노동이 맺는 열매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담담하게, 무채색으로 보여주는 영화다. 그래서 더욱 먹먹한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에는 ‘성혜의 나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코언 매카시를 좇아 실제 내용에 따라 제목을 붙이면 ‘성혜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되어야 마땅할 영화다. <성혜의 나라>의 주인공 성혜는 현재 전형적인 프리캐리아트, 이 글의 말미에 살펴볼 박정훈의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닌가-알바노동자의 현재와 미래』에 따르면 ‘빠박’ ‘알바노동자’이다. 동시에 ‘취준생’이다. 한때 유력기업의 인턴 직원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다. 고발하나 돌아온 것은 해촉. 누구 하나 성혜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 아니, 만약 괜히 끼어들었다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성혜의 편이 되어 주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그녀들의 행동은 선의의 피해를 알리바이 삼아 악의 축에 편승한 것이니 성혜의 편이 되어 주지 않았다고 해야 하리라. 하여튼 성혜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결국에는 공황장애라는 심각한 증상을 앓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해자로 만든 전도된 가해자가 되어 회사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사회의 저주와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급기야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진다. 그녀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도, 대타자의 시선에 자신을 맡기는 굴욕을 감수해도 상징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상징질서란 (보이지 않는) 구조적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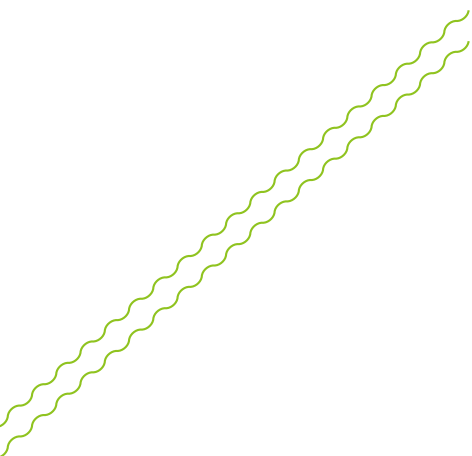


에 의해 지탱되는 바 사회구성원 전체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그 구조적 폭력에 저항, 그 폭력의 구조 혹은 구조적 폭력을 가시화시켜 상징질서 안의 모두를 공범자로 만든 성혜를 상징질서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성혜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상징질서의 바깥으로 미끄러진다. 기약 없는 취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당장 급한 생계비 혹은 생활비를 ‘알바’로 충당한다. 한밤중 편의점 알바로 시작하여 그것이 끝나는 신세벽엔 신문배달을 한다. 끼니는 주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으로 때운다. 이렇게 안간힘을 써서 균형을 맞추며 투쟁하듯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툭, 툭, 일이 생긴다. 착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아버지는 수시로 입원을 하고 어머니는 그 착하고 병든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외엔 관심이 없어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딸에게 문자를 한다. 그럴 때마다 성혜는 알바 시간과 배달 지역을 늘리는 것으로 겨우겨우 균형을 회복하지만 갑작스러운 일들은 그녀를 편하게 두지 않는다. 이렇듯 자신의 몸을 학대하듯 사니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몸이 편할라치면 갑작스레 방을 빼달라 하고, 등등 일이 끊이지 않는다. 그때 절친한 친구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고시원 월세를 빌려달라는 것. 순간 그것까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기엔 자신이 너무 지쳤다고. 결국 성혜는 거절한다. 얼마 후 다시 걸려온 전화. 성혜는 친구가 월세 때문에 자살했고 한 달 후에야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성혜로선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멘붕’에 ‘번아웃’ 상태가 된다. 성혜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자기 곁을 지켜주었던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한다. 이전과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자기에게서 떼어내는 자학적 결단을 감행한다. 자신의 뼈를 깎는 자멸적인 번제를 치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혜에게 닥치는 소식은 쉽다. 결정적인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온다. 설상가상. 첩첩산중. 교통사고로 부모 모두가 사망했다는 전언.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억을 받아주나 이제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헤쳐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눈앞이 깜깜하다. 가장 밑바닥이니 이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거라는 역설적인 희망을 위안 삼아 일어서려는 그때마다 뒤통수를 치는 치명적인 불행들.

성혜는 결정적인 선택지 앞에 놓인다. 하나는 끝 모르게 밀려오는 절망을 앓아서 기다리는 대신에 자발적 죽음을 선택하는 일, 다른 하나는 부모님 목숨값 5억을 방패 삼아 그토록 집요하게 성혜를 괴롭히던 현실 안으로 도피하는 일. 하지만 성혜는 불행에 빠진 일반적인 존재들이 선택할 법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거부한다. 새로운 선택지를 발명하고 그 길로 떠난다. 바로 상징질서 바깥, 현실 바깥으로 나가는 일. 성혜는 부모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5억원을 은행에 맡기고 40년 동안 한 달에 154만 원씩 나눠 받기로 하고 훌훌 세상 질서 바깥으로 간다. 성혜는 어쩔 수 없이 상징질서의 명령과 규약을 좇는 무엇이 되기로 하지 않는다. 세계의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대신 그것과 절연된 무위의 삶을 살기





로 결정한 것이다. 러셀식으로 표현하자면 ‘게으를 권리’, 아감벤식으로 표현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명쾌한 전망’에 자신을 맡기기로 한 것이랄까. 결국 성혜는 영화의 포스터에 적힌 표현을 따르면 ‘선택하지 않는 편을 선택’함으로써 <풍자나 자살이나>라는 택일의 논리로 교묘하게 주체를 포획하는 현재의 상징 질서로부터 탈주한다. 그리고 드디어 웃는다. 이렇게 보면 <성혜의 나라>는 ‘성혜의 나라, 그러니까 청춘을 위한 나라가 아닌 곳에서 그녀(들/그들)의 소중한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찾아낸 우울하면서도 명쾌한 탈존기’라 할 수 있다.

어렵게 찾아낸 길이기에 그 무위의 삶에서 그녀가 부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라가 보다 좋은 나라, 성혜를 위한 나라여서 비록 쉽지 않은 생활이라 하더라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잠시 만이라도 게으를 수 있었다면, 그래도 성혜는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까. 만약 평상시에 그녀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만 주어졌다면 그녀는 성추행 가해자와 보다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주변의 동료들도 그녀의 편이 되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녀/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그녀/그들의 ‘무엇이 되고자 열망’ 때문에 보다 인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에게 154만 원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기 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졌다면, 그래서 그녀의 그야말로 진정한 인간이고자 하는 열의와 성실성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폭발하듯 발산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녀들 덕분에 그녀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선순환의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녀가 부모님의 목숨값으로 한 달 154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녀가 사는 나라로부터 게으르고 싶을 때 게으를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었다면, 우리는 그녀가 우리 곁에서 웃는 모습을, 그 모습들이 모여져 우리 모두가 웃게 되는 세상, 그러니까 성혜를 위한 성혜에 의한 성혜의 나라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모두가 게으르고 싶을 때 게으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까지 잠시 여유로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주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일 아닐까. 다시 말해 기본소득 세상을 만드는 일 아닐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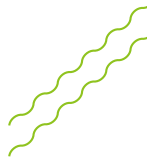
생의 비극성과 삼중의 억압 ; 『아직 멀었다는 말』의 경우

권여선의 신작소설집 『아직 멀었다는 말』을 펼쳐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권여선의 소설을 읽는 것이 힘들다. 아마도 내가 비평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



어서이지 않을까 한다. 사실 나는 권여선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감동하는 편이다. 나에게 그런 강렬한 떨림을 주는 작가는 권여선 말고는 별로 없다. 그런데, 명색이 비평가 아닌가. 그러니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내가 느낀 감동의 실체 혹은 원천을 개념화하고 맥락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나 할까. 한데, 나는, 번번이 이 단계에서 주저앉곤 한다. 식별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 도대체가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다. 처음 읽을 때는 너무 텍스트 안으로 깊이 들어가 숲을 볼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두 번 세 번 읽을 때라도 그 과몰입의 상태에서 헤어나와 숲을 보고 작품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어떤 일인지 매번 그 과호흡의 상태에 숨이 막혀 결국에는 그 어떤 개념화도 맥락화도 수행하지 못한 채 번번이 물러선다. 이번 『아직 멀었다는 말』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아니, 맥락화 근처에도 못 가본 것은 물론 과호흡 상태가 이전보다 더 격렬했다. 소설의 장면들은 아슴프레 흐릿한데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강렬한 정동들은 게릴라처럼 불쑥불쑥 내 머리를 휘저었다. 나중에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온 몸과 마음이 끓고 있는 듯한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촉발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내내 불안하기도 했다. 며칠 동안을 심하게 두근두근 하다가 또 때로는 지친 듯 늘어져 지냈다. 깜빡 잠들었다가 느닷없이 깨어나기 일쑤였다. 머릿 속은 안개 낀 듯 온통 희미한데, 그 희미한 안개 속을 저 멀리 반딧불이 명멸하듯 권여선 소설의 어떤 구절, 어떤 장면이 깜빡이다 스러져가곤 했다. 머리 속이 안개여서 권여선 소설의 한 구절이 명멸한 것인지 권여선 소설의 어떤 흔적들이 내 머리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번에는 어떻게라도 이 격양된 정동을 수습해야 할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았다.

이 어수선한 상태를 견딜 수 없어 소설집 말미에 붙은 해설을 읽었다. 『아직 멀었다는 말』의 해설을 맡은 평론가 백지은은 이 소설집의 중핵이 ‘생의 비극성’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라고 개념화, 맥락화하고 있었다. 이 말이 내가 권여선 소설에게서 느낀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는 않는 듯했지만, 나에겐 그 어떤 개념도 맥락도 없으므로, 백지은의 그것으로 타협하기로 했다. 듣고 나서 알게 됐다. 『아직 멀었다는 말』 속엔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들이 정말 여럿 있었다. 아하, 그렇구나, 권여선은 ‘슬픔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릴 정도로 현존재들의 생의 비극성,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어떤 결여를 메우려 하면 할수록, 전력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욱 더 우울해지는 현존재들의 현존형식을 천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읽는 내내 먹먹, 하고 울컥,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여튼 『아직 멀었다는 말』은 현존재들의 생의 비극성에 푹진해 들어가서 그토록 비극적인 삶을 반복하는 우리네 현대인들의 삶을 같이 아파하는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나는 『아직 멀었다는 말』에 집중적으로 그려낸 그녀/그들의 비극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그녀들처럼 “내가 어쨌다구? 내가 뭘, 뭘, 뭘? 뭘? 뭘? 뭘?”라고 절규하듯 읊조리는 상태로 빙의된 형



국이었다.

하지만 현존재들의 생의 비극성을 다룬 작품들은 많은 터이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존형식인 만큼 현존재들의 생의 비극성을 다룬 작품은 넘치고 넘친다고 해야 하리라. 한데 나는 왜 유독 권여선의 소설에, 그리고 『아직 멀었다는 말』 속의 비극성에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된 것일까. 나름 추론해 보자면 그것은 『아직 멀었다는 말』이 ‘현존재들의 생의 비극성’을 위치시키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고 동시에 그 문제들을 뒷받침하는 역사지리지의 깊이에 기원한다. 『아직 멀었다는 말』에 등장하는 그녀/그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의 최저지점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극한상황에 가까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그/그녀들은 당연히 이 최저지점으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며 최선을 다하지만 그 절망의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생사를 건 쟁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일은 요원하다. 즉 ‘아직 멀었다.’

새해가 되면 소회는 스물두 살이 된다. 옥탑방 계약은 소회가 스물셋 스물다섯 스물일곱 되는 6월마다 돌아온다. 이 년마다 보증금을 오백만 원씩 올려도 대출금 갚는 건 두 배로 늦어지고 월세를 올려도 마찬가지다. 처음 계획대로 갚는 다 해도 스물네 살 여름에나 다 갚을 수 있는데, 그 두 배가 걸리면 스물일곱, 스물여덟 살이나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이십만 원으로 한 달을……치약도 휴지도 생리대도 아껴쓰고, 아침엔 우유와 시리얼, 밤엔 호빵이나 식빵, 계란 한 판 사서 한 달을 먹고, 일주일 한 번 제일 싼 찌개용 돼지고기를 사고, 늘 두부와 콩나물, 김치를 아껴 먹고 깍두기를 담가 먹으며, 친구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들고, 십원 백원 포인트를 쌓으며, 스물일곱, 스물여덟 살까지, 병원비 칠만 원 가지고 이렇게, 아니 대여섯 번이면 삼십오만 원에서 사십이만 원……다신 안 온다. 다시는……

소회는 어느새 빌딩 쇼윈도 앞에 바짝 붙어서 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닦인 유리 너머로 외제 자동차들이 손에 잡힐 듯 반짝거린다.

내가 어쨌다고? 내가 월, 월, 월? 월? 월? 월?

소회는 다친 개처럼 유리에 대고 짚었다. 월, 월, 월, 외칠 때마다 유리에 김이 서렸다. (……중략……) 손톱 없어도 된다. 엄마 없어도 살았고 언니 없어도 살았는데 그깟 손톱 없어도 된다. (「손톱」의 일절)

이렇게 먼 출구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힘겨운데, 경우에 따라서 이들은 또 하나의 ‘아직 먼’ 듯한 시간관이라 할까 세계내적-위치 때문에 더욱 더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예정된, 예비된 비극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는 감각. 하루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이 자리가 맨바닥이 아니고 한참은 더 날개도 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공포는 이들

의 삶이 가지는 비극성을 더욱 고조시킨다. 이중억압의 상황이다. 이렇게 힘겨울 때 누구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대하여, 하위주체들에게만 무자비하게 어떤 관용도 없이 작동하는 상징질서에 맞서 잠시 숨돌릴 틈이라도 찾을 텐데, 그녀/그들에겐 그 누군가가 없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누구요?”

“많지요. 이를테면 방과후 코디라든가 배움터 지킴이, 초단기사서, 발명 실무사, 스포츠 강사, 그런 사람들까지 투표에 참여시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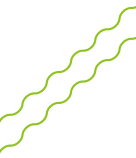
N은 이 새로운 가름선은 또 뭔가 싶었다. 그건 정규 비정규의 경계도 아니고 비정규 내에 추가로 설정된 라인이었다. 행정실 비정규직이나 이 개월 기간제인 자신에게는 투표권을 주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N은 알 수 없었다. 사안과의 밀접도를 보면 식당이 본관 1층으로 오든 새 건물에 있든 그 완공을 볼 수도 없을 자신이야말로 투표권이 없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N은 무엇 묻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다.〈너머〉의 일절)

이 망할 놈의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는 더 이상 떨어진 곳이 없는 하위주체들 사이에 계속 ‘새로운 가늠선’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법은, 법을 만드는 국가는 그 비인간적이며 반인간적인 ‘새로운 가늠선’들을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한다. 그러니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한 사업장 내의 단결과 연대도 불가능하다. 만인과 만인이 투쟁하고 경쟁하는 각자 도생의 삶만이 가능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내리눌러야 하는 정신적 동물왕국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아직 멀었다는 말』의 그녀/그들이 더욱 힘겨운 것은 그들이 이 이중억압 상황 속에서도 윤리적 존재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그/그녀들은 희망은 거의 없고 자칫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N은 계약기간이 지나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후의 상황을 상상해보았다. 그 선생님 좋았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라고 묻는 반장의 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반장이나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묻는다 해도 N은 그 사실을 알 수 없겠지만, 만약 그렇기만 하다면 학교를 그만 두어도 보람은 남을 것이다. 그런 목표로 남은 기간을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자, 비록 비정규직 잡급직이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어머니도 당신 자식이 그런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뛰었다.〈너머〉의 일절)

이제 어머니는 없다고 N은 생각했다. 오래전,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



하는 시간에 어머니는 삶을 놓아 버렸고 그 자리에 가끔 응응대며 울고 가래 때문에 그르렁거리는, 한쪽은 나무토막처럼 굳고 다른 쪽은 가시처럼 마른, 움직이지도 못하고 갑작스러운 경련만 일으킬 따름인 기저귀를 찬 작고 마른 생물체만 남았다. 어쩌면 그 생물체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일 수도 있었다. 활기도 자유도 없이 바짝 쪼그라든, 기한이 없는, 무기의 죽음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N의 머릿속에 소름끼치도록 확연하게 떠올랐다. N은 툭 뱉어내듯, 순식간이야, 하고 말했다. 그 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온 말 같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다만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견딜 수 없다는 듯, 모든 게 순식간이야, 순식간에 끝난다고, 순식간에. 하고 N은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가슴 한쪽에선 잔혹한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선 두려운 마음이 돌처럼 가라앉았다. 순식간에 끝나……

모든 걸 쓸어버리는 폭풍의 시간이 지나간 후 N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듯 허공을 올려다 보았다. 늦가을 오후의 별이 온실처럼 내리쬐이고 있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N은 흐느끼면서 생각했다.([너머]의 일절)

그녀/그들은 어떤 순간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상징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체가 되어, 그러니까 물신 혹은 자본주의-기계가 되어 괴물에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인간이어야 한다는 결단으로 괴물이 되고자 하는 충동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낸다. 하지만 이 용기와 결단이 그/그녀들의 삶을 희망적인 그것으로 만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상징질서의 벽이 완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그녀들은 결국에는 패퇴하고 말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그녀들의 인생은 더욱 비극적인 그것이 된다.

이렇듯 권여선의 『아직 멀었다는 말』은 현존재들의 생의 비극성에 주목하되, 그 생의 비극성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추적하여 맥락화하고 그것을 짚아보여준다. 그 결과 『아직 멀었다는 말』을 총괄하는 ‘아직 멀었다’는 말은 세 가지 뉘앙스를 동시에 품는다. 고생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 모두가 여기가 제일 밑바닥이라고 믿고 싶어하지만 밑바닥에 다다르려면 아직 멀었고, 이 막막함 속에서도 인간적이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목적하는 바 인간됨의 수준까지 올라서려면 아직 멀었다는 속뜻이 같이 담겨 있다. 어떤가. 이게 우리의 실존형식, 그리고 우리의 현실 아닌가. 고개를 약간만 돌려도 이렇게 힘겨운 비극적 상황, 인간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염원을 꿈꿀수록 더욱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인지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가.

만약 『아직 멀었다는 말』이 그려낸 비극적인 삶, 이게 우리네의 실존형식,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아직 멀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 생의 비극성에 절망하는 하위주체들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 여기가 밑바닥이라고 믿고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더 내려갈 밑바닥이 저 밑에 있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고, 그런 절망감 때문에 괴물이 될 수 있겠다는 공포에 식은땀을 흘리는 그녀/그들이 더 이상 더 멀어졌다는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녀/그들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일, 그리고 나라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녀/그들을 보호할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일. 『아직 멀었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바로 그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아직 멀었다는 말』의 그녀/그들과 같이 울고 웃다가, 웃다가 울고 보니, 아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무엇보다 먼저 기본소득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고맙다. 『아직 멀었다는 말』.

4.

‘알바노동자’라는 실재와 ‘제3노동시장’의 발견 ;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닌란 말인가』의 경우

상징질서에 가려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하고 외설적인 실재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상징질서가 불러주는 대로 사는 순종하는 신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니, 항상 눈을 들어 세상 너머를 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는 하나,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상징질서 너머를 보려면 세상 곳곳을 누비는 발품을 팔아야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을 행해야 하는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 누군가 용기를 내서 먼저 세상 바깥 혹은 바깥 세상으로 나간 이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실재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모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재 혹은 실재를 짚inch하게 인지하게 해준다. 최근 그런 충격적인 책을 한 권 만났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의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닌란 말인가』라는 책이다.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닌란 말인가』는 ‘알바노동자의 현재와 미래’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알바노동자’의 실상을 다룬 책이다. 알바노동자?, 그런데 웬 실재? 하실 분이 있을 터이다. 이 의문 역시 인정한다. 당연히 고도 합리적인 의심이다. 우리 주변에 이미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하고 ‘알바노동자’들을 상징질서에 가려 보이지 않는 실재라고 하다니! 이런 무책임하고 무모한 실재주의자같으니! 할 거 같다. 맞다. 우리가 흔히 ‘알바생’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수시로 목도하는 흔하디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그들을 ‘알바



노동자'라 부르는 순간, 그리고 이 책에 이끌려 '알바노동자'의 실재 혹은 실상은 접하는 순간, 그들은 순식간에 우리들의 실재로 전신한다. 너무 낮선 것에서 낯익은 것을 발견할 때 섬찟함을 느끼듯 너무 낯익은 것에서 낯선 것으로 다가올 때도 섬찟함에 전율하게 된다.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는 이중 우리에게 익숙한 '알바생'들을 '알바노동자'라는 전혀 낯선 것으로 다시 읽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낯선 실재의 세계로 이끌거니와 동시에 우리의 상징질서를 보다 고차의 상징질서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에서 다루어진 '알바노동자'의 세계가 낯선 실재로 다가오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더 많은 의미망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외한인 내게는 이것 정도가 눈에 띄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알바노동시장이 너무 크고, 알바 노동시장의 노동자, 이 책의 표현의 따르자면 '직업없는 사람들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는 알바노동시장이 거대해진 이유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이들을 조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말한다. 그 결과 알바노동은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제1노동시장인 정규직, 제2노동시장인 비정규직과 구분해서 '제3노동시장'이라 이름붙인다. 말하자면 정규직, 비정규직과 비견할 정도로 알바노동 시장이 커졌다는 것이다. 둘째 알바노동자들의 고용 시간이 점점 더 초단기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알바노동 시장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간단할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않는, 그것을 오히려 합리적 경영이라고 절대 신봉하는 이 신자유주의적 세상에서 일이 있을 때 사람을 고용해 쓰고 일이 없으면 곧 버리는 알바노동 시장은 얼마나 매혹적인 노동시장일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알바노동자를 점점 더 초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니 바로 '플랫폼 노동 시스템'의 도입이다.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의 표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합리성과 플랫폼 노동이 결합되면서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2년, 알바노동자를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쓰고 버렸다면, 플랫폼 노동은 1초 단위로 쓰고 대기하게 한다"고 말한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 실업자들은 많아질 것이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플랫폼 노동 시장으로 밀려들 것이며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노동자가 일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지는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그러니 당연하게도 플랫폼 알바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가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 상황이 무색하다. 이처럼 알바노동자는 노동의 과정과 노동의 결과로부터의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인격적 보호도 철저하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이 열악한 시장에서 탈존의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하

자면 현재의 상징질서가 지시하는 삶,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시대에서 승리한 부유한 삶, 약육강식에서 약자를 짓밟고 승리해 승자독식을 행복이라고 믿는 삶을 거부하고 ‘게으름 권리’를 누리려는 존재들이 알바노동자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상이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니와 이를 통해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비교적 명료하다. 제3노동시장이라 이름할 정도로 한국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을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3노동시장이라 불리는 알바노동자의 시장은 향후 노동시장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들 알바노동자를 별거벗은 생명으로 방치하는 대신 서둘러 법망 안으로 끌어 들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 미래의 인류를 위한 사전조치라는 것.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는 ‘알바노동자’를 위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알바노동자’들이 가지는 잠재성을 극대화하여 우리 사회에 잠복된 모순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극소수의 인간만이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극소수의 자리를 가지고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또 다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는 이것을 ‘인간의 길’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다. 노동의 신성함을 믿고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들은 정규직의 삶을 살고 노동보다는 활동을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삶의 보람과 자존감을 느끼는 이들은 적은 시간을 일하는 비정규직과 알바노동자의 삶을 살게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알바가 직업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일해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아실현을 위해 쓰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아니, 간단하다고 말한다. ‘노동 시간 단축-최저임금 1만 원-기본소득이라는 삼각나침반을 갖’추면 된다는 것. 그러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외됨 없이 진정으로 인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린다는 것.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에서 제시한 ‘인간의 길’을 두고 너무 세상을 간단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듯하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을 듯하다. 전세계의 엄청난 인구가 뒤엉켜 사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상인데 그렇게 간단하고 명쾌한 전망으로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세상이 복잡하므로 그러면 지금 이대로 살아야 하느냐고. 지금처럼 이렇게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인 원리에 묶여 모든 사람이 극

소수의 일자리를 놓고, 기계와의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며 피흘리며 살아야 하느냐고. 이렇게 줄곧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이라는 ‘자본의 길’, 그러니까 ‘소외된 과잉의 노동과 무한경쟁-저비용 고효율-생산의 공공성과 소유의 사적(독점적) 성격과 부의 불평등’이라는 삼각나침반의 길을 걷다가 이제 지구 위의 생명체 전체가 벼랑 끝에 섰는데 그런데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느냐고, 결국 벼랑 밑으로 떨어져야 하느냐고.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 않은 길, 인간의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제 논의를 종합하자.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는 우리 곁의 ‘알바 노동자’라는 낯익으면서도 낯선 실재를 매개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예각화하여 보여주고, 더 이상 벼랑 끝을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인식상의 전환 혹은 방향전환이 필요한지를 숙고하게 하는,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증상을 발견하고 그것의 치유책을 제시한 또 한 권의 ‘바로 그 책’이다.

5.

코로나19라는 재난과 ‘아름다운 나라’라는 꿈

하수상한 시절이다. 코로나19로 그야말로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역사적 연속성이 갑작스레 중단되는 예외상태적 상황이기도 하고 재난적 상황이기도 하다. 연이은 초유의 사태, 미증유의 사태로 세계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의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의 대부분은 미지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보다 근원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도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레 재난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앞서 <성혜의 나라>, 『아직 멀었다는 말』,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에서 살펴보았듯 우리 사회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자존은 물론 생존도 힘겨운 이미-재난의 상황이었고, 만약 이 표현이 너무 과하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의 상당수는 이미-재난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는 말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재난적 상황이 갑작스레 도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이미-재난적 상황의 실재 혹은 실체가 드러났다고 해야 한다. 즉 코로나19로 일상적인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역사적 연속성이 갑작스레 파쇄되자 그것들에 가려 보이지 않던 우리의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맨모습이 드러났을 뿐인 것이다.

흔히 하나의 상징질서가 흔들려 무시무시하고 외설적인 실재들을 목도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상징질서로 복귀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정이 꼭 그렇지는 않다. 하나의 사건은 한 사회를 격동시키지만 그 사건이 한 시대를 단절하는 그것으로 작동하려면 상당수의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건에 갖든 사건성을 충분히 내면화하고 더 나아가 그 의미망이 제도로 구현되어야 한다. 역사의 복원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하다. 도대체가 결정적인 균열처럼 보일 때도 대부분 원상복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우를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광주를 보고 그리고 그 광주를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왜곡하는 상징권력의 악마의 얼굴을 보고서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악마적 권력이 다스리는 질서는 지속되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단순 도구로 전락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전체주의적 민낯을 보고도 우리는 세월호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질서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란스럽다고 이전 질서로 빨리 회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낸 커다란 균열을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발견한 실재적 진실을 자기화하고 제도화하여 이전과는 다른 상징질서를 발명하는 일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성혜의 나라>『아직 멀었다는 말』『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등이 짚어낸 증상이 우리의 실재적 진실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코로나 사태의 수습이 아니다. 우리는 이 재난적 상황을 과장하여 이미-재난적이었던 그때로 그대로 복귀해서는 안된다. 수습해서는 안되고 수정해야 하고 수술해서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상징질서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 재난적 상황을 수습하는 데 동원된 수많은 정책 중 과연 어떤 대책이 가장 유효했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이미-재난적인 상징질서를 치유하는 대안으로 확정하는 것에 혼신을 힘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사건에 의해 잠시 모습을 드러냈던 현재적 의미로 충만한 진리는 곧 역사의 연속성 속에 묻혀버리는 까닭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 있을 뿐 그 사태가 우리에게 도래시킬 구원의 힘이 무엇인지 포착해낼 식견은 없다. 다만 누군가가 이미-재난적인 이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나라 같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준다면 기꺼이 동행하고 싶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



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김구, 『나의 소원』)

어떤가. 김구 선생이 꿈꾼 아름다운 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꿈꾸는 세상과 거의 닮아 있지 않은가. 또는 <성혜의 나라> 『아직 멀었다는 말』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닌란 말인가』 등이 염원하고 열망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기본소득 세상과도 유사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알게 된 우리 사회의 이마-재난적 상황을 일찍이 김구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넘어서면 어떨까. 우리가 꿈꿀 만한 세상이고, 그를 위해 전력투구해 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 이 지옥같은 이마-재난적 상황을 기본소득이 현실화된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이니.

종교와 기본소득

* 제목과는 달리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수용 정도를 소개하는 글이다. 그나마도 내용적으로는 ‘개신교와 기본소득’이라고 해야 적절할 것 같다. 기본소득을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identity)안으로 수용하려는 곳은 아직까지는 개신교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관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2019년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기조연사로 나선 애니 밀러Annie Miller,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 겸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타인도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인 불교의 자비심 등 깊은 인류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종교, 특히 일부 개신교의 모습은 여러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물질 만능의 세속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종교계도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종교를 불문하고 신도수가 급감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종교는 개신교이다. 개신교의 선교환경 악화는 개(個)교회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개신교가 지닌 개혁성·진보성은 크나큰 도전에 직면한다. 개교회주의는 개교회의 유지를 위해 배타적 선민의식을, 즉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를 조장·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선민의식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자신들의 올바른 신앙에 대한 세상의 박해로, 광기를 결기로 이해하는 태도에서 우려를 넘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작년(2019년) 6월 20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가 주관하는 기획토론회 “기본소득이 신앙이다”가 개최되었다. 기독교회관은 7·80년대 소위 “5가”로 불리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이끌던 상징이었다. 그곳에 위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당시의 운동세력에게 “강한 성이요 방패”와도 같은 존재였다. 기독교회관이 “5가”의 ‘형식’이라면 NCCK는 “5가”의 모든 단체들을 아우르는 ‘내용’이었다. 80년대 중후반 이후 운동의 중심이 (종교적인) ‘인권과 양심’을 넘어서 (사회과학적인) ‘사상과 이념’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상징성과 중심성은 다소 퇴조하지만 “5가”를 빼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진 설명: 기획토론회 “기본소득이 신앙이다” 출처: 노컷뉴스(2019-06-21)

“기본소득이 신앙이다”는 기본소득이 시대의 징후이며 그것의 실현이 시대의 과제이고, 종래에는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함축한다. 개신교의 이런 움직임은 일부 보수 교단과 교회가 보여준 행태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 주었다. 그것을 주관한 단체와 장소가 갖는 상징성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이 한 차례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독교는 적어도 아우구스티누스(354~430)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1224/25?~1274)에 이르는 수백 년간의 교리화 작업을 거친다. 이때 희랍철학을 비롯한 서양정신사의 고갱이들을 자기 안으로 들여온다. 기독교가 서양정신사의 보고라고 불리는 이유다. 우리의 선조를 비롯하여 동양에서 ‘서학=기독교’로 이해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양사상에서 그 어느 것이든 기독교와 무관한 것은 없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도 그 근원을 따지면 기독교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대한 배당이며,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의 근원을 따져보면 기독교적인 창조 신앙이 중요한 계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¹⁾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모든 사물과 모든 생물은 피조물이다.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신이 창조했으니 인간은 소유권(=사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시 24:1)

모든 것이 다 신의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이 창조한 생명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권리를 지닌다.

1) 신(여호와)을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기한다. 전자는 토착화신학의 영향으로 한국의 전통적 신(神) 개념과 가깝게 ‘하느님(천주)’, 후자는 유일신 개념을 강조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기본소득은 개신교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므로 ‘하나님’이라고 표기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마 6:25, 누 12:22)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고대 유대 사회에서 “히년”이라는 구체적 제도로 나타난다. 히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돌아온 후의 해, 즉 50년(49년이라는 주장도 있음)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히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 부채가 면제되었다.”²⁾

여기서 유의할 것은 땅과 집이 어떤 사정에 의해 팔렸더라도 히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나아가 히년이 되기 전이라도 땅을 판 사람이 원할 경우 산 사람은 이를 되팔아야 했다. 즉 ‘땅 무르기’를 할 수 있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히년제도가 오늘날에 다시 실시될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히년제도가 있다면, 앞서 인용한 “먹고, 마시고, 입고를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을 따라 “먼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점차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본소득을 알아가고 있으며 거기에서 ‘히년’을 떠올리는 것 같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최근의 신학 및 관련 논문들은 ‘히년’(혹은 안식년)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³⁾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에서도 “히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토머스 페인이나 헨리 조지의 사상은 기독교의 “히년” 사상과 연관이 깊어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신학적·신앙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성서의 다음과 같은 명령에 따르는 일로 여기는 것 같다.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NCCK 신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되기는 했으나, 올해 5월에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기본소득 관련 운동에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농민 기본소득추진국민운동본부에는 목회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농촌 사목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농촌의 열악한 현실은 곧 자신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실존과 공동선을 향한 신앙적 양심의 결합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이미 밝혔듯,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른 종교에서는 아직은 활발하지 않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2) 위키백과, 히년, <https://ko.wikipedia.org/wiki/%ED%9D%AC%EB%85%84>

3) 정용한(2019),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성서적 제안: 공공복음서의 히년과 하나님나라 운동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95집, 251-279쪽; 조혜신(2018), 「히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소고-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3(3), 263-294쪽

먼저 불교다. 2017년 3월 20일 불교환경연대 주최로 불교여성개발원 강당에서 ‘제4회 녹색불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주제는 ‘기본소득과 불교’였으며 하승수 당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유승무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유승무 교수는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승가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모든 조계종 스님에게, 생계 부담 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수행지원 보시금’ 성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출가자들도 양극화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스님의 경우는 수행은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몇 달 후엔 판이 좀 더 커진다. 2017년 7월 1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⁴⁾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54회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을,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그렇지만 이후로 불교계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는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법보신문(2019-11-04)에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 유승무 교수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불교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은 종단 내부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다.

가톨릭 쪽을 살펴보자. 『가톨릭 평론』 제4호(2016년 7월)는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룬다. 또한 같은 달 가톨릭 뉴스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한국대회를 적극적으로 취재한다. 그렇지만 이는 가톨릭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2016년을 계기로 크게 신장했다는 징표로는 보기 힘들다. 제16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대회가 한국의 ‘서강대’에서 열린 데 대한 관심표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후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신학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거론된 흔적이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가톨릭 쪽에서 다시 거론된 것은 최근이다. <가톨릭뉴스>는 최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배제된 데에 대한 우려 기사를 실고 있다(2020년 3월 26일). 그동안 잠잠하던 가톨릭의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 재등장하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가톨릭은 기본소득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개신교와 신학적·신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개신교에서 촉발을 하였으니, 가톨릭에서도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되리라고 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일신우일신”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일거에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했다. 종교계에서도 더욱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해본다. 외국의 경우는 종교계가 기본소득 논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4)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겸직한다.

추신: 이 원고를 마감한 이후에 뜻밖의 낭보(?)가 들려왔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부활절 서한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과 인간적·기독교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보편기본임금^{Universal Basic Wage}”의 도입을 주장한다. “보편기본임금”의 정확한 함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러 외신들^{*}을 종합해 볼 때, 교황의 서한은 “보편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로 보인다. 미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앤드루 양은 트윗^{**}을 통해, “와”, “게임이 바뀌고 있다”고 교황의 서한에 대한 놀라움과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황도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의 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토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확산세에 더해 교황의 서한은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혹은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https://www.forbes.com/sites/williamjeakle/2020/04/13/pope-francis-calls-for-universal-basic-income-more-participation-of-women/#64d9243c55f6>

<https://www.marketwatch.com/story/heres-what-pope-francis-said-about-the-global-economy-that-drew-a-wow-from-a-former-us-presidential-candidate-2020-04-12>

<https://www.americamagazine.org/politics-society/2020/04/12/pope-just-proposed-universal-basic-wage-what-does-mean-united-states>

**

<https://twitter.com/AndrewYang/status/1249359303317893122>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검색일: 2020-04-14)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서정희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2020년 1월 19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본소득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대개 정당의 명칭은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에 따르지만, 실제로는 명칭과 이념이 일치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본소득당은 당명을 이념이 아닌 포괄적 의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운동 방식의 포문을 열고 있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대회를 열기까지 짧지만 강력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2019년 8월 24일 기본소득당 창당을 위한 워크숍을 시작으로, 8월 27일 기본소득당 창당 발기인대회 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9월 8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거쳐, 11월 30일 서울 기본소득당 창당, 12월 1일 경기 기본소득당 창당, 12월 14일 인천 기본소득당 창당, 12월 19일 광주 기본소득당 창당, 12월 21일 부산 기본소득당 창당,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중앙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불과 148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낸 엄청난 일이었다.

이 엄청난 작업을 해 낸 기본소득당은 1월 19일 창당대회를 활기차게 치루어냈다. 퍼플민합창단, 펍수와 도라에몽 공연, 뽀빠스의 공연과 올리드의 공연은 젊은 기본소득당의 활기찬 분위기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기본소득당은 약 2만 명의 당원들로 이루어진 신생 정당으로서, 당원의 평균 연령이 27세인 젊은 정당이다. 선거철마다 거대 정당들은 생색내기용으로 ‘청년’들을 국회의원 후보에 극소수를 배치하거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미사여구로 포장된 일종의 허위광고를 배포하면서도, 정작 젊은 사람들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함께 숙고하려는 노력을 보



이진 않는다. 이런 암울한 현실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혹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진정으로 젊은 기본소득당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당 대표를 필두로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임원들, 그리고 평당원의 대다수가 젊은 기본소득당이 구성원 면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젊은 길을 가기를 그리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기존의 문법으로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거친 장애운동의 길에서 장애활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라고 기본소득당 역시 그 험난한 길 위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운동의 길에서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개혁을 도모하면서, 그 길에서 우리의 지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 및 세력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원 이슈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연대하며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길 기원하며,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자리에서 낭독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축사를 심는 것으로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동향 보고를 대신한다.





기본소득당 축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서정희입니다.

기본소득당 창당을 축하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창당은 한국 기본소득 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당 운동에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강남훈 대표님께서 해외에 계셔서 제가 대신 왔지만,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의 창당을 축하하고, 그 앞날을 기대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공통 분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넘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몫이고, 따라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득보장을 통해 사람들에게 시간, 자율성, 그리고 힘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존재하는 사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회보다 자유롭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생태 배당이라는 형태로 우리 앞에 닥친 환경 재난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어느새 우리 시대의 의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시기에, 위대한 사상이 그랬던 것처럼, 기본소득 정신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또 훼손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두 개의 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한편,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라는 이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서 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당의 창당을 축하하는 것은 그런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동료가 생긴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소득당의 창당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강남훈을 대신하여 서정희 운영위원.



위험사회에서 ‘기본소득’ 연대를 향한 또 한걸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법인 설립 총회&제8차 정기 총회 후기

김수연

LAB2050 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코로나19 사태로 공황과 불안이 전 세계를 잠식하는 가운데 ‘재난(코로나) 기본소득’이 위험사회의 대안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누적된 사회경제적 모순을 직시하고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내세워 왔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창립총회와 제8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 열렸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계획을 알리고, 2019년 진행했던 사업을 결산하며, 2020년 사업 계획과 함께 새로운 이사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후 위기, 극심한 빈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재난’ 상황에 맞서,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장 정책이자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의제를 이끌어 왔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총회

2014년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창립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네트워크’ 창립 총회에서는 ‘네트워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으로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립 총회에서 검토한

안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의장 선출(임시 사회: 안효상 발기인), 설립취지 채택, 정관 심의, 출연 내용, 이사장 선임, 임원 선임 및 임기 결정,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입니다.

오는 3년 동안 ‘네트워크’를 이끌 이사회의 구성은 강남훈 이사장,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안효상, 이상 5명의 등기이사, 곽노완, 김수연, 신지혜, 유보선, 이 건민, 이지은, 이상 6명의 비등기이사, 김태호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주요 사업 목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이론정책연구 및 교육
2. 국내외 사회정책 및 기본소득 단체 교류
3.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 및 기본소득 관련 캠페인, 매체 발간 등 홍보

위의 세 가지 주요 사업 목표에 따른 세부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이론정책연구 및 교육 사업은 월례세미나,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학교, 기획 강연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내외 사회정책 및 기본소득 단체 교류 사업은 국내 보편적 복지국가 지지단체 및 지지자 연대 사업, 사회 정책 및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소식 교류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 사업, 마지막으로 조직사업(2020년 회원의 밤 개최, 2021년 정기총회 준비 등)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박선미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익적 실천을 하는 단체이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즉 법적 인격이 되는 것으로 ‘법적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중앙정부나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등의

지원 사업에 ‘네트워크’가 법인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되면서 BIKN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에게도 ‘네트워크’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희소식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회가 주어지면서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연말 정산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박선미 사무국장은 “이러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권한은, 네트워크의 재정적 안정과 회원 확대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반겼습니다.

오랫 동안 ‘네트워크’ 정기 총회에서 사업계획으로 제출된 사업인 만큼, 모쪼록 법인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19년 감사의 공로패 시상,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제8차 정기 총회

본격적인 제8차 정기 총회에 앞서 2019년 ‘네트워크’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공로패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조성희, 신종화 두 분께 공로패를 시상했습니다. 두 분은 기본소득 의제가 확산되도록 뜻을 모으고, 경제적으로나 활동적으로 ‘네트워크’의 성장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일정이 맞지 않아 공로패를 받지 못한 충남연구원의 박경철 책임연구원이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농촌 사회와 농촌 개발에 대한 오랜 관심과 연구를 통해 전라남도, 해남군, 부여군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마오쩌둥이 농촌에서 혁명의 바람을 일으켰는데 나도 농촌에서 (혁명의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2시 30분부터 233명이 출석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제8차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찍이 온라인으로 의결할 안건을 공유하고 숙의할 시간을 두

어서(2020년 1월 21일~2월 3일) 신속하고 빠르게 총회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온라인의결 223명, 2월 22일 총회에서 직접 의결 6명 등 총 229명이 의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1. 2019년 사업평가 및 사업수지결산 승인의 건(찬성 221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안건 통과)

안건2. 2019년 회계감사보고 승인의 건(찬성 222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안건 통과)

안건3. 제3기 임원 선출의 건

선거인 392명 중 230명의 찬반 투표 결과, 이사장 후보 강남훈, 이사 후보 박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 감사 후보 김태호 이상 13명의 임원 후보 전원 당선.

안건 4. 2020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의 건(찬성 221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안건 통과)

안건 5. 정관 변경의 건(찬성 222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안건 통과)

정관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와 제12조(임원의 선임)에 변경.

이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다시 한번 비상식적인 현대 사회의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000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가 강제했던 촛촛했던 사회적 거리로 인해 충분한 여유와 휴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아가 누군가는 재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 큰 생존의 위협을 받고 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음을 목도하

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할 이유에는 자본주의 사회 기저에서 작동하는 폭력도,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했던 재난도 있을 것입니다.

『폭염 사회』와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의 저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소득 사회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 왔던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위협이 두드러질 때마다 ‘기본소득’이 왜 당신과 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상상의 미래를 펼치고 현실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3월 10일 ‘네트워크’가 온국민 코로나(재난) 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일부로 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기본소득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규모의 조건 없는 현금 이전, 즉 온국민 코로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뿐 아니라 이번 재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다른 여러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충분한 자유 시간의 보장, 공공의료와 돌봄의 확대가 포함된다. 비상사태는 가라앉아 있던 것이 떠오르는 일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우리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는 일이기를 바라며, 그 속에 온전한 기본소득이 있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원재

LAB2050 대표

내 고향은 서울이다. 어린 시절 자랐던 동작구 대방동에 아직도 산다.

하지만 내 첫 기억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 있다. 국립한센병원이 있는 이 섬은 내게는 제2의 고향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그 곳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국립한센병원에 발령받은 공무원이었다.

당시 병원의 공식 명칭은 ‘국립나병원’, ‘나환자’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문둥이’라고 불렀다. ‘아이 피를 마시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해서, 문둥이가 어린아이를 잡아간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돌던 시절이었다.

병이 진행 중인 이들보다, 다 나은 이들이 더 많았다. 진행 중이라도 약을 복용하고 치료하면서 전염성은 이미 사라진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병이 진행 중일 때 손상된 외모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은 이들까지도 문둥병 환자라고 불렀다.

소록도에서 살았다고 한센인들과 매일 어울려 지냈던 것은 아니다. 섬 안 병사 지대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다. 병원 직원 등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병사 지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 한센인들을 마주치는 일은 가끔 부모님을 따라 병사 지대를 방문했을 때 뿐이었다. 그것도 병이 진행 중이거나 전염성이 있는 상태인 분들은 전혀 만날 수 없었다.

문드러진 손,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 사실 두려웠다. 옮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가가기 어려웠다. 내가 어려서, 약해서 더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

어머니는 한센인들을 만나면, 문드러진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사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참 떠올리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따라 병사지대의 성당에 봉사하러 갔다. 미사가 끝난 뒤 문 앞에 서서 환자분들에게 간식을 나누어드렸다. 그런데 그 어린 제 손을 한 환자 아주머니가 ‘문드러진’ 손으로 꼭 잡으셨다. 아주 온화한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라고 말씀하셨다.

한센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시대였다. 그 어린 제 마음 속에도 이미 ‘나는 돕는 사람이고 저 분들은 도움받는 사

람이야.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저 분들은 축복받는 사람이야. 저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실 거야'라는 생각이 딱딱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분들도 나를 축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축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은 누구라도,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려는 마음, 도움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 같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사람이라도,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늘 도움받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어쩌다보니 나는 사회생활을 늘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하게 됐다.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여시재 기획이사로, LAB2050 대표로 직장을 바꾸면서도 하는 일의 본질은 통 바뀌지 않았다.

닷컴버블 시대 디지털경제를 취재하고 글을 썼다. 그 뒤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고 교육도 했다. 대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CSR)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를 들여다보기도 했고,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가치롭다는 마음 속 원칙은, 어떤 좋은 제도로도 구현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기본소득은 그러던 중 발견한 마법 같은 솔루션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없이 같은 액수의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정말 똥판지 같이 들리지만, 누구나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물론 기본소득제는 효율적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효과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 정책

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핵심은 사실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아이디어에 있다. 그 가치를 모두가 인정받고 또 인정하면, 세상이 좀더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나는 지금도 고향인 서울 동네에 살고 있지만, 가끔은 이 동네가 낯설다. 어릴 적 익숙하던 동네가 전혀 다른 곳처럼 변해서다. 두부 공장 자리에는 신축 빌라가 들어섰다. 집 장사를 하려는지 층은 높고 칸은 많아 보인다. 두부를 팔던 구멍가게를 허문 자리에는 영어 학원 건물이 들어섰다. 산동네 무허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식구들이 투닥거리는 소리까지 골목길 밖까지 새어 나오던 출입문은 자동 경비 시스템이 지키는 자동문으로 변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달라졌다. 각자도생하는 서울 사람들의 평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파트와 재테크와 아이들 사교육으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아파트를 살 수 없고 재테크를 하기 싫고 아이들은 놀게 하고 싶다면, 동네에서 어울리기도 쉽지 않다.

동네가 동네다워지려면, 사람들이 좀 더 비슷해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비슷해져야 더 다양해진다. 아파트와 학원 대신 다양한 취미와 여행 이야기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엇비슷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래서 서로 더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힘, 그게 경제적 평등이다. 기본소득은 그 힘을 줄 수 있는 제도다. 내가 기본소득과 만나 연구를 하고, 글과 방송으로 알리려 하고, 정치를 통해 제도로 만들려고까지 나서게 된 이유다.

국유화와

‘기본소득 송그리당당’

김찬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나는 젊은 시절 ‘사적소유의 철폐’를 지지했다.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구체적 내용은 없는 것이었는데, 칼 맑스의 유명한 책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진보적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표어 같은 구실을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유 형식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전인민적 소유’ 등이었는데, 결국은 ‘국유화’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기 어려웠다.

결국 사적소유의 철폐는 국유화였던 것이다. 소련식 사회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페이비언협회(Fabian Society)의 웹(Webb) 부부가 썼다는 영국 노동당 당헌 4조마저도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the common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국유화 강령’이라고 이해하였다. 훗날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New Labour)이 폐기하긴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도 의문이 많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도 국유화가 있는데 그 국유화와 이 국유화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당시의 ‘정답’은 국유화를 하는 국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성격이 다르면 같은 국유화라도 다르게 작동이 되는구나. 찝찝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에 열광하는 나를 보면서 이 찝찝함이 매우 뿌리 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에 관한 글은 보이는 대로 읽었던 것 같다. 프리마코프, 야코블레프, 메드베제프, 그리고 조금 결이 달랐던 리가초프. 이런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걸 보니 페레스트로이카를 좋아해도 많이 좋아했던 것 같다.

1989년에 베를린장벽이 붕괴될 때 약간 양가적인 느낌을 가지면서도 좋아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페레스트로이카 세력이 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같은 해에 일어난 ‘천안문사건’에서는 등소평을 지지했던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뭐 나만 그랬을까?

그런 뒤죽박죽을 말끔히 정리해 준 것은 1991년 소련의

쿠데타였다. 쿠데타를 벌인 부통령, 내무장관 등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확인하면서, 그 중의 누군가는 쿠데타 중에 술을 처먹고 취해 있었다는 보도 등을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해 아주 조금 남아있는 애정마저 식는 것을 느꼈다. 꿀 보기 싫은 엘친이 탱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니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졌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안’은 잊고 살았다. 100년 이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 보려했던 대안이 허상이었는데 아둔한 내 머리로 무슨 대안을 생각하겠는가? 마음만 고이 간직하고 살자.

오랜 세월이 흘렀다. 어디선가 ‘기본소득’이란 말이 들려왔다. 우리는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당시 잘 모르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딱 그 만병통치약처럼 들렸다. 과거 ‘CA 파’라는 운동조직이 모든 슬로건 끝에 “제헌의회 소집하자!”라는 말을 붙여서 ‘제헌의회 송그리당당’이라는 게 그 소재로 쓰이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딱 ‘기본소득 송그리당당’이었다.

에이, 국유화 하다가 이제는 기본소득이냐?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첫 반응은 이런 것이었다. 이제는 ‘기본소득 송그리당당’이 아닌 것을 잘 알지만, 지금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연하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것이 만병통치약처럼 들리지 않도록 경계한다. 확신할 수 없는 기본소득의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않으려고 한다. “could be! 그럴 수도 있다.” 조심스럽다.

기본소득을 몇 년 째 알아가고 공부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은 나에게 어떤 것일까? 아마도 돌아가신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의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다.

기본소득보장은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주의적 도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가?In what ways can a guaranteed basic income be considered

part of a broad socialist challenge to capitalism?

지구의 침몰로 귀결되고 있는 파국의 체제인 자본주의를 대체할 어떤 사회. 그 사회로의 ‘전환’에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관심이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세상을 바꾸지 않고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기존의 재원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에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실용적 이유를 모르지 않지만, 도대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걸 뭐 하러 하는 것인가?

기본소득은 아주 작은 것일 것이다. 그 작은 것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의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를 앞당기는데 기여한다면, 나는 계속 기본소득 옆에서 있을 것이다.

서점에 놀러오세요!

서회원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키케로-

2017년, 10년 가까이 다니던 시민사회단체 일을 정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다. 퇴사 몇 년 전부터 독립서점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고, 이 서점에 둘 책은 3가지로 정했다. 기본소득,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책이다. 서점의 역할을 하면서 이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만들어서 먼 훗날에는 대안대학 형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일로 잠시 미루어 두었다.

퇴사 후 기본소득학교를 개설하려고 뜻 맞는 사람들과 몇 차례 기획 회의를 거쳐 강사진을 꾸려서 강좌를 열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몸담았던 당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들었지만, 그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에 관해서 늘 가졌던 고민은 나를 에피쿠로스 철학으로 안내했고 탐독의 시간을 가졌다.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회적 행복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본소득이 참 고마웠다.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노예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탄생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틀림없다. 노예들이 생산을 책임질 때 그리스 시민들은 ‘시간의 기본소득’을 부여받았다고 상상해 본다. 그 여유의 시간에 시민들은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들의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듯이 나는 동시대 사람들과 꽃이 피는 봄에는 꽃을 완상할 여유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싶다.

사회운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실현하기 위함이다.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할 때쯤 후배에게 ‘기본소득은 나에게 마지막 사회운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기본소득과 민주주의를 결부시켜 공부하고 활동해 나가고 싶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만큼 많은 게 민주주의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은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지 여기서
밝히기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지만, 기본소득과 함께 좋
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몇 년 뒤, 부산에 있는 어느 작은 독립
서점에 있을 만한 풍경을 그려본다. 하나의 그림은 어떤
사람이 기본소득 책을 고르면서 나와 이야기하는 풍경.
또 하나의 그림은 좋은 강연과 강좌 열어 강사를 초청하
고 시민을 초대하여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풍경. 다른
그림은 낮에 꽃차 한 잔 시켜 놓고, 기본소득 책을 읽으
면서 졸고 있는 손님. 마지막 그림은 서점이 장사가 안
되어서 서점을 접어야 하나? 술 마시면서 고민하는 나!

김교성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Q 기본소득은 ‘젠더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A

‘개인’ 단위로 제공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특별한 기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해 왔습니다.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을 가족 내 재생산과 돌봄을 담당하는 비독립적 구성원으로 취급하면서, 동일한 사회적 지위와 자격, 권리 등에서 배제해 왔습니다. 단지 계급 문제에만 천착해 온 복지국가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권리의 기반과 급여수급의 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전환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전업주부와 시간제 여성 근로자에게 전 생애 기간 동

안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유급노동과 수급자격을 분리하여,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간 진정한 선택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 제공자와 같은 전통적인 ‘성별분업’ 프레임을 종식시키고, 돌봄노동에 대한 정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 줄 것입니다. 동시에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협상력’을 확장시켜, 가구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자율성’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의 자유, 고용과 결혼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자치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분배’와 문화적 ‘인정’ 질서의 변화를 통해 젠더 위계질서를

교정하고, 모든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여성의 돌봄 의무와 무급노동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단념시켜, 기존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가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이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입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억제되거나 방해되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동등한 기회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시간 여성의 일할 권리를 주장해 온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보 자체가 한 번에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걱정입니다.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유사한 우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미트랙(*mommy track*)의 ‘공고화’ 문제는 다른 영역의 정책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지, 기본소득 실행의 직접적인 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젠더평등 전략으로 위치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노동시장과 돌봄노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성별 차별금지 법제화 과정을 통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관대한 부모휴가제가 실현된다면, 기본소득은 분명 개인의 사회권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젠더평등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완화시켜 노동의 범위를 임금노동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으로 확장시키고, 소득, 자산, 노동, 혼인관계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율성과 협상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구상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젠

더평등이라는 거시적 사회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함께 어떤 정책 패키지를 구축해야 하는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젠더 부정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가운데, 기본소득이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구상’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
#004

바
스
터
일